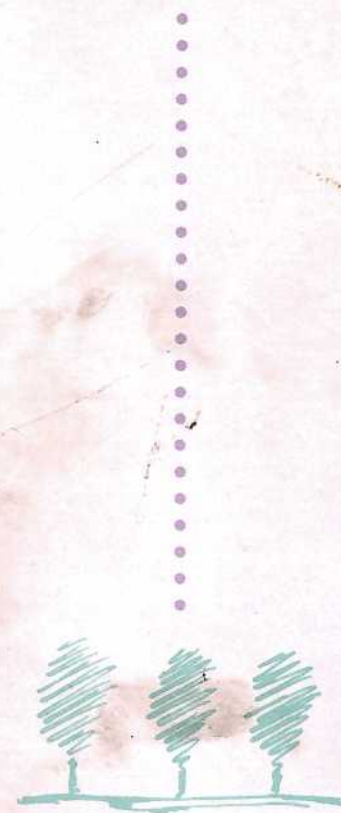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2

인권하루소식

합본 Ⅱ호
(제101호~200호)



1994. 10

인권운동사랑방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인권하루소식

합본 Ⅱ호 1994. 10

인권정보자료실
R1.1.2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94년 4월

(제135호 - 제155호)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재독 통일운동가 이영빈목사 귀국 무산될 처지

안기부 입국불허 통보 이영빈목사 "4월 4일 입국 강행하겠다"

30년간 독일에 거주하며 반독재운동과 남북한 기독교인의 교류를 주선하는 등 통일운동을 해온 이영빈 목사(68) 내외의 귀국이 당국의 거부로 무산될 처지에 있다.

'이영빈 목사·김순환 선생 귀국추진위원회'(회장 김지길 목사, 이목사 귀국추진위)는 안기부에서 "그간 북한을 왕래하며 불온한 활동을 전개한데 대한 반성문을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지 않는 한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31일 오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목사 귀국추진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목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협의회'(대표 조화순 목사)는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문민정부의 통일외지의 시금석이 될 이목사의 귀국에 대한 현정부의 구태의연한 거부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정부가 개혁의지를 회복하여 이목사의 안전귀국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귀국추진위의 송병구 간사에 따르면 이목사는 입국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강제출국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4월 4일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목사는 지난 88년에 수원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보름동안 머물렀다 별일없이 독일로 돌아갔으나, 89년 공안정국과 함께 정부측 방침이 바뀌어, 91년 7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주최의 '회년을 향한 기독교 평화통일협의회' 참석차 입국했다가 김포공항에서 강제출국당했다.

김영삼정부 출범후 80년 광주항쟁을 주도한 뒤 미국으로 망명한 윤한봉씨등 과거 독재정권에서 기피인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귀국하였으나 안기부가 전력을 문제삼아 입국을 거부하기는 처음이다.

가수들 '희망새' 석방 요구

민가협 제29차 목요집회

'희망새' 석방과 예술창작 자유보장을 요구하는 민가협 제29차 목요집회가 3월 3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민가협은 일주일 전 목요집회에 참석한 뒤 불법연행된 '희망새' 단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3월 24일 연행된 이윤정씨의 어머니 김순열씨는 "국가보안법이 죄없는 사람을 잡아가는 법이란 걸 이제서야 알았다"며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눈물로 호소해 모인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

겁게 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영남, 류금진, 노래공장 등 민중가수들이 참여해 "희망새"의 노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민족이 하나됨을 염원했다"며 '희망새'가 지은 '희망새', '아침은 빛나라' 등을 직접 부르며 단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지킴이' 모집기간 연장
 성폭력상담소 4월9일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는 4월 29일부터 시작하는 제2기 지킴이 교육과정 모집기간을 3월 31일에서 4월 9일까지 연장한다(문의처 02-576-7128).

'지킴이'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위기센터를 지키는 자원봉사자이다. 또한 성폭력상담소는 3월 31일부터 '제5기 상담원 예비여성학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알림

- 미군범죄 피해자 증언 및 '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식
 - 일시 ; 4월 1일(금) 오후 5시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전화:744-1211)
-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제1회 기사연 통일마당
 - 일시 ; 4월 1일(금) 오후 1시30분-7시
 - 장소 ; 연세대 장기원기념관
 - 국제·군사·정치·사회등 6개분야 주제발표 및 토론
- 경실련 공청회-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 일시 ; 4월 1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홍사단
 - 사법제도발전위 개혁안, 국민을 위한 것인가(정종섭 건대 교수) 등 3개주제 발표 및 토론(전화:766-5393)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창립5주년기념 심포지움
 -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일시 ; 4월 2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 고려대 인촌기념관(1 및 7 회의실)
 - 인권(문민시대 인권운동의 과제, 서준식)·공안·사법·여성등 9개 분야 주제발표 및 토론(전화:740-4596)
- 고 김남주시인 49재 및 추모의 밤
 - 49재-4월 2일(토) 오후 2-4시, 종로 3가 대각사
 - 추모의 밤- 3일, 대구 '예술마당 술'(053-652-3853)
- 바로잡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월 31일자 '알림'란의 민가협 목요 집회 장소는 '탑골공원앞 2시'이므로 바로잡습니다.
 - '함기평'씨는 '함평기'씨로 바로잡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월분 총목차(113호-134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3/2	113	1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씨 7년 김은주씨 집행유예 선고/ 「한국노인의 전화」 3일 창립, 노인관련 종합정보 상당·제공 / 예술행위사전심의 반발, 5명 구속된 극단 「희망새」/ 빨치산의 딸 지현이를 도읍시다
		2/3	「인권하루소식」 2월분 총목차(97호-112호)
		4/5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21-27일)
3/3	114	1	가평군 두밀리 분교 폐교에 지역주민들 반발거세, 학생들 여전히 분교로 등교하여 자원교사와 학습중/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일본전쟁책임 공식사죄 대책수립 요구, 태평양유족회
		2	법무부 행정법 대폭적인 손질/ '성희롱 항의' 시위, 서울대 성희롱대책위/ 국제인권소식:아시아 선교대회 서울에서 열려/ 성차별, 인권, 개발등에 관한 워크샵, 방콕/ AI 실종, 정치적 살인종식 캠페인, 콜롬비아 첫 대상국가로 선정
3/4	115	1	“가정민주주의는 평화·민주주의·평등의 기초”, 대한YMCA연합회 '사회변화와 가정의 역할' 토론회/ 미군 또 택시기사 수감채워 강제연행, 2일 동두천/ 여성에 대한 정치적 살해·실종 반대 캠페인, AI 세계여성의 날 맞아
		2/3	주·일간지 기사색인
3/5	116	1	원진직업병환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명 또다시 직업병 판정, 지금까지 335명
		2	경찰, 학원사찰·프락치 공작기도, 4일 한총련/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 국보법 철폐', 민가협, '국보법은 기본권 제한 범주 넘어', AI 한국지부/ 여성인신매매, 전쟁피해문제 회의, 동경
		3	단체탐방 11-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3/8	117	1	정신대문제 다룬 '특별보고자 임명' 올해 무산, 유엔 인권위원회/ 임금차별 철폐, 지방의회 여성 20% 진출등 결의, 세계여성의 날 기념 7차 여성노동자대회
		2/3	94년 여성노동자선언/인터뷰-국제인권봉사회 부소장 마크 톰슨
3/9	118	1	시민들이 직접 재판 감시한다, 이순심씨 재판 공동방청단 모집중/ 정든 학교, 울타리 너머로만 쳐다봐, 두밀리분교 폐교/ '여성의 권리보장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AI 한국지부
		2	AI, '새정부에서도 인권침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노총/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남북대화 전진위해 국보법 철폐 요구, 북한 외교부/ 신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인권침해(AI 보고서 목차)
3/10	119	1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50차 인권위원회 3월 11일 폐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전해투/ 사과원 관련 문용찬 집유
		2	국제인권소식: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인권단체 공동대위, 제네바 회의참석/국제법률가 협회 올해 국보법 조사단 파견키로/국보법 인권위에서 4번째 거론돼/ 국제무대에서 부끄러운 남북한 인권공방
		3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알라 라소 선출
3/11	120	1	컴퓨터 통신에 잇단 국보법 적용/ 여성상담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중, 여성의 전화/ 부산, '노동 인권협회' 추진, 법률상담·의료서비스 제공
		2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 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인권을 주제로 한 컴퓨터통신 늘어나, 특정주제에 대한 의사표현·교류의 장
3/12	121	1	PC통신 국보법 적용에 동호인단체 공동대응하기로, '통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여성학 공개강좌 3.31-5.12, 한국성폭력상담소/ 정대협, 국회내 정신대특위 설치요구/ 국보법 폐지촉구, 불교인권위
		2	단체탐방 13-천주교 인권위원회
3/15	122	1	대법원 노중선씨에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유죄'/'고난' 새대표에 신경하 목사/ 정신대 할머니 사망, 관련단체, 대통령 방일때 '진상규명·배상' 요구
		2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울들어 3명제/ '정치범 석방' 단식농성, 재일단체, 오사카/ 주요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3/16	123	1	각지에서 3-8 여성의 날 기념행사 열려, "여성인권 보호,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여성간부교육' 실시, 여성민우회/ 두밀리분교 폐쇄, 학생들 마을회관에서 공부

「인권하루소식」 2월분 총목차(97호-112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3/16	123	2	이영빈 목사 귀국추진, 「고난」 등/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이 노산관계 안정의 지름길, 전해투 시위/ 주요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3/17	124	1	사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 민가협 9차 정기총회, “양심수 전원석방, 국보법 철폐” 다짐, 상임의장에 서경순
		2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당사자 번역/ 정치적 살해 반대 캠페인, AI 한국지부/ 전쟁범죄 시인, 법적 책임, 정대협 수요시위/ 국제인권소식-「검열반대국제센터」, 선거시기 언론활동 종합보고서 발간/ 세계인권단체 총람 발간, 캐나다 Human Rights Internet
3/18	125	1	「여연」 94년 여성운동상에 홍미영씨 선정/ 인터뷰-홍미영씨
		2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킨다”, 서울·부산등 6개지역 당직변호사제 실시중/ 아내구타의 심각성 함께 공유, '이순심 석방 방청인단'/'조작간첩 장기수 사레발표, 27차 민가협 목요집회
3/19	126	1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김영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해고자, 출근투쟁·텐트농성 확산, 전해투/ 정신대 고 전금화씨 장례식/ 일빛출판사 이성우사장 연행
		2	단체탐방 14-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3/22	127	1	이순심씨 석방위한 방청인단 결성/ 우조교동기 일일주점 열려/ 대구지역 여성단체 첫 여성의 날 기념행사
		2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사회문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와 인권' 정책강좌/ 「인천여성의 전화」 개원후 활발한 활동/ AI 한국지부 사형제도 폐지운동
3/23	128	1	원진노동자 14명 새로이 직업병 판정, 울들어서만 32명/ 4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씨 첫 공판
		2	양심선언 조정희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육군교도소/'일본 전쟁책임 확실화', 정대협·전국연합/'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경험 나누기, 한·일 법률가 교류/'이제는 여성이 정치에 참가해야 할 때', '여성대회' 계기로 20% 할당제 도입 요구
3/24	129	1	학대당하는 아동 '아내구타 가능성 높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일본 시효부작용조약 가입해야, 정대협·전국연합등/ 힘출판사 압수수색, 대표연행
		2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었을 것', 문국진씨 신체감정서/ 조정희씨 단식해제/ 국제인권소식:EU, 외국이민자의 동등한 권리행사에 관심 가져/ 유럽, 인종주의 희생자 증가/ '재일 한국정치범 석방 전후처리 해결 요구', 재일인권단체
3/25	130	1	'미군범죄 신고센터' 4월 1일 개설, 전국 13개 지역/ 희망새 단원등 6명 영장없이 불법연행, 시민항의에 폭언으로 화답
		2	'장애인의 지하철 무료이용 가능한가', 124개역 편익시설 실태조사/ '여성고용악화' 인식공유, 여성지도자·정무장관 간담회/ PC통신 김형렬씨 공판연기/ '산재없는 세상만들기' 그림전, 산업보건종합센터 건립기금 마련 위해/ 사노맹 재건기도자 집유/ 부산불교인권위 1주기 법회
3/26	131	1	경찰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이내창 추모회 정기총회
		2	매맞는 여성의 피난처 '쉼터' 7주년 행사(쉼터 이용자 통계분석)/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 양심선언 이종수씨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
3/29	132	1	김영삼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심포지움, 4월 2일/ 제10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의식 20% 할당제 주장
		2	여성의 전화 93년 6천7백59건 상담, 아내구타 30%/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 15명 불법체포 고발, 민가협/ 경찰 또 불법연행, 감금, 역사노사건 4명/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할 터,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 총회
3/30	134	1	“장애인운동을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으로”, '장애인 인권-어디까지?'/ “혁사노조직은 오래 전에 해체되었다”, 함평기씨 밝혀/ AI, 「희망새 단원은 양심수”
		2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1달째 학부모교사 두밀리국교 학생 교육
3/31	135	1	노태훈 항소심재판부 '아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의 과제', 한·일 합동심포지움/ 역사노사건 4명 구속, “잠 안재우고 수사중”
		2	국제인권소식:인터뷰-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50차 인권위원회 평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김삼석 남매 고문사태 다뤄/ 아시아학생연합,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준비회의 가져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역사는 특수상황이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승주 외무장관의 빈 세계인권대회 기조연설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의 법조개혁안은 ‘국민에게 서비스제공’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정종섭 변호사는 1일 홍사단강당에서 가진 경실련 시민입법위 공청회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재판의 부당성과 법원의 독립성 △법원의 관료화 △법원의 전문성 등을 꼽았다. 이번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에서 “영장실질 심사제도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교수는 본질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법조인의 양적증가가 절실하며 법조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 참여·감시제도와 언론의 감시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병룡교수가 ‘개혁시대와 국민을 위한 사법’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1백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 토론자에는 강경근 시민입법위 간사, 이인계 민자당의원, 정기호 민주당의원, 유선호변호사, 양정자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한상호부장판사 등이 함께했다.

민우여성학교 개설 한국여민회

「한국여성민우회」(대표 이경숙등 3명, 한국여민회)가 ‘민우여성학교’를 4월 1일부터 분당(분당보건소), 4월 7일부터 구로.양천(신정6동 사무소), 강남.서초(주식회사 골드스톤), 서대문.은평(홍제동 소망교회) 지역등 4개지역에서 연다. 민우여성학교는 여성이라

는 이유로 겪게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할 목적으로 열린다.

이경숙(한국여민회) 등이 말하는 ‘여성문제란 무엇인가’와 각지회 대표들이 진행하고 분반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열린가정, 평등가족’ 등의 주제가 공통으로 개설되고 ‘쓰레기는 자원이야’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

미군범죄 신고센터 정식발족

‘미군범죄 신고센터’가 이우정 의원, 박순금씨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일 기독교회관에서 개설회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신고센터 개설회는 미군범죄 피해자인 한창열씨와 김국혜씨의 동생 김득인씨가 참가하여 한미행정협정이 미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재판권 행사를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신고센터에서는 미군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의 신원확인, 목격자와 증인의 확보, 즉시 미군범죄 신고센터와 경찰서에 동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한국정부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 김남주 49재 추모의 밤 서울 대각사, 대구 민예총

지난 2월13일 타계한 김남주시인의 49재가 2일 오후 2-4시 종로3가 대각사에서 열린다. 49재가 끝난 뒤 민족문학작가회의를 중심으로 김남주시인 추모사업회 준비모임을 갖고 △시비 건립 및 묘비제막식 △김남주시인 문학상 제정 △김남주 문학관 건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부는 3일 ‘예술마당 술’(053-652-3853)에서 고 김남주시인 추모의 밤 행사를 갖는다.

알림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창립5주년기념 심포지움
 -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일시:4월 2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고려대 인촌기념관
 - 인권(문민시대 인권운동의 과제, 서준식)·공안·사법·여성등 9개 분야 주제발표 및 토론(전화:740-4596)
- 통일맞이 발기인 영화모임(영화명: 씬들러 리스트)
 - 일시:4월 6일(수) 오후 7시/장소:대한극장
 - 관람신청:4월 4일(월) 오전 11까지, 입장권 교부; 같은 날 오후 3시-오후 7시
 - 자격:통일맞이 발기인 입회자 및 새 발기인 모집한 사람
 - 문의처:02-744-07145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드디어 오늘 발간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 발행했던 <인권하루소식>을 한편의 책으로 묶어 발간되었습니다. 총 340쪽의 합본호에는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머리글 ‘김영삼정부 1년의 인권’ 등이 실렸습니다.

값 : 1만 5천원

구독료 납입종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

단체탐방 15 /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종로 5가를 걷노라면 어깨를 끼고 노래하고 외치며 종로로 진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대학로에서 시작된 행렬이 종로 5가로 접어드는 좁은 길에 들어설 때면 창문을 두드리며 피켓을 들고 합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기독교회관 7층에서 농성을 하는 양심선언자나 양심수의 가족들이거나 했던 그들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오래 기다리던 비를 맞는 사람들의 탄성과 같이 메아리 치곤 했다. 그렇게 항상 시대의 고통과 억울한 사연을 안고 찾아드는 사람들에게 피난처와 싸움의 자리를 제공했던 곳이 바로 기독교회관 7층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이하 한교협인권위)이다.

한교협은 6개교파(성공회·구세군·감리교·기독교장로회·예수교장로회·복음교회) 1만2천여 교회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이다. 의결기구로써 총회가 있고 실행위원회와 18개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18개 위원회 중에 특별위원회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권위원회이다. 한교협이 24년에 생겼고, 인권위원회는 74년에 만들어져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인권위에는 회장(오충일 목사),사무국장(김경남목사), 사무국(황필규목사, 강해영간사)과 광주, 군산, 대구등 전국에 10개의 지역인권위원회와 두고 있다. 각 지역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위원은 전국적으로 6백여 명에 이른다.

한교협인권위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은 말 그대로 감감한 ‘밤’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독재, 삼선개헌, 민청학련사건 등 입을 열기에도 귀를 기울이기에도 모든 것이 두렵고 막힌 상황이었다. 이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같이 펼친다는 성서적 입장에서 사회정의를 외치고 실천할 권리를 보호하는 ‘도피성’, ‘성역’의 역할을 하고자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인권위원회와 역사를 같이하는 대명사 ‘목요기도회’는 엄격한 언론통제의 상황속에서 재야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이었고 인권침해사태가 호소되고 논의되는 장이었다. 김영삼, 김대중, 함석헌 등

70-80년대 당시 대표적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 상황에 대해선 ‘호의’라 할 수 있는 <인권소식>이 매주 발행되어 성명서와 농성소식, 양심선언 등 당시로서는 어느 매체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소식들로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풀

이제는 목회자 개인의 운동이 아니라 교인전부의 운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주었다. 그 <인권소식>이 92년 3월부터는 민주사회를 향한 인권전문지를 선언한 <월간 인권>이다.

목요기도회를 마치고 거리로 나서던 오래 연행되어 별을 달게 된 수많은 목사님들, 경찰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성역이었기에 농성자들과 양심선언자들의 발길에 문턱이 없던 곳, 반정부투쟁과 인권옹호가 하나였던 시간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의 목격자이고 당사자이고 해결사였던 곳, 그래서 인권운동의 대명사격으로 자리잡았던 이름……. 그만큼 현재의 고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먼저 각 운동단체들이 많이 전문화되고 자기고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과거에 밀려들고 갑자기 터지는 사업들을 뒷바라지 하던데서 벗어나서 사업의 선명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한교협인권위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인권운동을 하는 목사라면 빨갱이로 치부되고 구속등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전교인을 이끌고 나가는 싸움보다는 독자적이고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야 했던 상황이 목회자로 하여금 홀로 십자가를 지는 활동을 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예언자로서 활동하는 목회자 개인의 운동이 아니라 교인전부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각 지역인권위를 중심으로 인권강좌등을 개설하고 의식과 활동을 공유하는 작업등을 계획하고 있다. 70-80년대의 한교협인권위의 활동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게서 쏟아지는 기대와 비판에 부응하는 것이 무척 힘들지만 목회자의 운동에서 전교인의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한교협인권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교회협의회(CCA), 미국(NCC USA), 일본(NCCJ)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와 지원을 받았던 일들이 큰 힘이 되었던 만큼 국제연

대활동의 결과 양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셋째, 현재 한교협인권위의 고정적인 사업으로는 6월의 인권선교정책협의회, 12월의 인권주일 행사, 재소자겨울나기사업, 일상적인 양심수·장기수후원사업등이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사업들(재일동포 인권문제와 러시아 타슈켄트 해외동포문제, 사형제도폐지운동 등)에 힘을 모을 생각이다. 한교협에는 인권위원회 말고도 특별위원회로써 여성위원회, 노동자·농민 선교위원회(URM)가 있어 여성, 노동자, 농민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전념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007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숨막히게 전개했던 빛의 구실로써의 무용담(?)을 많이 듣고 싶었지만 그 추억이었던 분들은 하얀 머리에 굵은 눈썹을 자랑하며 사무실을 바쁘게 누비고 계셨다. 그분들에게 묻혀져 있는 고난의 이야기를 덕분에 우리가 지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농성자들과 함께 먹고 잘 때, 인간이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간다고 느껴지는 사람들과 고난을 같이하고 있다는 느낌이 올 때 가장 큰 위로와 보람이 된다는 목사님의 얘기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넘쳐 흐르기 전까지 한교협인권위원회가 곳곳하게 존재할 것 같아 이 일에 함께 하는 인권단체들이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관계속에서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묻어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137호는 4월 6일(수)에 발행됩니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인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데 주된 장애물이라고 인정되는 국가보안법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92년 인권이사회>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지난 3월 28일 검찰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1월 4일 안회권 검사가 피의자 김동철(37)씨의 옆구리 등을 수차례 걷어차 김씨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10늑골 골절상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한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오던 터에 인권옹호직무에 임하고 있는 검사가 피의자를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미한 징계

처분에 그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는 지난 2월 15

재독통일운동가 이영빈 목사 귀국 무산 안기부 '각서' 요구에 '귀국추진위' 거부

독일에서 통일운동을 벌여온 이영빈목사 내외의 귀국이 무산되었다. 「이목사 귀국추진위」(대표 김지길 목사)에 따르면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각서를 쓴다면 고려해보겠다는 안기부의 태도에 「이목사 귀국추진위」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4일로 예정되었던 이목사의 귀국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귀국추진위의 송병구 간사는 "김영삼 정부가 진실로 문민정부라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아무런 간섭 없이 이 목사의 귀국을

일 안 검사(현 춘천지검 영월지청)를 독직폭행혐의로 고발하고, 같은 달 25일 대한변협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안기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목사 내외는 4일 독일에서 "민족화해를 위하여 애쓰는 개인이나 단체를 정부는 격려하고 지원해야 될 일"이라며, "아무 조건 없이 모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목사 귀국추진위」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목사)은 4일 공동성명에서 "반성문과 각서요구 등의 구태의연한 발상은 관계당국의 도덕성을 판단하게 한다"며, "안기부가 어떠한 이유로 이목사의 입장을 저지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목사 귀국추진위」는 95년에 다시 이목사의 귀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7일로 예정된 이목사의 글을 담은 「통일과 기독교」 출판기념회를 연세대 알렌관에서 오후 5시에 연다고 발표하였다.

일빛·힘 대표 석방 요구 43명 출판인 성명

지난 3월 일빛출판사 대표 이성우(38)씨, 힘출판사 대표 김연인(32)씨 등 출판인의 잇단 구속에 항의하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4일 김학민(학민사 대표), 나병식(풀빛 대표)씨등 출판인 43명과 가족들은 '최근의 출판인 구속사태에 대한 출판인의 견해'를 통해 △문제가 된 서적이 몇년전의 일이고, △현정부 출범 이전의 정치·경제 상황을 다룬 서적이야 출판당시에도 문제삼지 않은 책을 뒤늦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일부 공안세력이 출판계 자체를 염두에 둔 정책성 출판단압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함평기씨 연행은 노동탄압 전행투"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전행투)는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시절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한 국가보안법의 뒷을 띄워 함평기(전행투 조직부장)씨 등을 연행한 것은 노동운동에 탄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또 함씨 등을 포함한 모든 구속·수배 노동자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를 요구했다.

함씨는 지난 3월 28일 「역사노」 관련 활동을 한 혐의로 여의도법원 앞에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지상중계/2-3면

「<인권하루소식> 합본 1」 발간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 발행했던 <인권하루소식>을 한편의 책으로 묶어 발간되었습니다. 총 340쪽의 합본호에는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머리글 「'문민'정권 1년의 인권」 등이 실렸습니다.

값 : 1만 5천원
(구독료 납입종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합니다)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김영삼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다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광노현 방통대교수)의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2일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경선(방송대 헌법)교수가 '법을 통해서 본 문민정부의 상한과 하한'으로 기초발제를 시작하여, 오전 11시부터 두 곳에서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날 강의는 정치, 경제, 행정, 노동, 공안, 환경, 사법, 여성, 인권 등 9가지 주제로 다뤄졌으며 종합토론자를 포함 40명이 넘게 참여했다(이중 기초발제, 인권, 공안, 사법, 노동, 여성, 종합토론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기초발제

강경선교수는 기초발제를 통해 정치적 의미에서 법의 본질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점에서 문민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현 정부는 출범한 이래 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거의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수자 보호의 노력, 특히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권

인권분야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

방 대표)씨는 "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를 통해 '문민' 인권상황과 과거의 '군사독재'적 인권상황 사이에 단절은 없다고 평했다. 김영삼 정부출범 1년만에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자는 1백39명이며 이는 같은 기간 시국·공안 사건 구속자 2백22명 중 62.4%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부측에 폐지할 것을 권고한 '제3차 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금지' 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생리휴가 무급화' 추진, '근로자 파견법'등 신종 노동악법의 제정 움직임마저 노골화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서대표는 '문민'정부가 △과거에 발생한 인권문제 청산 △법제도의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정비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며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 세가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대표는 인권운동에서 '문민' 1년간 나타난 변화에 대해 국제화와 자료축적에 의한 전문화가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앞으로 인권운동이 나아가야할 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권 분야로의 인권 운동의 시야와 활동영역의 확

발제문 주요 목차

□기초발제:법을 통해서 본 문민정부의 상한과 하한/강경선

- 1.문민정부-정치력의 마비와 보수로의 회귀시대 2.현정부의 입지-군부와 재야 사이의 어부지리적 선택 3.이 시대의 법개념과 법의 과제 4.법의 본질은 '소수자 보호' 5.민주주의의 실현-기득권의 포기

□정치: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본 정치개혁의 전망/김민배

- 1.법을 통한 정치개혁은 가능한가 2.이데올로기적 폐쇄성은 타파되었나 3.지역주의 이데올로기는 붕괴될 수 있는가 4.관권과 금권선거는 근절될 수 있는가 5.당내 민주주의를 통해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는가 6.진보세력은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 7.정당에 대한 보소는 필요한가 8.정치관계법의 평가와 개혁의 전망 그리고 과제

□행정:김영삼정부의 행정법개혁에 대한 중간평가/홍준형

- 1.문민정부와 개혁 2.법치주의와 법제개혁 3.행정법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4.행정법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 △자료축적과 정리 및 활용 △인권교육 △유능한 이론가와 활동가 양성 △국제성 경비 등을 들었다.

오완호(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씨는 문민정부하에서 연행 및 조사과정과 구금과정에서 여전히 인권이 침해되고 있고, 과거정권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재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여기에 법률상의 문제, 국제인권에 가입보류, 인권희생자에 대한 배상조치 부족,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독립적 기구의 부재 등을 들었다.

오씨는 또 △인권운동의 대중화 △예방적 차원의 인권운동, 특히 인권교육의 실시 △국제인권운동의 흐름에 조응 △새정치당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마련 등을 국내 인권운동의 과제로 제시했다.

오완호씨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이승호(충북대 형사법)교수는 "인권운동은 법을 지키라는 운동, 법위반에 대한 처벌운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안

공안이란 '공공의 안전'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훨씬 넓은 의미로 공안의 의미가 적용되었다. 이 점에서 장영민(인하대 행정법)교수는 발표문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에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보법은 법치국가의 존립이유인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형성 과정의 유지확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안기부법도 교유의 의미나 확대된 의미추진의 공안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평가이다. 장교수는 또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

□공안: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장영민

- 1.서설 2.공안의 두 개념 3.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예에서 본 공안법제의 문제점 4.공안에서의 법치국가의 원리의 모색 5.공안법제의 두 모델 6.공안에서의 법치국가(대화) 모델의 구현 7.공안의 확립인가 공안의 해소인가 8.결론에 대신하여-문민정부의 공안관련 법의 개혁

□사법:진정한 사법민주화란 무엇인가/박홍규

- 1.서설 2. 시민을 위한 사법 3.사법이념의 인권보장화 4.민중의 재판참가와 법관선출 5.사법적용 및 이용의 자유화와 평등화 6.사법조직과 과정의 민주화 7.소위 문민정권하의 사법개혁주장 8.문민정부하 새 대법원과 검찰의 개혁주장 9.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

□인권:'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서준식

- 1.인권으로 본 '문민' 1년 2.'문민'시대의 인권운동

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는 것은 형법의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진변호사는 "결국 과거 1년동안 공안상황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법의 이름 아래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는 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집행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기준적용이 가능한 데서 온 것이며, 문제해결을 인종교체만이 아닌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사법

박홍규(영남대 노동법)교수의 '진정한 사법민주화란 무엇인가 - 재판은 재판한다'라는 주제발표에 한상수교수, 박원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또는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며 "사법의 이념은 인권보장에 있고 이것이 사법민주화의 첫 과제"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사법이 전문적인 사법관료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판에 국민이 참가할 수 있는 배심제와 국민에 의한 법관선출제"를 꼽았다. 당장 실시하려면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민주주의는 일련의 혼란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교수는 또 돈을 이유로 사법에 접근할 수 없는 등 국민이 사법이용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조인구가 제한되고 특권화되어서는 사법에 접근하는데 벽이 생기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조인의 숫자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 최근 대법원의 상고허가제 논의 등에 대하여 대법관들의 업무감축 차원에서 3심제의 원칙과기보다 오히려 대법관수의 증가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변호사는 토론에서 현재 사법의 전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운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박교수가 말한 배심제, 법관의 선거제 등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선임, 감시, 소환의 권리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사법도 법관과 법률전문가만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민주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전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는 충분한 소개와 연구를 거친 후 우리 현실과의 접목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국민의 사법참여는 당장 실현되기보다는 참여의 권리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 바탕에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의 방청, 판결의 비판, 모니터 등 재판감시운동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의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

김선수변호사는 '문민정부와 노동법'에서 "김영삼 정부 1년간의 노동정책은 정부부처간에도 이견이 노출되는 등 전혀 일관성이 없고,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의 개정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보수성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노동법의 기본원칙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보장, ILO가 형성한 단결권보장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정방향으로 복수노동조합 금지규정, 제3자 개입 금지규정,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 3권 부정, 방위산업체종사 노동자의 쟁의행위금지 등을 폐지할 것을 우선으로 들었다.

□노동:문민정부와 노동법/김선수

- 1. 머리말 2. 문민정부의 노동법 개정방향 3. 문민정부의 노동법 개정내용 4. 맺음말

□여성:여성인권의 현주소/이종걸

- 1. 머리말 2. 가족, 가정내에서 여성인권 3. 성적 자기결정권의 확보 4. 평등한 여성 노동권의 확보 5. 실질적 정치적 기본권의 확보

□경제:문민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곽노현

- 1. 문제의 제기:개혁바람속의 재벌체제 강화현상 2. 지금까지의 재벌정책의 내용 3. 재벌문제에 대한 대안적, 헌법적 관점 4. 재벌기업에 대한 적극적 소유분산정책:초과이윤세와 중입원투자금 5. 공동결정제도:재벌의 기업지배권 약화방안 6. 규제 및 계획과정 민주화 7. 경영참여운동의 우선적 지위 8. 요약 및 결론

여성

이종걸 변호사는 여성인권의 제도적 측면의 보장에서 4월1일 발효된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에서 발효 및 시행령 제정에 이르기까지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김영삼 정부 1년은 여성인권의 국제연대가 두드러졌던 한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정치부문에서 김민배(인하대 행정법)교수가 '정치관계법을 통해본 정치개혁의 전망'을, 행정부문에서 홍준형(아주대 행정법)교수가 '행정에 관한 법제개혁의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경제부문에서는 곽노현(방송대 사회법)교수가 '김영삼정권의 재벌 정책 비판과 대안 모색'에 대해, 환경부문에서 석인선(이화여대)강사가 '문민정부의 환경정책비판과 환경권 실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 종합토론회에서 장기표씨는 "법은 특정 전문영역이 아니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관련된 것이다. 법이 선진화 전문화돼야 사회민주화와 선진화가 이뤄진다. 이 측면에서 김영삼정부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이 없진 않다"며 법실행의 문제를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정치관계법이 제정되었으나 "비례대표제를 통한 진보세력의 정치 진출과 노동조합법을 고쳐 노동진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의 진보와 규범을 통한 진보방향에 대해 서헌제씨는 "민주화, 국제화, 통일화"를 말했다. 김중서씨는 법운동의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대중성 확보를 말하며 이를 위해 법학생, 법대교수, 법조인들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회는 법과 민주화의 측면에서 본 진보의 개념과 사회발전방향, 법현실과 법조항에서 본 진보의 실질적 개념, 이것의 실천측면에서 운동론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장기표씨 외에도 강경선교수, 박인제변호사, 박원순변호사와 1백5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여했다.

◆ 공 판 안 내 ◆

□4월 6일(수)

- 정낙훈, 국가보안법, 311호, 10시, 선고
- 김남현, 국가보안법, 319호, 10시, 선고
- 김형렬, 국가보안법, 318호, 2시, 1차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씨 재판

PC통신동우회 회원 집회

PC통신 사용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PC통신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현의 자유와 통신검색 반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통신을 위한 PC통신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장지옥, PC통신단체협의회 준비위) 소속 회원 1백여명은 5일 오후 3시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범통신인 한마당' 행사를 열고 통신검색 반대와 PC통신 관련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PC통신 동우회 회원들이 주로 참가한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현대철학동호회' 전회장 김형렬씨가 천리안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7명이 PC통신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며, "PC통신 이용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표 장씨는 "정보화 시대의 오늘날 PC통신 이용자가 30여만명에 이르고 대통령도 PC통신을 이용하는 마당에 통신이용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PC통신단체협의회 준비위」는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현대철학동호회", "회망터" 등의 동호인 단체들이 지난 달 27일 결성했다.

김형렬씨 첫 공판 열려

PC통신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적용받아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형렬씨에 대한 첫공판이 6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렸다. 김형렬씨는 진보저널 93

년 8월호에 실린 「혁신노」의 입장등 모두 5건의 글을 PC통신에 게재한 혐의로 작년 12월 7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위 글을 PC통신에 올린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해서 게재한 것이 아니다. '현대철학동호회'라는 동호회의 성격상 단순히 연구·토론을 위한 자료중의 하나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PC통신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인만큼 이번 재판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하는 점과 과연 이적표현물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27일 오후 3시.

천리안 "표현의 자유"토론

PC를 이용한 통신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검찰이 통신검색 등을 통한 PC통신 이용을 '감시'하자 PC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토론장이 개설되었다.

천리안에 4일 개설된 '표현의 자유는 하늘이 준 권리입니다'라는 제목의 토론장은 개설된지 하루만에 13명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정도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인권토론장이 되고 있다. 4월 24일까지 개설될 예정인 '표현의 자유...권리입니다'의 의장인 윤진씨는 "통신인들의 노력으로 자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자주적인 몸짓을 할 수 있게 됐는데 토론실 개설의 의미를 찾고 싶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토론실에 올라온 글은 '자유로운 의사교환의 장을 지키기 위하여', '양심수는 있다' 등으로 "통신에서 비판적 의식이 배제된다면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단순한 전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 공 판 안 내 ◆

□4월 7일(목)

- 원완영의 4, 업무방해, 서울지법 423호 10시, 선고
- 배진성, 업무방해, 서울지법 317호 11시, 8회
- 최문실, 국가보안법, 서울지법 318호 2시, 3회
- 이동근, 폭력행위등, 서울지법 422호 3시, 속행
- 김택기의 2, 국회중언·감정법, 서울지법 319호 4시, 2회

□4월 8일(금)

- 심우식의1, 배임수재, 서울지법 318호 10시, 선고
- 김지한의2, 업무방해, 서울지법 319호 10시, 속행
- 이공순, 출판물 명예훼손, 서울지법 418호 4시, 속행
- 정몽헌, 특가법, 서울고법 309호 4시.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발간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 발행했던 <인권하루소식>을 한편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였습니다. 총 340쪽의 합본호에는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머리글 「'문민'정권 1년의 인권」 등이 실렸습니다.

값 : 1만 5천원
(4월 현재 올해 구독료 납입금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합니다)

출소장기수 김광삼 사망 4.1. 음성 꽃동네

출소 비전향장기수인 김광삼(80)씨가 지난 4월 1일 폐암으로 사망하였음이 5일 김씨가 수용되었던 음성 꽃동네에 면회를 갔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회장에 의해 밝혀졌다. 김씨의 유해는 2일 꽃동네 묘역에 안장되었다.

김씨는 53년 북한의 대남 연락부에 소환되어 안내원으로 있다가 55년 군산 해안에서 체포된 후 88년 8월 32년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후 곧바로 꽃동네에 수용되었다.

김씨의 사망소식을 전해들은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보안관찰 처분자란 이유로 양로원 문밖으로 나와 보지도 못했고, 면회도 제한되는 등 여러 제한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들 단체들은 이번 김씨의 사망을 계기로 김영삼정부가 출소 비전향장기수들이 남은 여생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북에는 김씨의 가족으로 장남인 김가진(50)씨를 비롯하여 3남 1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두밀국교 학부모 조사 시설강습소 위반 혐의

울 신학기부터 학교 폐교에 맞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두밀국교 학부모들은 6일 가평경찰서에서 시설강습서 설치에 관한 법을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가평군교육청의 고발에 따라 이뤄진 이날 경찰 조서에서 학부모들은 폐교방침이 부당함을 설명한 뒤, 학교가 폐교된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멈출 수 없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아시아여성들 만남 무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연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공동대표 이우정 이호재 윤정옥)는 6일 제5회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서울개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북한, 일본, 중국의 여성 대표들을 초청,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때일수록 민간차원의 여성교류가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북한 핵문제를 이유로 정부가 우리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그동안 서울·평양·동경에서 열렸고, 정진대 문제의 해결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91년에 열린 2회 서울토론회에 북한측도 참가했다.

국보법 폐지 서명 벌여 KSCF 고난 및 부활절 맞아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 회장 김재선, 서울대 4)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여 '94 고난과 부활'이란 행사를 주관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양심수가 없는 나라'로 정하고, △김선명씨를 비롯한 322명의 모든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김인서·함세환 노인의 송환을 위해 기도 및 서명운동을 벌였다.

KSCF 이운정씨에 따르면 "양심수 석방, 국보법 폐지, 김인서·함세환노인 송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국 7개지역 45개대학

에서 진행하였다. 일반학생들이 양심수나 국보법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까웠지만 서명운동을 통해 알릴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이번 행사를 평가하였다.

작년에는 같은 기간에 정신대할머니를 위한 모금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현역군인등 9명 국보법 북한방송 내용 게재이유

전남경찰청 보안과와 기무사 광주지구대는 6일 92-93년 대학 재학당시 북한 방송을 그대로 게재한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가에 배포한 고영춘(26, 전남대졸), 문혜영씨(25, 광주대졸)등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2년 6월 북

한방송을 녹취한 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협정 체결등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전남대와 조선대 등 8개대학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 탄원 KNCC 인권위 사형폐지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형폐지분과위원회는 4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사형제도 폐지와 특히 부활절 이후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사형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원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사형폐지분과위는 탄원서에서 '문명정부 출범후 사형집행을 정지시킨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과거의 경우와 같이 부활절 이후 사형집행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알림

- 고난함께(130쪽)-94년 봄호 제37호(계간)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 주요내용 : (좌담회)/국제화 시대의 지방자치(노무현)/보호받지 못하는 매맞는 아내의 삶(정영애)/장애인 복지 실태에 관한 이해(김정렬)/우리의 이민사는 불행한 현대사-미국편 등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8쪽)-후원회보 제8호(월간)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 주요내용 : 이영빈 목사와 김순환 선생의 통일을 위한 삶의 뒷자취/담장 넘어 온 편지/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찾아서(탐방) 등
- 운동본부 소식(12쪽)-제3호(월간)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주요내용 : 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배경 및 경과/또 다른 미군범죄-환경오염의 사각지대 주한 미군기지
- 두레방(16쪽)-제12호(부정기)
 -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성노회 전국연합회 선교센터
 - 주요내용 : 미군기지촌 여성공동체 두레방과 함께 하시렵니까?/두레놀이방 졸업식-정들었던 아이들을 보내며/속수무책인 미군범죄-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등
- 함께걸음(82쪽)-4월호(월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주요내용 : 접근권이란 무엇인가(강경선)/수난기의 한국 특수교육(김병하)-한국특수교육 100주년 기획시리즈/성장위주의 신경계에 후퇴하는 사회복지/교문, 삶을 파괴하는 제도폭력-문국진이 살아내는 '고문의 삶' 등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꺼지지 않는 해고자들의 원상회복 투쟁 1년

전해투 작년 4월 7일 기독교회관 농성후 민주당사에서 계속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7일로 투쟁 1주년을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전해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제7차 해고노동자대회'를 갖고 해고노동자의 복직문제 해결을 촉구하게 된다. 이날 대회를 기점으로 봄철 임금투쟁과 결합해 싸울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해고자복직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전해투 대회협력부장 인터뷰 2면 참조).

92년 4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출발점으로 해고노동자 문제를 전국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전해투를 결성하고, 그해 4월 7일 36개 사업장에서 38명의 노동자들이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4월 7일부터 시작된 단식은 23일까지 18일간

계속되고 그과정에서 9일 「전해투 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

5월 31일 파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원상회복촉구 집회를 가진 뒤 마포 민주당사에서 2차 철야농성을 시작하고 9월 정국국회에 해고노동자 원상회복특별법제정을 촉구하였다. 9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38일간 병역특례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과 병역특별법 개정을 위한 삭발·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10월 13일 20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청 점거 투쟁을 벌인다. 10월 19일 농성장을 마포에서 여의도 민주당사로 옮기고 이날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순회 투쟁을 펼쳤다. 올해 3월 7일부터 전국사업장에서 해고노동자들이 출근투쟁과 텐트농성을 현재까지 진행시키고 있다.

시, 출판인 양심수 선정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3월 구속된 일빛출판사 사장 이성우(38)씨와 편집장 장 김병학, 힘출판사 사장 김연인(32)씨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6일 요구했다. 이씨등의 구속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양심수를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엠네스티는 밝혔다. 또 엠네스티는 회원들에게 김

영삼 대통령등 정부관련기관에 이들 세명이 경찰수사기간동안 가혹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높는데 우려를 표시하는 편지를 쓸 것을 권고했다.

이성우, 김병학씨는 지난 3월 18일, 김연인씨는 지난 3월 23일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연행되었다.

민가협 30차 목요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는 7일 '조작간첩 장기수의 석방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요집회를 열었다. 30번째인 목요집회는 삼척가족 간첩사건 관련으로 수감중인 김태용씨의 누나 김순자씨, 정영씨의 딸 정상숙씨 등이 참가했다.

알림

- 살인누명 김기웅순경 고법(파기환송) 선고공판
 - 일시 : 4월 8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울고법 형사1부 309호
- 부산 '노동자를 위한 연대' 결성식
 - 일시 : 4월 8일(금)오후 7시
 - 장소 : 노동자를 위한 연대 사무실
 - 전화 : 051-803-8746, 051-802-3084
 - 팩스 : 051-803-4417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1동 674-6 한일식당 3층
- 월간인권 4월호-격월간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주요내용 : 방콕·홍콩지역 운동단체 방문기(이윤경)/아시아 여성 인권법정 참관기/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필리핀 선언/인권법률상식-구속영장 실질심사제/전남노회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실천(김병관)/삼청교육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요구안(홍낙표) 등
-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 일시 : 4월 11일(월) 4시-6시
 - 장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
 - 주최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민변, 인의협
 - 문의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796-8364, 5)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독자 여러분에게 배포중입니다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 발행했던 <인권하루소식>을 한편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였습니다.

값 : 1만 5천원
(4월 현재 올해 구독료 납입총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하고 있습니다)

● 국제 인권 소식 ●

국제인권연구소 제25차 국제인권법 강좌 7월 2일-2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국제인권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가 주최하는 제25차 국제인권법 강좌가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의 국경도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대학인권학 강의를 위한 국제센터(CIEDHU)’의 인권분야에 대한 대학에서의 강의와 연구조사에 대한 특별 세미나(35시간)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이 강좌는 세부적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입문강의(Introductory Lectures)에서는 ‘인권의 철학적 개념’이 5시간 동안 다루어지고 주제강의(Thematic Lectures)에서는

‘인권의 미래: 위협과 약속’(5시간), ‘위협에 대처하는 자원과 새로운 수단: 비엔나를 넘어서’(7시간) 등의 주제를 공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본강좌(Fundamental Courses)에서는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제도’(8시간), ‘아프리카 인권 및 민중권 헌장’(5시간), ‘국제인도주의법’(8시간) 등이 다루어진다. 강좌가 끝난 후 소정의 필기와 구두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가수료증 이외에도 학위(Diploma)가 수여되고 있다.

유럽에 개설된 여러 국제인권법 단기간 강좌 중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 강좌는 인권법, 정치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과학 대학원생, 교수 및 연구자나 인권분야에서 일하는

인터뷰: 전해투 대외협력부장 안 경 호 (29, 한국공항공해고노동자)

- 전해투 투쟁1년을 맞아 그간 함께 싸워온 해고노동자를 대표해 소감을 말한다면?
= 1년동안 싸워온 것이 대견스럽기도하고 한편으론 목숨걸고 한 투쟁이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아 착잡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투쟁을 준비해야겠습니다.
- 그간의 어려움은 어떠한 것입니까?
= 해고당사자들의 어려움은 물론 크지만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고통은 더 큽니다. 복직판정을 받고도 수술비가 없어 숨진 조정천동지, 아들의 복직을 손꼽아오다가 아들 배일도씨가 복직자명단에서 빠진 충격으로 자살하고만 배상봉씨의 죽음에서 알 수 있지요. 이처럼 해고자의 아픔은 가족의 아픔이고 사회의 아픔입니다. 이점에서 해고노동자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 전국순회투쟁은 무척 힘든 만큼 보람도 컸으리라 봅니다. 각 지역사업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 전국 70개 사업장 방문 투쟁을 벌이면서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투쟁의 열기가 것처럼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고노동자가 직접 사업장 안에서 싸우는 모습은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노동자들을 해고자복직문제 해결에 함께하도록 했지요. 사업장 안과 밖에서의 싸움은 복직된 뒤에도 사업 속에서 노동자들의 힘으로 남을 것입니다.
- 전해투 1년투쟁의 성과는
= 첫째, 문민정부 출범이후 화합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해투는 문민정부의 허상을 벗겨냈습니다. 둘째, 지난 1년만큼 정부나 자본가나 노동자해고문제를 심각하게 안겨준 적은 없었을 겁니다. 전해투는 전국 12개지역 5개그룹사 방문농성을 펼쳤습니다. 셋째, 지역 해고노동자를 전국적인 대오로 묶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투는 해고자복직문제 뿐만이 아니라 해고방지도 일조했습니다. 또한 전해투의 투쟁은 민족민주운동권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 이후 계획은
= 오는 16일 집회는 전국 해고노동자들의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전해투 1년의 투쟁을 기념하고 이후 투쟁의 결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16일부터 5월1일 메이데이날까지 가열차고 지속적인 투쟁이 진행될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조인 또는 민간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해마다 열려왔다.

올해 1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민주외교훈련프로그램(DTP, <인권하루소식> 94호, 1월27일 참조)은 이론보다 실천위주로 짜여져 국제인권운동 실천활동가에게 적합한 반면 스트라스부르크의 국제인권법 강좌는 이론과 쟁점위주의 내용으로 실천적 지향을 가진 연구자에게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세계에서 저명한 국제인권법학자들이 강사로 초빙되는데 그 가운데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림버그대학교의 국제법 교수이자 불처벌(Impunity)와 과거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복권에 관한 최고권위자인 반 보벤(T. Van Boven)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3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자나 이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춘 자, 정부 또는 비정부 민간인권단체(NGO)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실제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 등이다. 강좌는 영어와 불어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그중 한가지 언어로 강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등록 마감일은 5월 31일이며 재정지원 요청서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구금자 석방 촉구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북부 수마트라(Sumatera)와 아체(Aceh)지역의 군사령관에게 1989년 이래로 아체지역의 분리운동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없이 구금중인 11명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올해 2월초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의 요청을 담은 편지를 지난 3월 3일 발송하였다. 그동안 독립성을 의심받아온 인권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내린 이번 결정은 현지의 인권운동단체 사이에서도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과 위상을 찾아가고있다고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전망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접종되는 미국 등 서방국가의 인권탄압을 이유로한 압력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살인누명 김기웅순경 무죄확정

8일 서울고법 김씨 복직문제등 조속한 원상회복 이뤄져야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끝에 진범이 잡혀 풀려난 전관악경찰서 김기웅(28)씨에게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의 복직, 당시 담당경찰 및 검찰 수사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8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진범 서진현 피고인(20)이 불감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김피고인이 혐의가 없음이 입증됐고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설명됐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11월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초역관에서 이아무개(당시 18)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

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 진범 서피고인이 불잡히는 바람에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풀려났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원심에서 증거채택 등을 잘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김씨는 대법원에 증거가 확실하고 진범이 잡힌 이상 사건을 고법에 되돌려 보내 다시 재판정에 서게 하지 말고 대법원 직권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현재 파면조치를 받은 김씨에 대한 파면취소가처분 신청 결심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2호실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무죄확정 판결후에도 파면취소 가져분소송의 결과를 보고 김씨의 복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자신들의 잘

못을 바로 잡으려는데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배해제자에 제차 수배령 전해투 조직부장 정형기
7일 밤 9시경 구로본동 파출소에서 정형기(전해투 조직부장)씨 집에 출석요구서를 들고 찾아와 상부의 지시를 받고 정씨를 연행하려 했다. 이에 정씨가 영장없는 출두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동행을 거부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30일 정씨에 대한 수배령(수배번호 100240)을 내리고 오는 9일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출두요구서를 정씨에게 보내왔다. 정씨는 91년 6월 기아자동차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되었다가 작년 10

월 경찰에 출두하여 사건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인혁당 사형집행자 추모제
9일 오후 서대문 옛사형터 ‘인혁당 사건’으로 75년 4월 9일 사형확정판결을 받고 하루만에 사형집행된 8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4.9 통일열사 추모제’가 열린다(문의 704-0886). 추모제는 9일 오후 1시 30분 이들이 사형집행당한 서대문 독립공원 옛사형장 앞마당에서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공동대표 김찬국등 5명)주최로 열린다. 1부 추도식, 2부 추모극, 3부 친교와 나눔의 자리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인혁당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방당한 조지 오글 목사 부부와 채임스 시노트 신부, 유가족 등이 참가하여 만남의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75년 4.9 사형집행된 사람은 서도원, 하재완, 김용원, 송상진, 도예중, 이수병, 우홍선, 여정남 등이다.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 일시 : 4월 11일(월) 4시-6시 /
- 장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
- 주최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민변, 인의협
- 주제발표 1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문제점-전해철(민변)
- 주제발표 2 :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양길승(인의협)
-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 최영미씨 어머니 전진숙씨, 김중경씨 부인 윤운자씨
- 토론자 : 박우섭(민주당 정책실장) 오완호(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독자 여러분에게 배포중입니다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 발행했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였습니다.

값 : 1만 5천원
(4월 현재 올해 구독료 납입총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하고 있습니다)

단체탐방 16 / 회년선교회

서울에서 높은 굴뚝들이 가장 많은 곳, 구로공단의 굴뚝마...

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려온다. 구로지역의 맞벌이주부와 저소득 가정을 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의료진료에는...

억눌린 자, 빼앗긴 자, 빛진자에게 인간화와 복음화의 회년(해방)을!

이 지역에서 구체적 참여를 고민하게 되었다. 민중교회를 설립하고...

일어섰던 강명규 간사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우리나라의 약덕기업주...

그동안 공식집계된 것만도 49건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건들...

이에 91년 11월 23일, 공단지역선교(Urban Mission)를 통하여 공단지역의...

억눌린자, 빼앗긴자, 노예된자, 빛진자에게서 억압의 쇄사슬을 풀어준다...

이 모든 일들은 한국교회의 도움과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돕거나 협력함을 통하여...

이것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해방의 터가 될 우리의 공동체의 토대가...

이것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해방의 터가 될 우리의 공동체의 토대가...

첫째, 사방벽이 책으로 가득차 있는 사무실 자체가 '마을도서관'으로...

이것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해방의 터가 될 우리의 공동체의 토대가...

이것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해방의 터가 될 우리의 공동체의 토대가...

둘째, 앞면 벽에서는 아이들의 웃음...

이것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해방의 터가 될 우리의 공동체의 토대가...

이것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해방의 터가 될 우리의 공동체의 토대가...

알림

- 겨레의 딸 김지현을 돕기위한 하루주점
□흥미영씨 94년 여성운동상 수상 기념식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간의 인간됨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라며 '고문피해를 치료하는 전문기관'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로는 오완호(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이것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해방의 터가 될 우리의 공동체의 토대가...

이것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해방의 터가 될 우리의 공동체의 토대가...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예정

이것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해방의 터가 될 우리의 공동체의 토대가...

이것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해방의 터가 될 우리의 공동체의 토대가...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연기돼 왔었다. 협약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발행!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93년 8월부터 94년 2월초-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였습니다.

주제별 색인을 넣어 특정사건을 찾아보는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인권상황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연구자 등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우송해 드립니다.

값 : 1만 5천원

(4월 현재 구독료 납입총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하고 있습니다)

공판안내

- 4월 12일(화)
·이순심, 폭력남편 살해, 10시, 수원지법 110호, 2회
·조정희, 군무이탈, 2시, 육군교법, 1회, 항소심

외롭게 숨진 고 김광삼씨 추모제

8일 출소장기수의 여성 본인의사에 맡겨야

지난 8일 오후4시 출소 비전향장기수 고김광삼씨의 추모제가 장기수와 민가협 회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 꽃동네 묘역에서 치뤄졌다. 감호소 생활을 같이한 이씨는 "32년 감옥살이중 전향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보호 감호처분으로 인한 8년간의 감호살이,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된 채 누적된 병마로 가족은 물론 동지들도 지켜보지 못한 채 죽게한 것이 이른바 법이란 말인가"고 통탄해 했다.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은 한결

같이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근세계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추모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땀장조차 없이 초라한 무덤을 보며 쓸쓸하게 숨진 김씨가 떠오르는 듯 매우 침통해 했다. 숨진 김씨는 55년 군산에서 체포, 20년형을 받고 75년 만기출소했다가 77년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 3년 징역을 살고, 80년부터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던중 88년 석방되어 음성꽃동네에 수용되었다. 북한에는 4남매

(1면에서 계속)

이라고 말했다. 고문방지를 위한 조치로 특히 신문·구속 기관 등이 분리돼야 하며 고문사실을 보고하는 장치로 독자조사기관인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오씨는 "공무원의 교육과정에서 고문이 범죄행위며 어떤 고문명령도 거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8월 UN에서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겠다고 한 약속을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빨리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토론회 나선 조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정신질환에 관련된 법이 전혀 없다"며 고문배상제도가 전혀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조교수는 또 고문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속에서의 관리서비스체계와 의료보험에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부분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극적인 고문사례홍보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집에는 11명의 고문후유증 피해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었으며, 이중 학생시위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강환운씨와 화성연쇄살인범으로 지목받아 연행된 뒤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는 김종경씨의 고문피해사례를 그 가족이 증명했다.

86년 11월 거리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끌려가 쇠파이프 등으로 구타당하고 영동포구치소에서 고춧가루를 탄 자장면 먹기 고문을 당한 강환운(30.당시 중앙대1)씨의 누나 강희숙(33)씨는 "동생이 출소한 뒤 환청에 사로잡히는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며 울먹였다.

같은 해 4월 시위도중 연행돼 구치소로 넘겨진 뒤 징벌방에 갇혀 집단구타를 당한 김복영(29, 당시 연세대 3)씨의 누나(33)는 "너희들은 항상 나의 누수에 칼질을 꽃고 나의 꿈은 항상 피비린내로 얼룩졌다"고 써놓은 김씨의 일기장을 읽으며 흐느끼기도 했다.

지난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경찰에 끌려갔다 고문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한 김종경(43)씨의 부인 오운자(40)씨는 "순박했던 남편이 고문을 당한 뒤부터는 손이 떨리고 헛소리를 하는 등 완전히 폐인이되고 말았다"며 치를 떨었다.

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꽃동네에는 유한옥(82)씨가 모시겠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거 이전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민법연 '민주법학' 7호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등 특집

진보적인 소장 법률학도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광노현, 방동대 교수, 민법연)가 '민주법학' 7호를 펴냈다. 그동안 실천적인 법학의 연구를 기치로 내걸고 활동해온 민법연이 펴낸 '민주법학' 7호에는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의 현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민법연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우리나라의 인권현실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국제화·개방화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국제인권법의 기준에서 우리 인권현실을 냉철하게 진단, 보다 철저한 인권보장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뒤늦게나마 작년 6월 열린 유엔세계인권대회와 관련된 내용을 특집으로 다뤘다. 특집에는 인권대회에 직접참가한 사람이 쓴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이대훈),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각 인권분야를 진단한 '문민정부, 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박홍규), 과거청산과 인권교육의 측면에서 본 '문민정부 1년의 인권정책;내용과 평가'(광노현)등과 미국의 국가안보관련 사건을 당시 사회상황과 언론보도 등을 심층추적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장호순)가 실려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논의와 한-미간 상호조약의 문제점을 헌법과 국제법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방향'(임재홍), '경영참여운동시

론'(김성오)에서는 노동자 경영참여론을 운동론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또 주목할 만한 논문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람시의 해체모니 개념을 이용하여 '권리'논의를 분석, 재판을 통한 권리투쟁이 변혁운동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영국의 법사회학자 알싼 헌트의 '권리는 진보적 사회이념에 기여할 수 있는가?'(이상수역)가 소개되어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우리 입법의 과제를 다룬 '열린 법학'을 위하여-입법에 관한 연구'(이상영), 헌법재판관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밝힌 '통계로 본 헌법재판'(김중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헌법실천' 등이 실려있다.

관악사 펴냄, 370쪽, 6천원 (문의처 : 740-4590,2)

해고노동자, 복직요구

11일 한진노동자

'한진그룹 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위'(의장 안경호, 한해투) 회원 10여명은 11일 남대문로2가 한진그룹 해운센터 앞에서 해고자 전원복직과 회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5·6공 때의 해고노동자 복직을 약속했는데도 한진그룹은 40여명의 해직자들에 대해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해고노동자가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한진그룹에 "해고노동자들을 조속히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법무부에 한국인 보호위한 세부기준 설정요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 관련 미군책임자 엄중처벌 및 한미행정협정의 명확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정양환씨가 지난 1월 28일 11시40분경 미군헌병에 의해 불법체포(수갑을 채운 채)·감금된 사실이 있으며, 대한변협 인권위 조사 결과 정씨는 범죄로 분류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나 미군헌병들이 택시를 정지시키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후 미군헌병대로 연행하여 3시간 동안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정부당국이 주한미군 당국에게 영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한국국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통보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정씨가 연행될 당시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으나 신병인도를 요청하지도 못하고 단지 구경만하고 있었다며, 정부당국은 한국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요청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

는 공문을 12일 보냈다.

이 서한에서 대한변협은 미군헌병들이 미국법률상 또한 한국법률상 정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정씨 사건 (☛ 2면으로 계속)

20여년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씨 2차공판

12일 수원지법 변호인 반대신문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20여년동안 자신을 구타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순심(40)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10시에 열린 공판은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이루어졌다.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70여명이 참가, 재판정을 꽉 메운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씨가 부모를 여의고 식모살이를 하는 등 성인이 되기까지의 생활과 이씨의 남편에게서 얼마나 어떻게 구타를 당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씨는 숨진 이씨가 구타한 이유를 묻자 "아무 이유없이 그냥 맞았다"고 대답했다. 또 남편의 폭력이 살해에 이를 정도까지 심했으면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뒷감당이 무서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씨는 재판시작 때부터 끝까지 시종 흐느끼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거의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5월 10일 (화) 2시 수원지법 110호실에서 열리며, 변호인이 신청한 이씨의 남편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 2면에서 계속)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재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발행!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93년 8월부터 94년 2월초-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였습니다.

주제별 색인을 넣어 특정사건을 찾아보는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인권상황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연구자 등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우송해 드립니다.

값 : 1만 5천원

(4월 현재 구독료 납입총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안했던 사실로 다시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행,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행권씨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행을 받고 나온 사람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가 제기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92년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행을 받은 고행권(31, 전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씨는

지난 2월 16일 긴급구속장을 발부받아 구속된 고행권(31, 전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씨는 92년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행을 선고받았다. 그 당시 고행씨는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받다 안기부 광주지부로 넘겨져 사노맹 가입사실에 대해 조사받고 그 사실을 인정, 유인물 배포혐의와 사노맹 가입사실에 대해 같이 공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3년 3·6사건으로 석방된 고행씨에 대해 광주지검은 사노맹 가입 및 회합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 사실은 모두 92년 수사기관에서 고행씨가 인정한 사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93년 석방 이후의 활동이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행씨의 변호인은 "실정법과 판례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

에서 서증조사 요구 등을 통해 92년의 사노맹 가입 등에 대한 조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공소권 남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공방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행씨의 부인 박인애씨는 고행씨가 "9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행을 선고받았는데 이어 그 당시 조사는 받은 내용으로 다시 기소되어 누범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본인이 사노맹 가입 사실을 인정하고 더구나 기소까지 요청할 때에는 무시하고 이해와서 기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10일 개원

경기도 일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할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산자교회 목사)이 지난 10일 문을 열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준비이사회(이사장 이해학 주민교회 목사)는 성남 주민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40여명과 이윤수(민주당의원), 오길성(성남 지역노동조합총연합), 코라 인도대사관 참사관 등 1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연락처는 0342-757-8093

(1면에서 계속)

인 이상용씨, 이씨의 차남 이아무개씨, 이씨가 파출부로나가다가 알게된 아주머니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은 재판부에 이씨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인천, 안양, 수원 등지에서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1면에서 계속)

이후에도 미군병사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대한변협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씨와 다른 피해자에게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충분한 보상과 재판필요한 조치와 미군병사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4월중에 인권위원회를 열어 법률구조사업회를 통해 정씨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정씨도 손해배상청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운동본부)는 정씨사건의에도 "지난 3월 2일 동두천에서 미군헌병대가 아리랑 택시 운전기사 김지호(29)씨를 수갑을 채운채 연행하여 조사를 하는 등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운동본부는 다음주 중에 정·김씨사건을 포함, 이와 유사한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미대사관과 미8군사령관 등에게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알 림 ◆

□「시민과 변호사」 4월호(통권 3호)

-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상고심 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고류회」 자료집

- 「한일법률가고류회」 실행위원회 발간
·내용 ; 형사-오판의 원인과 극복(박성호)/노동-최근의 고용조정문제와 근로자과건법(이원재)/국제인권-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윤종현)/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과정(유선호)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민변 등
·주요내용 ;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전해철)/의학전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양길승)/인간존엄성을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고문(오환호)/고문후유증 사례-강환용, 김복영 등 11명/유엔고문방지협약/고문에 관한 의학자료(외국 번역문) 등

□성희롱사건 자료집 「침묵에서 외침으로」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요내용 ; "나는 이제 불이 되고 싶다"(우조교)/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진상/성희롱이란 무엇인가/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외국의 법적 대책;미국의 예를 중심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요약) 등

□여성의 전화 역음-쉼터이야기(도서출판 그린비)

- 쉼터(소개 및 안내서)
□함께 가는 길(3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요내용 ; 여연의 93년 사업평가와 94년 사업계획/3·8 세계여성의 날-알아봅시다/30대 직장여성들 공동육아추진 눈길등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3일 한승주 외무부장관에게 북한을 탈출한 벌목공들에 대해 인권보장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북한당국이 러시아내에 설치한 벌목장에 수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탈출, 정부측에 망명을 요청하거나 러시아를 떠돌며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벌목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할 것과 이들이 생명과 신체의 위엄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토록 하며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하는 데 법률상 어려움이 있다면 개정,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난민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난민에게는 송환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당해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보호받을 지위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상 기대"

민주당 내무위 소속의원 이보좌진과 내무전문위원 12명이 경찰행정의 문제점 및 해결의 대안을 담은 책을 펴냈다.

이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일반인이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생생한 자료를 분석, 정리해서 경찰의 문제점 뿐만이 아니라 대안을 대중적으로 공유해 보려는 의도에서 작업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93년 정기국회 후부터 우려곡절을 거치며 3개월여의 작업 끝에 완성된 「경찰」은 2장에서 여소야대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최근 북한과 중국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했다. 더불어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

다. 4장에서는 좀처럼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던 경찰교육,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자치경찰, 경찰부속기관 등의 개선방향을 다루고 있다. 직접 책을 집필하는데 참여한 한 비서관은 책을 낸 동기에 대해 "경찰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찰이 중립성,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집필자이기도 한 김충식(민주당, 내무위) 의원은 비서관인 최민희씨는 "경찰이 제출한 1차자료를 토대로 12명이 공부하고 토

정신대 114차 수요시위 법적 해결은 인권각성 계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이효재, 정대협)는 13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14차 수요시위를 벌였다.

정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신대문제의 올바른 법적 해결을 통해서 전쟁범죄 및 인권문제에서 후진지대인 아시아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른을 통해 집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경찰의 현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경찰이 민주적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중립성 확보할 수 있는 제도과 인사의 개편,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경찰상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개혁과 인권」 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제 엠네스티의 한국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힌 「개혁과 인권」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국제 엠네스티가 특별보고서에서 정치범과 양심수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고, 고문등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 엠네스티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면서도 시국사범의 성향, 안보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남북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국내의 인권단체들과 정부가 보는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시각차이도 설명했다(국판 90쪽/ 문의-법무부 인권과, 02-503-7045).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국제인권소식

21개국 민간단체 320여명 남아공 총선 선거감시단 활동

2000여명의 유엔감시단과 별도 공정선거 및 폭력방지에 주력

흑인차별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정부가 국내외 압력에 굴복해...

만델라의 대통령 당선에 거의 확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그 협상과정에서부터 수많은 폭력사태가 발생해왔다.

한편 민간단체와 교회단체들은 같은 해, 유엔이 파견하는 감시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

고 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정부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국제민간선거감시단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2000여명 규모의 유엔감시단과는 별도로 구성된 민간선거감시단은 92년 말부터 흑백갈등이 심한 지역에서 분쟁예방활동을 펴왔다.

1) 저명인사그룹: 각 나라의 영향력 있는 사회인사 및 교회지도자, 2) 전문가그룹: 갈등문제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람, 3) 감시단 실무활동가: 실제로 감시단 활동지역에 파견되어 대중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4-6주간 참여해야 한다.

민간감시단은 5가지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 ①폭력상황의 감시와 사건 발생시 객관적인 조사와 보고, ②필요한 경우 현장에서의 갈등 중재역할과 희생자 발생시 긴급조치, ③유엔감시단 활동의 공정성과 중립성 감시 및 보고, ④선거기간 동안 선거부정 등 불법행위 감시 및 보고, ⑤잠재적인 폭력 발생지역에 존재함으로써 폭력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함 이 그 역할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두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이의없이 한 목소리로 인정되어야 새 정부가 안정될 수 있고 오랜 숙원인 정치경제안정과 인종차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둘째, 선거감시단의 존재는, 특히 갈등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투표과정을 보호하고 폭력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

"권력자가 용서와 망각을 강요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가?", "과거 인권침해를 덮어주는 민주주의체제는 잘 지탱될 것인가?"

이해는 지난해 12월 2-3일 영국의 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CIIR, 소장 이언 린든 박사)가 개최한 국제회의가 물은 질문이었다. '진실에 대한 권리: 사면, 망각, 비밀'이라는 주제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망각과 잘못된 관용이 한 사회에 미치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다룬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발표자들이 말하는 각국의 생생한 경험을 들으면서, 최근 국제인권운동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불처벌(Impunity)의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는 이디오피아, 유럽, 파테말라, 한국(신혜수교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에서 온 발표자들과 영국 내 사회단체 및 명사들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의 노력이야말로 그 사회를 해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결론짓고 제도적 법적 대안과 아울러 진실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관심을 강조하였다(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는 교회제도와는 독립된 민간국제연대운동단체로서 민간단체의 국제교류와 제3세계 문제의 국제적 지원 추동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정보와 논평은 영국내에서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

아시아위치, 국보법등 거론

인권위치아시아(구 아시아위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석영, 노태훈, 조국, 김삼석, 김은주씨의 경우를 들었다.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살인누명 옥살이 김기웅순경 복직 결정

14일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태화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 판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김기웅(28)순경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살인죄는 진범이 불잡히고 대무죄가 확정된 이상 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당시 파출소 근무를 이탈한 사유만으로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 지난해 7월 26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한편 김 순경은 지난해 12월 진범이 불잡힌 뒤 12월 19일 대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나 지난 4월 8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여러분, 귀기울여 주세요. 이 억울함을!"

민가협 31차 목요일회 안기부 고문행위 규탄

14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 죽은동행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 주최의 제 31차 목요일회는 안기부에

불법연행되어 고문을 당한 양심수 가족들의 피해사례를 듣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피해사례 발표자에는 92년 9월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장창호(대구교도소 수감중, 12년

인터뷰: 김기웅 순경

- ▲경찰에 복직하게 된 소감은? -경찰복등을 새로이 지급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 ▲살인누명을 쓴 16개월동안을 회상한다면? -엄청난 경험을 했었다. 사실 그동안이 꿈만 같다. 지금도 피고인석에서 절규하는 꿈을 꾸곤 한다. 가족들도 내가 어딜 가면 꼭 함께 가곤 한다. 너무나 놀란 가슴이라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 같다. ▲경찰에 복직하여 하고 싶은 부서는? -원래대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싶다. 힘들기는 해도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대할 수 있고, 또 억울하고 힘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12명의 동료경찰을 가혹행위로 고소했는데... -나를 고문한 경찰들은 나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표를 쓰든지 해서 경찰을 빨리 그만두어야 한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판악경찰서로 재배치된다면? -주거지인 수원에서 근무하고 싶지만, 원대복귀된다 하더라도 더욱 더 당당하게 살아갈 생각이다.

행사안내

- 제5회 4월혁명상 시상식 및 4월혁명 34주년 기념토론회-사월혁명연구소(전화:888-3682) ·4월혁명상 수상자: 민가협, 임수경 ·일시: 4월 15일(금) 오후 2시 ·장소: 홍사단 강당 □『날마다 일어서는 부부』 출판기념회 -아시아 여성신학교육원 ·일시: 4월 15일(금) 오후 3시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

바로잡습니다

4월 14일자 '민주당 『경찰백서』 발간' 기사중에 "김충식(민주당, 내무위) 의원"은 "김충조 의원"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단체탐방 17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제 게 오직 하나 꿈이 있다면 이 어둡고 어두운 역사에 맞서 이 시대 장한 어머니로 살고 싶습니다. 애물단지 자식을 빼앗겼지만 증오도 원한도 없이 제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겠습니다. 그토록 티 없이 맑고 아름다운 두 눈 제자식 두 눈을 생각하면 험난한 삶의 비탈길 기어올라 죽음의 밑바닥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미지의 세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가야 할 모든 길 위에 놓여 있는 가시 돌진 이 아름다운 꽃으로 이 땅에 살아 있는 수많은 자식들을 위하여...” <Maria Del Rosario의 「어머니의 기도」 중에서>

위의 글을 민가협 어머니들의 기도로 그 제목을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전경들이 판을 치는 거리에서나 추위로 얼어붙은 철야농성장에서나 함성높은 집회장에서나 어머니들의 모습은 곧 개킨 옷가지와 행주질친 부뚜막과 아랫목과 다름 바 없는 푸근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왔다. 경찰의 연행을 몸으로 막아내고 최루탄 가루를 웃고름으로 틀어막고 난지도에 내팽겨치면서도 유치장으로 재판장으로 안기부로 교도소로 향한 어머니들의 발걸음은 멈춰진 적이 없었다.

민가협은 85년 미문화원정거농성투쟁, 민청학련 사건, 서노련 사건에서 구속된 수많은 학생·청년·노동자들의 가족들과 장기수 가족들이 모여 85년 12월 12일 만들어지게 되었다. 12월 28일 중구 삼각동에서 현판식을 하던 날도 경찰의 원천봉쇄로 현판식 행사가 무산되기도 했다.

민가협의 조직은 89년 양심수 후원회가 만들어지고, 91년 유가협이 독립함으로써 현재의 조직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조직은 공동의장 4인(상임의장 서경순), 총무(남규선), 간사 6인,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장기수가족협의회, 청년민주인사가족협의회, 구속노동자·농민가족협의회, 양심수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가족회원중에서 민가협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회원은 3백여명이며 후원회원은 1천여명이다.

재정은 이원화되어 후원회비는

100% 구속자 영치금과 출소장기수 지원자금으로 쓰이고, 민가협 운영재정은 어머니들이 서울대에서 8년째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장터와 그의 수익사업으로 충당한다. 민가협의 주요활동은 양심수 전원 석방운동, 보안법 철폐운동, 반고문

이 어둡고 어두운 역사에 맞서 이 시대 장한 어머니로 살고 싶습니다

운동, 재소자 인권개선운동, 조작간첩 진상규명운동으로서 인권개선을 통한 우리 사회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곳저곳에서 사회현실과 부딪치게 된 어머니들은 사랑의 폭을 넓히게 된다. 자식의 옥바라지에서 전제교도소의 처우문제, 자식의 명든 자국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고문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으로 나가는 등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를 고민하는 열린 가족이 된 것이다.

민가협의 주요한 활동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우선 긴급구명활동이다. 예고없이 발생하는 강제연행과 행방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고문의 흔적을 찾아 언제든지 달려간다. 일단 달려가면 끝이 없는 농성투쟁이 시작된다.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모르는 당사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선배(?)들이 나서서 도와준다. 때론 단식도 하게 되고 경비교도대나, 전경에 의한 폭력세해도 다반사다. 요즘은 숨죽 놀리고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실무자에게선 여전히 가쁜 숨이 느껴진다. 밀도 끝도 없는 독에 물붓기 같았던 그런 활동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대안들을 마련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싶은 것이 민가협의 소망이다. 최근에는 국제사면위원회, 로버트케네디재단, 아시아워치 등의 외국단체와 정보교환을 하는 가운데 인권침해 발생시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여러 단체에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고 있다.

둘째, '목요집회'와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있다. 목요집회는 민가협의 문제의식을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93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31회 열렸다. 목요집회가

이리 오래 갈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왜냐하면 문민정부하에서 설마 너 가둬두라 하는 기대를 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목요일에는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요구하는 민가협의 집회가 열린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은 5년째 열렸는데 형식과 내용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안해도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다. 세계, 정기적으로 양

심수 현황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양심수의 통계는 우리의 인권지수를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잣대였음을 누구나 인정한다. 민가협의 현재 통계로는 44년째 옥살이하는 김선명 할아버지를 비롯해 20년이상 장기수 27명, 조작간첩 7년이상 복역자 42명을 포함하여 3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어머니들이 주는 감동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내 자식, 남의 자식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들이 5년이상 복역중인 어머니중에는 자기 아들이야 형기가 있으니까 나올 것이니 수십년간 옥고를 치르고 있는 장기수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 파출부나 그의 험한 노동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민가협 활동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둔 분들도 있다. 몇분 어머니를 소개하자면 박용길 장로님은 창립 때부터 공동의장을 맡고 계시고, 전대협 송갑석의장의 어머니는 전남 고흥에서 농사를 짓다가도 상경하여 활동하고 다시 내려가 농사짓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올라올 때면 항상 대학생 자식들 먹인다고 음식을 해 갖고 오신다고 한다. 민가협 활동 중 가장 가슴아플 때는 어머니들이 구속될 때다. 재판의 부당함에 분개한 어머니들의 항의가 구속으로 이어진 일이 가장 많다.

민가협 사무실의 철문은 요즘도 열고 닫기가 어렵다. 안기부와 전경을 치른 지난 92년 안기부가 부수고 들어와 사무실을 털어간 일이 있는 후로 문이 온전치 못한 까닭이다. 그 문을 여러번 돌려 열어주는 배움을 받고 나오는 뒤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한 귀가와 세상일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

글 : <인권운동 사랑방> 류은숙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인권단체협의회 결성하기로

민간단체 공대위 성과 계승 인권현안 협의, 인권정보 유통등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칭, 인권협)가 발족된다.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한국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성우, 공대위)는 공대위의 취지와 성과를 조직적으로 계승, 인권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권협」을 발족할 것을 15일 12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열린 제4차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하였다. 또 오는 5월 23일(월) '공대위 해산 및 인권협 창립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공대위에 참가한 「민변」, 「민주법연」, 「민가협」, 「유가협」, 「불교인권위」, 「전국연합인권위」, 「천주교인권위」, 「한교협인권위」 등 8개 단체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창립하고, 공대위 참관단체등 다른 인권운동단체의 참가는 창립이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인권협」은 △인권현안에 대한 협의, △인권관련 정보의 수집과 배포, △인권교육, △국제인권활동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대표자회의에서는 공대위의 재정, 그동안 축적된 공동자료는 이후 결성될 「인권협」에 이월하기로 했다. 또 93년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아시아지역 민간단체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주도, 아시아지역에서 국가보안법의 후속사업을 맡게되었

던 공대위의 임무도 「인권협」에 이관하기로 했다. **로비의 오묘 양군모 해산**
93년 1월에 조직, 같은 해 10월부터 177일간의 농성을 벌여왔던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양군모)이 15일 해산하였다. 경제적 복직, 수배자 해제 등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면서도 자칫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양군모의 투쟁은 끈질긴 정치여론화와 조직적인 로비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양군모의 한 관계자는 "양군모의 투쟁의 성공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각계각층 인사의 서명작업, 정보의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활동의 유연성 등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삶을 살려는 회원들간의 굳건한 신뢰였다"고 밝혔다. 이런 신뢰때문에 「양군모 회원 29.9%의 소집면제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올리는데 그쳤지만 무리없이 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군모의 싸움으로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2년 이상의 실형을 살았거나,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중 27세(67) 이상의 사람이 소집면제를

민가협 4월혁명상 수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와 임수경(28)씨가 「사월혁명연구소」(소장 윤성식)에서 수여하는 '4월혁명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15일 홍사단 강당에서 출소장기수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4월혁명 34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윤성식 소장은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요구하였다. 또 민가협의 서경순 상임의장은 "4월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계각층의

사람과 연대해서 열심히 싸울 것"을 다짐했다.

희망새 3명 또 연행

노래극단 「희망새」는 허명순씨(26, 기악부장)등 3명이 부산시경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들에게 15일 새벽 6시 연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행은 지난 2월 22일 김민하 대표등 3명의 구속과 3월 24일 가수 이윤정씨 등 2명의 구속이 이어 3번째다. 연행자 명단 : 최경아(25), 안성혜(23)

여성이 쓴 여성이야기 출판

30·40·50·60대의 다양한 세대, 수녀·대학교수·사회활동가등 여러가지 직업을 가진 11명의 여성들이 쉽게 말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이야기를 『날마다 일어나는 부부』라는 책으로 묶어 15일 기독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윤정옥씨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소설가 박완서씨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느낌, 여성의 바램을 꾸밈없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평하고, 손덕수(효성여대) 교수는 "사적인 생활에서의 고백을 공적인 세계로, 나의 이야기가 이웃의 이야기를 끌어안을 것을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혜원(정대협 실행위원)씨등 저자 11명은 「아시아 여성신학연구원」(원장 한국영, 여성신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제1기 대학원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보사부의 94년 생계보호 기준은 국민의 행복을 추구 할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 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22일 보사부장관 을 상대로 낸 청구서에서 심창섭(88)·이금순(82)씨 는 "매월 받는 6만5천원의 생계보호급여로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보장은 커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고 말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리인 이남진변호사는 "이 금액이 생활보호법에서 기

준으로 삼고 있는 '건강하 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 지하는데 필요한 급여수준' 인가"고 반문하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 일박사와 한국국방연구원 원창희박사가 93년 현재 단 순히 육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생존적 최저생계비가 10만5천원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들며 "현재 시행되 고 있는 생활보호급여기준 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 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위헌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는 답변서에서

서 "이번 헌법소원청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권 리구제절차등) 요건을 갖 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적 법하더라도 생계보호기준 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적이 없으므로 기각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1994년 생계보호기 준 위헌확인' 사건은 3월 7 일자로 재판부(재판장 조규 관의 2인)에 회부되었다.

해고자 텐트농성 확산중

현재 20여곳

16일 전해투의 제7차 해 고노동자 결의대회를 앞두

고 해고노동자들의 텐트농 성이 확산되고 있다.

한진그룹과 태평양그룹 해고자들은 본사 사옥앞에 서 11, 12일에 텐트농성에 나서고 있고 다음 주에는 롯데그룹 해고자들이 롯데 쇼핑 앞에서, 럭키금성그룹 해고자들이 쌍둥이빌딩 앞에서 텐트농성을 계획하 고 있어 더욱 확산될 예정 이다. 지난 2월 22일 대구 대동공업에서 최초로 시작 한 텐트농성은 기아자동차, 세일중공업등 전국 20 여곳에 진행중이다. 이와 같이 1년여동안 민주당사 농성에 이은 해고자들의 텐트농성은 올해 임금협상 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행사 안내 ◆

□한국사회사연구회 월례세미나 -'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정진성 덕성여대 교수) 등

·일시: 4월 16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대 사회과학대 세미나실

□한국여성학회 월례발표회 - 여성학적 시각에서 본 세계가정의 해

·일시: 4월 16일(토) 오후 3시
·장소: 이대 인문대 교수연구관 111호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제7차 해고 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4월 16일 오후 2시/·장소: 종묘공원
·주최: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
·후원: 전해투 지원대책위, 전국연합, 전노대

□AI 한국지부 94년 1차 집행위원회

·일시: 4월 17일(일) 오후 1시/·장소: 대전 피카소호텔
·안건: ①AI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②장기발전위원회 구성
③AI 아시아 태평양지역 워크샵 참석자 결정

□장애인과 고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 실태조사 기자회견

·일시: 4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장소: 세실 레스토랑
·주최: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
·문의: 521-5364, 874-4009

□문익환목사 추모행사의 일부)-자택방문, 유품전시, 슬라이드 상영등

·일시: 4월 18일(월)-27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문의: 744-0714, 5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여성후보 및 실무자 교육 -한국여성사회교육원

·일시: 4월 18일(월)-20일(수)/·장소: 숭실대 사회복지관
·내용: 여성지방의회 진출의 의미, 선거준비와 지역연 동방안/·문의: 266-0467, 820-0114

인터뷰: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해온 한국사회정책학회 손준 규(동국대 사회학과 교수)회장을 만났다.

▲ 사회복지정책측면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 라고 말했는데 취지는 무엇인지

-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 판례인 '아사히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씨가 동경지방 재판소를 상대로 생존권문제를 제기했다. 이사건은 노조, 민주단체, 학자, 변호사 등의 후원을 받아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아사히씨의 권리행사가 수백만명의 생활보호자 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국 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권리의식과 사회복지 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을 주었고 일본 관리, 정치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법적 권리에 대한 관심 과 인식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 현재 생활보호법의 문제와 개선점은

-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정확히 조사돼야 한다. 그 대상은 18세 미만,65세 이상 노쇠자들로 한정짓고 있는데 '무차별평등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자식이 있 으나 전혀 보호를 못받는 노인의 경우등이 제외되고 있 는데 규칙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다.

둘째 생활보호비로 월6만5천원이 지급되는데 그 금액 에 대한 근거가 없다. 생활보호비 수준이 과학적으로 산 정돼야 한다.

세계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백만원에서 많게는 8백만원정도의 전세에 살지만 죽고나면 그 전세돈이 공중에 뜨는 경우가 자주 생기기 한다. 3백만원이라도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돈인가.

▲ 이후 계획은

- 헌법소원이 기각되던 각하되던 그 자체로 의미를 띤다. 한국사회정책학회는 계속 생존권의 문제를 주장하고 법적 으로 청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화 작업과 후원단체들의 참여가 문제로 나선다.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 (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주심 강승준 판사)는 18일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필 명)씨가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도 교수 신아무개(52)씨와 서울대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 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 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성희롱 사실이 없었 으며 원고가 지난해 8월 조교직에서 해임된데 불만 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 고의 법정진술과 전임조교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필요이상으로 20-30차례에 걸쳐 포옹자 세를 취하고 둘만의 산책 이나 여행 등을 집요하게 요구, 원고가 정신적 고통 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또 "피고는 조교의 책임 용과정에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수라는 지위 가 조교의 책임용에 상당 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의 거 절이 책임용탈락이라는 보 복인사로 이어졌다고 불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근로 자에게 지휘·명령·인사권 을 가진 자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근로 자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때는 법률상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 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립대 학교 총장과 국가는 교수 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 는 현실에서 간섭할 수 없 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 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 였다.

또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행위에 원

고가 적극적으로 거절했어 야 했다"며 원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우씨는 자신이 조교로 근무한 지난 9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교수가 뒤에서 꺼 안는가하면 동산여행 등 원치않는 데이트를 집요하 게 요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신 교수 등을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냈었다.

(2면에 관련기사)

민가협 민주당사 단식농성 돌입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 협)는 민주당 마포당사 이 기택 대표실에서 18일 2시 부터 무기한으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가협은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영삼 정부 출범 1 년간 양심수가 250여명에 달하고, 이중 국가보안법 적용자가 160명으로 64% 에 달한다"며 대표적인 한 국인권의 침해자인 국가보 안법을 당장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가협은 지난 1년동안 이루어진 사 면조치에 대하여 형기를 며칠 앞둔 양심수를 석방 하는등 기만적인 사면조치 에 불과했다며, 44년째 옥 살이를 하는 김선명씨를

비롯하여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잠 안재우기 등 의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고 요구했다.

연락처: 711-3301-3

◆ 공 판 안 내 ◆

□4월 19일(화)
·이진삼, 폭력행위등, 422호, 10시, 선고
·김택기의 2, 국회 증인·감정법 위반, 319호, 10시, 선고
·조정희, 군무이탈, 육군고등법원, 10시 30분, 선고

□4월 20일(수)
·최문실, 국가보안법, 318호, 10시, 선고
·배진성, 업무방해, 317호, 10시, 9회
·장운, 국가보안법, 425호, 2시, 3회

□4월 22일(금)
·안훈찬의 1, 국가보안법, 311호, 10시, 선고

◆ 바로잡습니다 ◆

4월 16일자 '인권단체협의회' 관련기사중 '공대위'의 참관단체도 창립의 중심단체인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휠체어타고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기'
'장애인체험' 행사
 20일 장애인의 날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녹색교통운동」(운영위원장 정운광)과 「장애우권의 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는 18일 세실레스트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과 노인·아동 등이 교통수단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명정치인, 장애인, 사회단체 임원, 일반시민 등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민대행진'에서는 20일 10시 탑골공원에서 시작, 일반인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장애인이 교통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장애인체험 등을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회견에서 이철용 장애우권문제연구소 이사는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료승차권을 주기에 앞서 취업이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하철에 최소한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KBS와 MBC에서 특집과 정규방송으로 10-12시, 8-9시에 다루어진다.

AI 한국지부 사형제도폐지 촉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4월 18일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464명의 서명과 사형제도가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규정한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냈다. 한국지부는 이 서한에서 사형제도가 △90여개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듯이 세계적 추세이고,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죽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형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등의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형벌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50여명의 사형대기자에 대해서 우선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중에 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지난 4월 4일에도 KNCC 인권위 사형폐지분과위에서도 폐지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해고자 원직복직'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전해주 위원장단 10명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전해두)는 16일부터 조준호 위원장 등 10여명이 해고·구속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석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 전해주 집행부 30여명도 이날 삭발단식을 하였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시민, 해고노동자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7차 해고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대회참가자들은 "김영삼 정권은 지난해 3월 해고노동자 5천3백여명에 대한 원직복직 방침을 밝히고서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출연투자기관 해고자 즉각 복직, △방위산업체 해고자 복직, △노동통계정책과 노동운동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박정기씨 고려병원 입원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퇴원
 박정기(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대표)씨가 지난 15일 지병인 심근경색증으로 고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지난 12일 고려대 병원에서 퇴원했다. 문씨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 고문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성희롱' 재판 기자회견

우영은(필명)씨,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대책위」, 서울대 총학생회 등은 재판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아래는 회견내용 요약).
 □우영은씨 : 우씨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승리를 해 기쁘다"라고 첫소감을 밝히고 "성희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같이 싸운 결과이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많은 여성이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책임용을 했으면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해고된 후 다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같은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여럿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대자보를 쓴 것이다. 압축적으로 표현하려다 잘못 전달이 되었다"고 밝히며 책임용달락의 분풀이로 보는 시각에 일침을 놓았다.
 □성희롱대책위 : 대책위는 "성희롱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전제하고 "여성 특히 직장여성들이 당하는 성희롱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과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학당국과 국가의 책임을 판례로 남기겠다"며 항소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직장여성에게 성희롱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바로 인권을 가진 혹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성희롱을 거부하는 것은 곧바로 해고되거나 해고의 압력을 받아야 한다"며 "사업주의 무과실도 책임을 지는 산재보험처럼 사업장내에서의 성희롱도 무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총학생회 : 강병원(서울대 총학생회장)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을 표시했다. 또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걸맞게 신야무개교수와 대학본부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미 학교내에서는 신고수의 퇴진은 움직일 수 없는 대세"라고 서울대의 분위기를 전했다. 강씨는 판결에 대해 "성희롱대책위와 서울대총학생회 등이 성희롱 사건을 중대한 사대로 규정하고 수차례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제안을 수차례 했음에도 대학본부에서는 신고수와 우씨간의 문제로만 보는 듯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대 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우씨는 자신이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번역했다가 출판한 『이것이 성희롱이다』의 필명인 '우영은'으로 불리기를 원했다.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휠체어사용자에 지하철은 금단의 땅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 시각장애인도 지하철 이용 곤란

1백 13개 수도권지역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3호선 학여울역 한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블럭과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2호선의 합정역에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교통운동」(운영위원장 정운광)과 「장애우권의 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는 수도권지역의 183개 지하철역중 95개역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합실은 △매표소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찾는 데 어렵고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자동개찰기가 없고 비상개찰기가 있어서 호출하더라도 안내원의 반응이 없는 곳이 34곳(35.8%)이나 되었다. 또 서울시지하철공사 113개역

중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19곳(17%)에 불과하고 △화장실 가는 길에 계단이나 턱이 없는 곳은 종합운동장역 단 한 곳뿐이며 이외에도 화장실 내 시설물의 높이가 너무 높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밖에도 갈아타는 환승로의 계단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않는 등 곳곳에서 장애인도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올 세번째 출판인 구속
 19일 '일터' 박치관씨

<우리네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38)씨가 19일 오전 9시경 서울경찰청 장안동

보안분실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10시30분경에는 일터출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어 「용해공들」 2백여권과 디스켓 등을 압수당했다. 박씨는 작년 10월말경에 발행된 북한의 리택진의 「용해공들」의 출판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씨는 지난 3월 일빛출판사 대표 이성우(38)씨와 협출판사 대표 김연인(32)씨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 구속된 출판인이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발행!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93년 8월부터 94년 2월초-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였습니다.

주제별 색인을 넣어 특정사건을 찾아보는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인권상황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연구자 등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우송해 드립니다.

값 : 1만 5천원

(4월 현재 구독료 납입총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이 실태조사 결과 객관적 수치로 입증되었다. (2면에 관련기사)

7월말 아태 시회의 열려
 한국지부 양심수인의 밤등 준비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17일 열린 94년 1차 집행위원회에서 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원중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장기발전위원회는 재정자립화와 활동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사업으로 벌이게 되며 사업결과는 내년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오는 7월29-31일까지 한국(장소 미정)에서 열릴 '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 병행사업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벤트사업으로 한국지부에서는 △양심수인의 밤 △기차회견 △아태 앰네스티 밤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앰네스티 지부와 그룹, 국제사무국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년마다 열리는 아태지역 회의는 자발적인 협의구조이며 아태지역 이외에 아메리카·유럽·아프리카·중동 등 5개 지역회의가 있다. 이밖에도 22-24일 열리는 앰네스티 아태지역 워크샵에 한국지부는 기금조성 담당자와 그룹지원 담당자 2명이 참석한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장애인 문제는 한국사회구조와 밀접

전장협 아카데미 4.21-5.20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장애인운동을 할 것을 표방하고 있는 '전장장애인가족협회'...

'올바른 역사란 무엇인가' (박준성), '한국자본주의의 진단' (박규호), '현시기 한국의 민중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종박) 등 4강좌와 '평등의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한국자본주의에서의 사회복지 현황' (김기덕), '한국자본주의와 장애인 문제' (이경미), '한국의 장애인들, 무엇을 할 것인가' (김대성) 등 5강좌가 진행된다.

전장협 아카데미 제1기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오후 7시 향린교회에서 열린다. 문의처 : 749-0343,4

ACFOD 사무총장 한국인권단체 방문

방콕소재 아시아지역 인권조직 ACFOD(Asia Culture Forum Development)의 사무총장 분탄 (Boonthan.T. Verwongse) 씨가 아시아 순방일정 겸 한국인권단체 방문을 위해 20-24일까지 방문한다.

위하게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ACFOD는 지난 91년 아시아 민중단체 회의인 Peoples Plan 21 대회와 92년 세계인권대회 아시아 지역 NGO(비정부조직)준비회의를 주도했다.

알림

□나눔의 집(정신대 할머니들 쉼터) 이사

주소 : (110-530) 종로구 혜화동 5-31

전화 : 745-1854

□윤금씨 살해혐의 케네스 마클 대법원 판결

일시 : 4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대법원 제1호 법정

재판부 : 대법원 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일시 : 4월 20일(수)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 탑골공원(10-11시), 탑골공원~마로니에 공원

주최 :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민가협 단식농성 풀어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1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 30여명은 19일 단식농성을 풀었다.

양심선언 조정희씨 '유죄'

육군고등법원(재판장 군판사 이홍우 소령)은 19일 군무이탈혐의를 받아 기소된 조정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인터뷰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러행사가 벌어진다. 이에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의 주관단체중 하나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정열 실장에게 장애인의 날과 관련된 몇가지 의견을 듣는다.

▲장애인의 날에 벌어지는 여러행사가 대부분 전시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장애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은 좋다. 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는 일을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장애인의 날이 지난후에 사회적 관심이 다시 사그라져 버린다면 평소에 홀대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는가

▲장애인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장애인도 같은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장애인은 뭔가 특수하거나 결함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가진 인간'(Differnt abled Person)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요즘 '접근권'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접근권과 관계는?

- 지하철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에게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복지사회를 강조한 5공화국에서 장애인들의 문제가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88년의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주제로 나서야 장애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발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장애인 자유로운 이동권 절실하다”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정치인등 휠체어타고 직접 체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녹색교통운동(운영위원장 정윤광)·교통장애인협회(회장 임종일)가 주관하는 '제도약자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이 20일 탑골공원에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정대철(민주)의원은 축사를 통해 "4백만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대변인으로서 제도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 회측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넘어

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구조는 해마다 5만명의 교통장애인을 양산하는 '제도적 폭력'으로 자라나고 있다"며 "장애인·노인·어린이의 교통권을 확보하는 일은 결코 교통 소외계층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는 일이다"고 선언했다.

1부 행사를 마친뒤 참석자들은 최형우내무부장관, 이부영의원, 이철의원, 김말룡의원 등이 휠체어에 타고 도보·지하철·시내버스를 이용해 다음 행사 장

소인 마로니에공원으로 향했다. 1시간에 걸친 행진은 명사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보도턱, 횡단보도, 지하철 계단, 버스승차를 지나면서 교통약자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3부 행사는 마로니에공원에서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발표' 및 장애체험 참가자들의 소감 발표와 노래공연으로 마련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한 이윤수의원은 "지하철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음을 느꼈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반드시 설치돼야 하겠다"고 느낌을 말했다.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내

개학 이후 학교가 폐교돼 마을회관에서 학부모와 공부중인 두밀리분교 학생들이 19일 이석태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밀리분교 학생들은 학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낸 가처분신청에서 "두밀리분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날라다가 교사를 짓고 운동장의 터를 다져 건립한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구심점"이라면서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목으

로 2월 28일자로 학교를 폐교한다는 결정은 헌법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교처분은 헌법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의무교육의 권리'를 위반하였으며,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조 및 4조에 의해 학교부지, 교실등 각종 교육여건을 다른 곳에 우선하여 마련해야 하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폐교한 것은 진흥법에 위배되어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급히 정상적인 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늦봄 문익환목사 추모행사 안내◆

- 자택방문 및 유품전시 : 4월17-27일, 오전10-오후5시
추모사진전 : 4월21-30일, 명동성당 문화관
추모예배 : 4월26일 18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추모좌담 : 생애와 사상, 26일 18시, 기독교회관 2층강당
통일대토론회 : 27일 오후3시, 기독교연합회관 소강당
묘소참배 및 묘비제막식 : 27일 11시, 마석묘란공원
추모공연 : 27일 오후7시, 연세대 노천극장

◆행사안내◆

-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토론회
21일(목) 오후 2-6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 통일시대 준비위원회·민주대학
주제발표 : 남한의 인권문제 (한상범 동국대 교수), 북한의 인권문제(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 발기인대회
21일(목) 오후7시, 명동 전진상교육관

다. 휠체어를 타고 버스로는 서경석경찰서사무총장은 "국가경쟁력보다 복지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김삼석씨 조사 안기부원 성추행고발건

서울지검 윤석정부장검사는 지난 15일, 19일에 이어 20일에도 김삼석씨를 불러 안기부원이 성추행했다고 고소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10월20일 윤미향씨는 남편 김씨가 안기부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고발장을 낸 바 있다.

문목사 추모행사 줄이어

문익환목사 사망 1백일이 되는 27일을 전후하여 추모행사가 줄이어 열리고 있다. 문목사가 생전에 준비하던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 주최로 사진전·추모공연등을 마련했다.

● 국제 인권 소식 ●

콜롬비아 군과 경찰, '사회정화'라며 살인 일삼아

콜롬비아에서는 정치적 살인이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주요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전국가톨릭연합위원회」는 88-92년 동안 1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살해되었다고 밝혔다. 주요범죄자로 의심받거나 확인된 사람들은 중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주로 야간에 집박으로 끌려나와 정체불명의 차에 태워진다. 이들은 종종 길가나 하천, 쓰레기장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시체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다. 부랑자·도둑·창녀·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동성연애자 등을 포함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일상적인 살육행위는 군과 경찰에게 부여된 면책특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 관례화된 군의 면책특권은 군의 잔인성을 증폭시켜 왔는데,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군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군 중에서 재판에 회부된 자는 거의 없다.

반면 92-93년동안 인권단체들은 영향력있는 언론매체와 고위 군관계자의 비난공세와 물리적 공격에 시달려왔다. '크레도스'라는 인권단체의 회원 3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다른 회원들도 협박당하고 결국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다. 이러한 협박과 폭력이 인권단체 회원들에게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며 희생자의 가족도 같은 위협에 처해 있다. 변호사들 역시 실종되거나 살해의 위협을 받거나 살해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콜롬비아 정부가 인권운동의 합법화를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보안군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 "남한, 북한벌목공 탈출 노동자 망명인정 피난처 제공해야"

러시아나 북한벌목공 탈출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여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정부의 통계발표에 따르면 망명신청을 한 사람은 약 1

백70명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북한 탈출노동자들의 정치적 망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국내의 비판적 여론이 들끓자 지난 2월 25일 김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가칭 '북한난민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는 탈출 북한노동자들의 정치적 망명 요구를 국제난민기준과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해 처리해야 한다"며 "반드시 이들의 피난처를 제공해 줄 것과 이 문제의 논의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 반영해 하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92년 12월과 93년 2월에 북한벌목공 탈출노동자 3명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으며, 92년 12월부터 '월남 귀순용사 특별법'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개정했다.

또한 정부는 93년 3월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51년협약'과 '67년 의정

서'에 가입했다.

앰네스티, '한국방문의 해' 맞아 전국교도소 표시 엽서 발간

앰네스티는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김영삼정부에서도 300여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다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등의 위치가 표시된 우편엽서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 단체 간 행 들 ◆

□양심수 후원회(30호, 20쪽)-민기협 양심수 후원회
출소장기수를 찾아-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김영만)/김광삼 선생님 추모글-고귀한 삶을 사시었으니/양심수 가족(안금득)을 찾아뵙

□평화의 일꾼(12쪽)-천정연 장기수가족후원회
내가 아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함께 생각해 봅시다-인권이야기/인물탐구(권양섭 선생님)-다정이네 할아버지 살맛나네등

□정신대문제 대책활동소식(제5호, 14쪽)-정대협
고소·고발장 경과보고-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자 처벌요구 높아져/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참석보고/국회의원 간담회등

□국제앰네스티(94년 4월호, 20쪽)-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현황/한국인권운동의 과제(오완호)/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실종문제)/인간존엄성을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고문/남한;신정부하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북한-양심수;시바타의 가족등

□양군모 자료집(220쪽)-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양심군 문제는 한국인권상화의 한단계/하나,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성격과 의의에 대하여/양군모 투쟁 총평 좌담회/젊은이들에게 주는 글-김근태, 김상복, 정대철/활동보고와 평가-정치여론전, 양군모 조직은 이리했다/양군모 투쟁일지/언론을 통해서 본 양군모투쟁등

□사월혁명회보(94년 4월, 통권 32호)-사월혁명연구소
독일 통일교육에서 본 한반도 통일교육의 신좌표(전종득)/바른 언론을 위한 국민운동의 과제(정동익)/귀족작위와 서울법대(조영진)등

□함께가는 여성(94년 4월, 통권 80호)-한국여성민우회
지역차이와 여성-지역사회를 위한 자원활동의 의미/사진으로 보는 제10회 한국여성대회/성폭력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지회소식등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비폭력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사상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라 (곽노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북한인권 거론 앞서 정보공개 필요”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일시대 준비위원회(대표 정대철)와 민주대학(이사장 김상현) 공동주최로 21일 오후 2시 1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남한인권의 실상과 대책’에 관해 한상범(동국대 법대)교수가 발표를, ‘북한의 인권과 대책’에 관해 조갑제(월간조선)부장이 발표했다.

한교수는 남한의 인권상황을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단체들의 목소리를 빌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로 △정치권력의 민주화 △관료주의적 병폐의 타파, 행정공개와 참여 △국회 국정조사권의 활성화와 통제장치기능의 가동 △사형폐지의 문제와 엄벌주의적 응징제도의 검토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는 권력의 반인간화를 어떻게 방지·예방하고, 그 진상을 어떻게 청산해 나가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부장은 주재발표문에서 “굶기기와 집단치형은 북한사회의 통치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 벌목공들의 탈출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을 말하며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통일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인권이라고 보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수준

을 남한주민의 인권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이 통일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종합토론에서 김종철(한겨레)논설위원은 “김영삼정부 1년간 극단적인 고문·인권탄압은 사라졌으나 근본적으로 법체계가 민주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부장의 발표에 대해 언론인과 정치인이 1차적으로 사실을 확인한 뒤 진실이 확인되면 “남한의 인권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민족적 애정을 갖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한(법과 인권연구소) 소장은 조부장의 의견에 “과연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볼 때 북한을 한민족이

라는 입장에서 보려고 했는가”며 한계를 지적했다. 여기에 박홍규(영남대)교수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오히려 국제인권운동단체들의 북한소식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체제등이 다른 상황에서 절대적 기준이나 통일된 기준으로 남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부장은 “북한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으나 노태우정권이후 정보가 개방되었고, TV 방송을 통해 북한소식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반박하며, “의지만 있다면 북한 소식에 대한 정보는 여태껏 월남한 5백여명을 통해 북한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

법무부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은 아직 사형이 형벌의 종류로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어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 산하 사형제도 폐지분과위(위원장 문장식)가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지난 4일자 청원에 대한 19일자로 보낸 답신에서 이와같이 주장했다.

이 답신에서 법무부는 “사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

치를 부정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이며, 오만의 잘못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폐지주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폐지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법개정안에 사형을 규정하는 범죄를 줄이고, 사형의 선고에 신중을 기하는 규정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인권의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민주화의 핵심은 인권이고 인권의 개념은 남북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달리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남북한 인권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현상황 아래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얘기했다. 김일수교수는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인권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밖에도 김동한소장은 인권을 권력과의 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환경·장애인문제등을 들었다. 김일수(고대 법대)교수 역시 약자들에 대한 접근, 낙태의 문제나 지역문제로 인한 차별성 문제 등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작간첩 석방하라” 민기협 목요집회

민기협(상임의장 서경순)의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2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 최대 피해자인 조작간첩 장기수 사형발표’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남북여부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11년만에 보안사에 불법체포되어 조작간첩이 된 이상철(12년 복역중)씨의 동생 이상수씨, 무기수인 김성만씨(10년째)의 어머니 최인화씨, 장의균(7년째)씨의 부인 윤혜경씨 등 3명이 진상규명과 조작간첩사건 양심수의 석방을 주장했다.

단체탐방 18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 새파란 검사 나으리를 영감님이라 부르는 사회, 거리에서 경찰이 부르지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회, 법대를 가면 으레 고시원에 입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여기에서 법은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지배하는 법이고,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접근 가능한 것이고 반민주약법이나 개악이니 하는 구실수에 오르기가 다반사이다.

이런 우울한 생각과는 대조되는 화창하다 못해 하늘이 함박웃음을 터트린 것같은 날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회장인 박노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얼마전에 열렸던 민주법연 주최 심포지엄 "한국 사회의 법과 민주주의"의 포스터가 큼지막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내려다 보는 가운데 민주법연의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조직화의 길을 걷게 된 민주진영에 합류하여 88년 부터 여러 분야의 학술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이때 전문연구역량을 갖추고 시작한 다른 학술단체들과 비교할 때 가장 적은 인원이 그리고 학생을 대부분의 구성원으로 하여 출발한 것이 민주법연이다. 89년 1월 5일 창립당시 민주법연의 구성원은 교수 1인과 박사과정 초년생, 석사과정 학생들이 대부분인 12인에 불과했다. 고시법학, 지배법학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이들이 택한 길은 실천법학, 과학적 법학, 민주적 향성을 띤 법학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것 자체가 법학계에 있어서 충격이었고 허약하게만 보였던 소수로써 세상에 띄운 첫배는 「민주법학」 창간호였다. 반민주약법에 대한 해부와 노동유정권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내린 창간호에는 최하 84학번을 포함한 창립회원 전원이 논문을 게재했다. 그리고 89년 공안정국 하에서 공안합수부의 불법성을 주제로 한 「민주법학」 2호와 심포지엄 2회의 결실을 모아 연말에는 35명으로 회원도 늘어나고 「민주법학」이 출판사를 통해 정식출판된다. 「민주법학」 1,2호는 당시 초대회장이던 장경선 교수의 연구실에서 10여명이

두달여를 복적거린 끝에 처음부터 끝까지 회원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이 과정 자체를 회원들은 '환회'로 표현한다. 나이나 학문의 차이를 넘어선 조직내의 민주적 권리와 참여에 대한 신념이 상호존중과 배려를 안은 조직내부의 민주적 질서를

인간과 조직과 규범에 대한 충실, 법학에 대한 신념이 충만한 젊은 패기

창조하려는 노력으로 모아졌다. 약자,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우선시하면서 저마다의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노력, 말그대로의 '환회'의 체험속에서 한페이지 한페이지가 채워져갔다. 이때의 경험이 민주법연을 지금껏 지탱해 하고 발전케 한 가장 큰 힘이었음이 분명하다.

박 회장은 민주법연의 회원들 하나하나가 민주법연에 속한 일인의 회원이 아니라 각각의 직장파 학교에서 법학운동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이므로 민주법연을 하나의 지도자 훈련학교로 생각한다. 과거 국보법에 대해 쓰여진 글들이 빨간줄이 쳐져 지도교수의 책상에 올라가는 일이나 민주법연의 이름을 내건 활동이 구실수에 오르거나 조국 교수의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회원들이 겪어온 어려움은 결코 만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의 인간과 조직과 규범에 대한 충실, 법학에 대한 신념은 강하기만 하다. 법학은 인식에 머물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실용적이고 삶과 항상 함께 있는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므로 법학의 발전이 진보진영에서 평장히 중요하다고 여긴다. 법학자 자신이 제도전문가로서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법과 인권에 대해서는 법의 이면이 권리이고, 그중 도덕적, 보편적 권리들만을 인권으로 본다. 그래도 인권의 영역이 넓기만 하므로 자기 전공영역에서의 법제가 인권영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항상 고려하는 관점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국내의 인권법의 체계적 연구 및 정리가 필요하다. 그 범위가 넓은 만큼 이를 관통하는 원칙을 세우고 분야별 연구와 관련 제도 및 기구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인권운동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다. 민주법연의 회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어떤 형식으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연구를 남겼다. 그래서 민주법연이 국가보안법의 전공자로 인식돼 왔고 이 부분이 인권운동에 제일 기여한 바가 있지만 앞으로는 관심을 다양화하여 민주법연내에서 인권법(주로 국제인권법에 대해)을 연구하는 층이 두터워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50여인으로 늘어난 회원들간에는 15-18년의 연령차와 조건의 차이가 있다. 이에 나타나는 동료 동지 의식의 갈등을 극복하고 민주법연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민주적 질서속에서 우리나라는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항상 주된 고민이다. 조직내 민주주의를 근거로 하여 최근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심포지엄이 보여준 가능성, 성과들을 결실 맺을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16개대 학생회와 20개대 교수들이 참가하였는데 일반법대생 대학원생 중심으로 순회심포지엄등을 개최하면서 법학교육운동과 사법시험제도 개혁문제를 내걸 것이다. 고시법학의 틀을 깨고 법학의 영역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중사업을 기반으로 민주법연도 자신들만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폭을 넓혀 진보적, 민주적 법학 운동진영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 행사 안내 ◆

-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제1차 거리서명운동
 - 주최 :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 일시 : 4월 23일(토) 오후 2-6시
 - 장소 : 서울 YMCA앞·수원 전철역앞·안양 전철역앞등
 - 문의 : 한국여성의 전화(269-2962/4)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6차총회 및 기념식
 - 일시 : 4월 23일(토) 오후 4시
 - 장소 : 종로성당(종묘공원 오른쪽)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비폭력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사상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라
(곽노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원진 작년 합의후 해결된 것 없다

노동자들 재취업보장, 산재병원 설립, 원진재단 노동자 참여 요구

원진문제 해결을 위한 작년 11월 9일의 노사정 합의 이후에도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 원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도, 원진비대위)에서 '원진레이온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23일 갖기로 하는 등 다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원진비대위는 작년 합의 이후 직업법에 대한 민사배상등을 담당해야 할 원진재단 이사에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부인들이 임명되어, 폐업이후 발생한 35명의 직업병 환자의 배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진비대위에서는 노동자의 대표의 재단이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합의 이후 11

월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원진노동자 정부투자기관 재취업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당정은 원진 노동자들을 정부투자기관 제2기 서울지하철공사나 남양주군 영화종합촬영소 등의 신규인력 채용시 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진비대위는 지하철공사는 6월경에 공채예정이고, 촬영소는 95년 9월경부터 부분가동하나 용역업체에 맡길 예정이라서 실제로 원진노동자의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기업에 취직하려는 원진노동자들도 특수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취업이 안되고 있다.

또 작년 합의성에서 직업

병 환자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산재병원을 건립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노동부는 "산재종합병원 설립계획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특수건강검진 결과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환자로 판정받은 노동자는 32명이며, 8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340명에 이른다.

한편 한국산업은행에서 원진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기업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원진합의서 이후 법원에서 원진이 파산선고내려지는 11월 30일 이전에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임직원 부인을 이사로 임명하여 11월 23일 법원 설립동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에 임원을 사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순심씨 석방 서명운동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1차 서명운동이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안양·수원 지역에서 4시간동안 진행된다. 3월 21일 결성된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에는 이순심씨를 아는 이웃사람을 포함해 수원 문화원 주부대학 동문회, 수원여성회, 안양YWCA, 인천여성의 전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등 20개 정도의 단체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방청인단은 재판방청은 물론 서명운동 작업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와 수원여성의 전화에서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그린피스 24일 출항 경찰등 행사 방해도

지난 4월 12일 한국을 방문한 그린피스호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출항한다. 그린피스는 서울·부산·광주·인천 등 대도시와 삼척·영광·울진 등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조사사업을 진행시켰다. 각 지역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임직원 부인을 이사로 임명하여 11월 23일 법원 설립동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에 임원을 사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발행!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93년 8월부터 94년 2월초-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였습니다.

주제별 색인을 넣어 특정사건을 찾아보는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인권상황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연구자 등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우송해 드립니다.

값 : 1만 5천원

(4월 현재 구독료 납입총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목숨을 건 해고자들의 단식·텐트농성

정부·사업주 모른채 해고무효 승소자도 복직 안돼

해고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1년 이상을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나 기업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복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확정 판결을 받은 21명 노동자도 복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복직후 곧바로 재해고되고 있다.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사법기관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된 해고자 우선복직(105명) △정부관련 투자출연기관 해고노동자의 복직(147명)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조치(14명) △기타 해고노동자 873명의 복직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삭발·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조준호 위원장등 12명은 지난 4월 16일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7일째 삭발·단식중이다.

태평양 해고자 텐트농성 태평양그룹 15명의 해고자들은 지난 4월12일부터 용산 본사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텐트농성에 들어갔다.

태평양 해고자들은 92년 12월말에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복직투

쟁을 벌여왔다. 작년 12월부터 회사측과 7차에 걸친 복직문제를 협의하다가 진전이 없어 텐트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고자 한때 연행복직을 요구하며 4월11일부터 한진그룹 본사(남대문로 해운센타빌딩) 앞에서 텐트농성에 들어가 한진그룹 해고자들은 4월 20일 오전 7시경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집 앞에서 회견을 요구한다. 경찰 40여명에게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진중공업 해고자 임창수씨가 쓰러져 한때 의식불명에 빠졌으나 21일 오후에 퇴원하였고, 다른 해고자들은 20일 오후 11시경에 전원 석방되었다. 한진그룹측에서 텐트를 철거했으나 해고자들은 다시 설치하고 계속 농성중이다.

대우그룹 해고자들도 부평 대우자동차 정문앞에서 텐트농성을 벌이려다 21·22일 이틀째 관리자들에게 쫓겨났으며, 롯데그룹 해고자들은 롯데백화점 앞에서 텐트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전해투 지원대책위원회는 26일 '해고노동자 삭발단식농성에 대한 긴급확대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리 말과 글을 아끼는 분들을 모십니다

『겨레말 갈래 큰사전』 출판기념회

때 : 94년 4월 25일 7시
곳 : 명동 YWCA 대강당

한글문화연구회(이사장 박용수) 가족 울림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김재열의 3인 공동대표)는 21일 대법원 형사3부측에 '윤금이씨 살해미군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운동본부측은 수사와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사건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료 미군 램버트상병의 범행 가담 여부'에 의혹을 나타냈다. 운동본부는 "1심 재판부도 판결에서 램버트의 행적에 의심을 표명했는데 담당검찰과 재판부는 이를 규명하려는 노력도 없이 재판 일정을 진행시켰다"고 실망을 표명했다. 더욱이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징역 15년의 선고는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며 마클이병에게 범죄에 합당한 법정최고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운동본부측은 29일 열릴 대법원 판결이 원심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우려하며 형량의 적음보다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케너스 마클이병을 구속시킬 것과 불합리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임을 밝혔다.

운동본부의 전신인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벌인 '살해미군의 처벌과공정한 재판권 행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10만명이 서명했고, 재판에는 연인

원 4천명의 시민,학생들이 재판방청을 했다고 운동본부는 전했다.

한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0.7%에 불과하다고 밝힌데 반해 미군범죄에 대한 해당국의 형사재판율은 NATO 52%, 일본 32%, 필리핀 21%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지킴이' 지원 쇄도

제2기 '지킴이' 교육이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서초사회복지관에서 성폭력상담소 주최로 열린다. 지난해 배출된 1기 65명(남자 11명 포함) 지킴이들은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위기센터를 24시간 지킴이 피해자들의 전화접수를 받고 있다. 2기 지킴이는 여자 66명, 남자 15명인데 추가모집을 받고 있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기 여성지킴이들은 전화를 통해 기초상담도 받게할 예정이다.

위기센터에서 받는 위기상담은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뒤 48시간이내에 연락하거나 증거채취가 가능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어서 일반상담보다 횟수가 적으나 지난 4개월동안 70여건을 받은 것으로 성폭력상담소 노주희간사는 전했다. 더불어 성희롱사건의 승소 판결의 영향으로 상담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그는 내다보았다.

◆ 행사 안내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6차 총회 및 기념식
·때 : 4월 23일(토) 오후 4시
·곳 : 종로성당(종묘공원 오른쪽)

□원진레이온 이행 및 산업재해·직업병 예방대책수립 촉구 결의대회-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때 : 23일(토) 오후 2시
·곳 : 명동성당(종각-탑골공원-종묘공원까지 평화행진)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비폭력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사상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라
(곽노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영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수사기록 등사거부는 위헌적 행위다"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권리 침해"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4월 16일 박성호변호사 등 5인의 변호인단의 이름으로 서울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3월 21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용찬씨의 변호인인 김선수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35조에 근거로 서울지검 황교안검사에게 수사기록의 등사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박성호변호사등은 형소법 35조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

라 기소가 제기된 후에는 소송계속에 속하므로 검사는 마땅히 등사신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헌법 12조 4항의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한진그룹 고위간부, 해고자 차에 매단 채 달려 처음엔 발뺌하다 사진제시 소식에 끌먹은 뺏어리

한진그룹 간부등 4명이 한진그룹 소속 해고노동자 3명을 승용차에 매단채 질주하여 1주에서 2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히고도 노동자들이 차에 뛰어들어 자초한 일이라고 발뺌을 하다가 전해투등 노동자단체에서 사진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회사측에서 아무런

받을 권리와 헌법 27조 1항,3항의 피고인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조치가 위헌적 행위임을 밝혀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말도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밤 10시경 소송영수(한진중공업 사장), 김창길(한진해운 상무), 김광호(한진중공업 노무부장), 맹승호(한국공항, 기사)등 4명은 지난 11일부터 텐트농성중이던 한진그룹 해고노동자들이 부작한 내용의 현수막을 때려다

던지려 하자 노동자들이 차의 앞뒀문을 붙잡고 차를 막자 안전을 무시한채 질주하여 입장수(32,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철식(26, 대한항공 해고노동자)씨등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회사간부등 4명중 2명은 차를 세운 뒤 달아나고 다른 2명은 노동자들에게 붙잡혀 현재 남대문 경찰서

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 2면에서 계속 >>

원진직업병 대책 촉구 23일 원진비대위 결의대회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도, 원진비대위)는 23일 오후3시 명동성당에서 전노대, 전국노총연, 서총련 등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진레이온 합의서 이행 및 산업재해·직업병 예방대책 수립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원진재단 구성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 직업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산재종합병원 설립 등을 촉구했다.

이순심 석방촉구 거리서명 서울·수원·안양 7곳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에 소속된 여성단체들이 23일 오후 서울, 수원, 안양 등 7곳에서 이순심씨의 석방을 위한 서명을 벌였다. 「한국여성의전화」(원장 이문우, 여성의전화)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종로5가 YMCA 앞에서 1천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수원지역에서는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등이 참가하여 복문 등 4곳에서, 안양에서는 안양 YWCA 등이 2곳에서 서명을 벌였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세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우송해 드립니다.

값 : 1만 5천원

(4월 현재 구독료 납입총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하고 있습니다)

출소장기수 가족재회운동 추진키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6차 총회 권오헌회장 재선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제6차 정기총회가 23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종로 성당에서 열렸다.

민가협 회원과 홍근수 목사, 이부영 의원, 이덕우 변호사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94년의 사업으로 양심수 후원사업과 출소장기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출소장기수의 집 마련을 위한 특별모금, △장기수 고향가기 운동과 가족재회 운동, △출소장기수 건강관리 사업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한해 후원회 사업을 지원해준 김수환 추기경과 주명순 후원회원 등 개인 5명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협의회에 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하였다.

총회에서는 또 권오헌 회장을 재선출하고, 지도위

원에 홍근수 목사와 박용길 장로를, 감사에 김규철 씨와 진관 슌님을 선출했다.

이날 격려사에서 이부영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고, 권낙기 씨는 "양심수 후원회를 해체하고 백두산 천지에서 사회원 모두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족들 전경 죽음에 의문 제기 정연황 이경 사망사건

지난 4월 15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뒷산에서 목매쳐로 발견된 정연황(22, 호서대 휴학) 이경의 가족들이 사망에 의문이 많으며 경기도경과 경기도 검찰청에 탄원서를 내는등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행사 안내 ◆

□럭키금성해고자 전원복지 축구 칠야텐트농성 시차
·일시 : 4월 26일(화) 12시
·장소 : 럭키금성그룹 본사앞

□감경대 열사 3주기 추모식
·일시 : 4월 26일(화) 오후 1시
·장소 : 명지대 서울캠퍼스
·주최 : 강경대열사 추모사업회, 명지대 총학생회

□'94 아시아 선교대회
·주제 : 다원적 아시아 상황속에서 복음의 공동증거
·일시 : 4월 26일(화)~5월 1일(일)
·장소 : 서울 한강호텔(성동구 광장동)
·주최 : 아시아기독교협 준비위원회(문의 : 453-5131)

□장애인 인권, 어디까지?~2번째 감차
·일시 : 4월 26일(화) 오후 2시~4시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의실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제발표 1 :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 인권(조창영 변호사)
·주제발표 2 : 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 교수)

가족들에 따르면 정 이경의 사체가 발견 당시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근무지인 안성경찰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고 있으며, 부대에서 3월 31일 이후 탈영했다고

하나 4월 15일까지 전혀 연락이 없었다며 구타에 의한 타살을 자살로 위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검의도 4월 9일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면서 계속

이날 사용된 차량은 서울 2 커 8194번으로 한진중공업 법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씨와 김씨등 2명의 부상노동자는 1주에서 2주까지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사당의원에 입원치료중이다.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항의에 "노동자들이 차량에 뛰어들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날 한진그룹 해고노동자 텐트농성장 지원방문차 와 있던 전노협 관계자가 사건의 전모를 밝혀주는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로는 한진그룹측에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곧 이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해투와 한진그룹 해고노동자들은 "평소에 한진그룹이 '그룹산하 회사들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법인'이라며 그룹차원의 해고노동자 복직대책을 외면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한 회사 직원들도 아닌 여러 회사의 고위간부가 관련된 것을 보면 그 말은 복직을 외면하기 위한 면피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한진그룹차원에서 텐트농성을 해산하여 복직투쟁을 가로막으려는 졸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해투 집행부는 25일 오후 4시 한진그룹 본사로 항의방문단을 보내 "23일 저녁의 사건은 살인미수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 공 판 안 내 ◆

□4월 26일(화)
·조기현, 특경가법, 서울지법 311호 4시, 5회
·이상욱, 국보법, 서울지법 423호 4시, 속행

□4월 27일(수)
·박소영, 국보법, 서울지법 311호 10시, 선고

□4월 28일(목)
·김대양, 업무방해, 서울지법 318호 10시, 선고
·이명곤외 1, 국보법, 서울지법 319호 10시, 1회
·이흥천외 2, 살인등, 서울지법 311호 11시, 2회
·김형렬, 국보법(컴퓨터통신), 서울지법 424호 3시, 2회
·권동수, 사기, 서울지법 418호 3시, 1회

□4월 29일(금)
·케네스 마를, 윤금이 살해사건, 대법원 1시 30분
·김지환외 2, 업무방해, 서울지법 319호 10시, 속행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지법 418호 11시
·이정부외 1, 배임수재등, 서울지법 422호 11시, 속행
·김선민외 1, 업무방해, 서울지법 318호 2시, 속행
·장영자의 외 1, 특경가법(사기), 서울지법 423호 2시, 3회
·신학철, 국보법, 서울지법 422호 3시, 속행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비폭력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사상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라
(곽노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고발하기로

내달 13일 광주항쟁 계승위 학술대회·추모집회등도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 계승 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목사등, 광주항쟁 계승위원회)는 26일 낮 12시 서울 충정로 3가 동아클럽에서 제1차 집행위원회를 갖고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5·18관련자 34명을 내달 13일 서울 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광주항쟁 계승위원회는 또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광주시의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소장

정운영)와 공동으로 '광주항쟁 14주년 학술대회'를 갖고 18일에는 전국연합차원에서 전국 각지역별로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대 사건 관련자 구명운동 고난 28일 기도회등

윤창호씨를 비롯한 동의대사건 관련자들을 위한 월례기도회가 28일(목) 오후 7시 감리교신학대 종합관 101호에서 「고난받는 이들

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고난) 주관으로 열린다. 기도회에는 89년 동의대사건과 관련해 해직된 박광현교수가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동의대사건 비디오투영도 상영된다. 윤창호씨는 동의대사건으로 무기형을 받은뒤 20년으로 감형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5년째 복역중이다. 고난은 이후 윤창호씨 구명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393-4662

'94 아시아 선교대회
4월 26일~5월 1일
환경·원주민 문제등 논의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가 주관하고 아시아 17개국 대표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4 아시아 선교대회가 지난 26일 한강호텔(서울 성동구 광장동)에서 개막되었다. '다원적 아시아 사회속에서 복음의 공동증거'라는 주제로 5월 1일까지 열리는 선교대회는 지난 89년 인도네시아의 치나파스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아시아에 커뮤니칼 운동의 능동적인 정책대응을 모색하게 된다.

(← 2면에 계속)

5월 가정의 달 가정폭력 추방운동 여성의 전화등 5월 6-13일 추방주간 선포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는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5월 6일부터 13일까지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설정해 행사를 가진다. 각 지방 여성단체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함께 하는 이번 행사는 가정폭력의 가장 심각한 요소인 아내구타와 아동학대 등 가정내 폭력문제의 사회 여론형성과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다. 5월6일 가정폭력 추방주간 선포식을

갖고, 6-13일까지 탑골공원에서 가정폭력 거리사진전을 가진다. 10일에는 이순심씨 구명을 위한 거리 서명을 탑골공원에서 받으며, 11·12 양일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가정폭력 관련 영화를 상영한다. 13일에는 가정폭력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종료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는 가정폭력 신고접수도 문의 269-2962-4

◆ 바로잡습니다 ◆

4월 26일(화)자 <인권하루소식>의 공판안내중 컴퓨터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렬씨의 공판일은 4월 27일(수) 오후 3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리므로 바로잡습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발행!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93년 8월부터 94년 2월초-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였습니다.

주제별 색인을 넣어 특정사건을 찾아보는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인권상황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연구자 등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우송해 드립니다.

값 : 1만 5천원

(4월 현재 구독료 납입총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3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산보센터 건립위하·그림전
4월 27일-5월 3일

노동자를 위한 산업보건 전문기관인 산업보건종합센터(산보센터) 건립을 위한 그림전이 오늘부터 5월3일까지 인사동 인데코화랑(738-5075)에서 열리고 있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토·일)은 오전 11시-오후 7시. 그림전에는 임옥상·정세학·최민강씨 등 한국미협과 민족미술협회등이 참가했고 연변예술대교수인 이철호·문성호씨 등의 작품이 내걸렸다. 전시회 기획은 김용태·유홍준씨가 맡았고, 한국화·서양화·조각·판화·서예·생활미술품 등 1백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산보센터측은 이번 모금 전액을 직업병을 진단하는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쓰며 특히, 소음성난청의 기자

재를 구입하는데 우선 쓸 것이라고 전했다. 산보센터는 각계 추진위원 1천명의 모금을 기반으로 93년 6월 '한국노동보건직업병연구소'를 세우고, 작업환경측정과 직업병 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839-3446

고 강경대 열사 추모집회
'5·6공 책임자
역사앞에 사죄' 요구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이종욱) 서부지구 소속 학생 7백여명은 지난 91년 4월 26일 전경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고 강경대 열사 사망 3주기를 맞아 26일 오후 2시 명지대 대운동장에서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쌀수입개방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우루과이라운드(UR)의정서 국회비준거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고 강경대 열사와 광주 시민을 죽인 5·6공 책임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생들은 교내 시위를 마친 뒤 연회동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사저까지 진출하려다 홍남교 부근에서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명지대 총학생회와 「강경대 열사 추모사업회」(대표 김승기, 추모사업회) 등은 지난 25일 명지대 교내에서 합창제와 노래극을 공연하는 등 '추모의 밤' 행사를 가졌다.

남북한 민간환경회의 제의
24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경리등)은 24일 오후 2시 중요공원에서 '제24회 지구'의 날 시민집회를 갖고

'세계환경의 날'인 오는 6월5일 남북한민간환경단체들이 한반도의 환경문제와 핵문제를 논의하는 '남북한 민간환경회의'를 열것을 북한측에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환경과 평화를 위한 서울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환경과피 등으로 인한 문제를 풀려면 남북한 당국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민간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합법적인 통로로 북한 환경단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

다. 이날 행사는 국제민간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 한국방문단과 공해시설 입지예정지역 주민 등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종각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 단 체 간 행 목 ◆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소식(5호)
 - 주요내용 : 고문과 십자가(회의판)/문국진씨의 현재 동향/고문후유증 대책에 관한 진지한 모색의 자리-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박경기 대표 심근경색증으로 입원등
- 교회와 세계(4월호)
 - 주요내용 :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허춘중)/장애인의 인식치가 되어야 할 교회(김종희)/아시아 선교대회 소개등
-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심포지움 자료집)
 - 주요내용 : 남한인권의 실상과 대책(한상범)/북한인권의 실상과 대책(조갑제)등
- 양심수 후원회 소식(1호)-대구경북지역 양심수 후원회(준)
 - 주요내용 : 감옥에서 온 편지(오형식, 홍명기)/출소장기수를 찾아서(이일재)/대구교도소 양심수 명단등
- 계간 환경과 생명(창간호)-환경과 생명을 위한 모임
 - 주요내용 : 미국의 환경문제와 엘 고어의 환경론(문태훈)/한국에서 녹색정치의 가능성(정수복)/집중기획-위기의 물, 어떻게 살릴 것인가(김명운, 강찬수, 박성주, 조길영)/일본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야마다 구니히로)/도표로 본 지구환경의 위기/그린피스 보고서-아시아로의 패기를 침투등
- 제6차 총회보고서-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 주요내용 : 양심수 후원회 활동일지/양심수 후원회 사업평가서/양심수 후원회 제6차년도(94년) 사업계획/양심수 현황/양심수 명단(94년 4월 20일 현재)등

◆ 행사 안내 ◆

- 94 아시아 선교대회
 - 주제 : 다원적 아시아 상황속에서 복음의 공동증거
 - 일시 : 4월 26일(화)~5월 1일(일)
 - 장소 : 서울 한강호텔(성동구 광장동)
 - 주최 : 아시아기독교협 준비위원회(문의 : 444-3544.5)
- 장애인문화 창달 위한 편의시설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 4월 27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 주최 : 한국건설정책연구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문의 : 785-5071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비폭력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사상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라
(곽노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컴퓨터통신에 사노맹 관련 문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렬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되었다. 27일 오후 3시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통신인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에 올린 사노맹 관련 글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하고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게재한 문서가 국가존립을

위해하지도 않으며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실증주의, 실존주의 등 여러가지 철학사조를 연구·토론한 점에 비추어 현대철학동호회에 사노맹 관련 글을 게재한 사실이 반국가단체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작년 12월 구속되었을 때 3백여명이던 회원이 현재는 5백여명에 이른다"고 소개하며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회원으로 구성

된 현철동의 위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철동은 국가존립에 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자신을 비롯한 여러 명이 컴퓨터통신과 관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며 "현대문명의 이기인 컴퓨터통신을 국가

보안법으로 구속하는 것은 반시대적 처사"라고 역설했다. 선고공판은 5월 10일(화) 오전 10시, 424호 법정.

정대협 116차 수요시위

27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116차 수요시위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이효재, 정대협) 주최로 15명이 참석한 속에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일 양국 교과서 개정문제에 따른 후속사업의 필요성과 정신대 문제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이문옥 전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90년 5월 재벌그룹계열사 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파면당한 이문옥 전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청구소송에서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

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문옥 전감사관은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용기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를 계기로 양심선언자보호법등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행사 안내 ◆

- 한진그룹의 살인만행 규탄대회
 - 일시 : 4월 28일(목) 오후 5시
 - 장소 : 한진그룹 본사(한진해운센터)
 - 주최 : 전해투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
 - 최근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보고
 - 일시 : 4월 28일(목) 오후 2시
 - 장소 : 탑골공원앞
 - 주최 : 민가협

제4차 국제동향 월례 정보브리핑

때 : 4월 28일(목) 오후 7-10시
곳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국제관계 정보의 나눔과 공유! 지금까지 3회 개최한 정보브리핑 모임은 국제정세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단체의 국제연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된 작은 모임입니다. 모임에는 인권운동 및 사회단체에서 국제연대 담당자들이 참석합니다.

발표예정 주제 : 국제연대활동의 이모저모(오재식 선생님), 인권단체공대위 조직전환과 인권운동 국제연대, 그린피스 방한 연대활동, 한일번호 사교류회, 남아공 민간선거감시단 참가활동,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및 행사, APEC에 대한 아시아 민간단체들의 대응(PP21), 사회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 관련된 민간단체들의 대응 등
준비물 : 나눌 정보와 자료, 참가비 3천원

“장애인의 취업 사회총체적인 노력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성재, 장애우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장애인의 인권 어디까지?’의 두번째 강사가 26일 오후 2시 연구소 강당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 조장영변호사의 주제발제에 이어 윤찬영교수(전주대)의 ‘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이란 발표가 있었으며, 최일권(대전지방병무청)씨의 ‘좌절 딛고 지킨 권리’란 사례발표가 있었다.

조 변호사는 주제발제에서 장애인의 공채시험 탈락 이유로 △선발권자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 △정부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들었다. 그리고 장애인 탈락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업주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윤리 확립 △부당한 불합격처분을 당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노력 △장애인단체의 역할 강화등을 꼽았다.

공무원 시험에서 7번이나 면접에서 탈락한 후 8번째 합격했던 최일권씨는 “나는 자랑스러운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장애인”이라며 장애인 취업문제에는 의료재활, 특수교육 그리고 잘못된 사회인식과 모순을 시정하려는 장애인의 노력등 사회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우연구소는 정기 정책토론회를 장애인들이 삶의 도처에서 또다른 ‘장애’로 부딪치는 ‘비인권’ 지대를 해부하고 점검하고자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매월 한 차례씩 갖는 정책토론회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주제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제1회 정책토론회는 ‘인권’의 의미, 장애인과의 상관성’이란 주제로 서준식 인

권운동 사랑방 대표가 발표를 하였으며, 5월 27일에 진행될 3회 정책토론회는 ‘성폭력과 여성장애인 인권’이란 주제로 신혜수 교수(전주한일신학대학 사회 복지학)가 주제발표를 한다. 제4회(6월)는 ‘정신보건

정책과 장애인 인권’(김병후 연희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제5회(7월)는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반대와 장애인 인권’(박태영 피어선대학 교수) 등의 정책토론회가 준비되어 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리 27일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이만섭 국회의장 등 1백3십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호일)과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이사장 서영훈)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용환 교수(한양대 건축공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어울려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장애인이 움직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으면 건물내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으며 건물내 복도, 통로 등에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유명한 식당이나 호텔에 가면 편 편의시설이 결보기에는 화려해보이지만 장애인과 노인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하는 건물중 오히려 이용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곳도 있다. 이것은 비장애인 위주로만 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

복지법, 주차장법 등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시설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계단,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유효공간, 출입문, 교통시설 등 30여개 사항에 관한 국내의 현황과 외국 사례를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하고 구체적인 ‘편의시설 최저기준’을 제시하였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의 높이, 출입문의 최소한의 폭,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자판기·승차권 자동발매기의 높이를 고려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성희롱’ 토론회 29일 여성민우회등 주최

여성민우회와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은 29일(금) 오전 10시 이대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성희롱의 개념 정리와 대책마련을 위한 집중토론회를 갖는다.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이다’는 주제의 토론회는 열리는 데 성희롱의 개념·유형·사례에 대해 여성민우회 이수연(사무직 여성부간사)씨가 발표를,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법률적 대안에 대해 박원순변호사가 토론을 벌인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발행!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93년 8월부터 94년 2월초-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였습니다.

주제별 색인을 넣어 특정사건을 찾아보는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인권상황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연구자 등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우송해 드립니다.

값 : 1만 5천원

(4월 현재 구독료 납입총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비폭력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사상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라
(곽노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추진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6월 7-17일 한국방문

아르헨티나의 민가협 어머니라고 소개될 수 있는 ‘5월광장 어머니회’가 오는 6월 7일부터 17일까지 10박11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이란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5월광장 초청추진위)가 지난 2월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다. 한국초청단은 이미 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5월광장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국내 관련

단체와 연대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5월광장 어머니회 어머니 2명과 학자 1명이 초청되었으며, 고난,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 사랑방, 불교·천주교·한교협 인권위 등을 포함해 국내 9개 인권단체와 사회인사가 주축이 되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5월광장 초청추진위는 5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하면서 “불처벌(impunity)문제와 인권측면에서의 과거청산문제를 알려내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광주항쟁, 각종 실종사건, 고문등 국내의 과거청산 문제를 국제화 조류 속에서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문제와 연관시켜 새롭게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를 국제연대사업으로 구체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이 행사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 ‘민주열사합동추모제’가 열리는 기간에 우리나라를 찾는 5월광장 어머니회 회원들은 민가협 어머니들과의 만남은 물론 광주를 방문해 광주유족회 및 실종자 단체들을 찾는다. ‘민주화와 과거진상규명’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설회,

심포지움, 기자회견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아르헨티나 실종자관계 전시 등을 펼쳐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알려 낼 계획도 잡고 있다.

최근 국보법 인권침해 발표 민가협 33차 목요일집회

희망세 단원 9명 구속, PC통신 관련 5명 구속, 출판관련 4명 구속 등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점과 관련해 민가협은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보고’의 주제로 33번째 목요일집회를 28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가졌다. 사례발표에는 도서출판 ‘일터’ 박치관 편집부장 부인 이은희씨와 희망세 단원 최경아씨의 언니 최경희씨가 나와 국보법의 엉터리 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 행사 안내 ◆

□ 집중토론-이것이 성희롱이다

- 1부 : 남녀직장인들의 ‘성희롱, 어디까지인가?’ 토론
- 2부 : 토론마당-이것이 성희롱이다(이수연)/성희롱, 법률적 대안(박원순)/성희롱, 예방과 대책(정장자)
- 일시 : 4월 29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이대 박물관 시청각실
- 주관 :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 최형우 내무부장관·종로경찰서장등 인간사슬 고발운동

- 일시 : 4월 29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앞
- 주관 : 조계종 개혁회의(문의 : 730-9151)

□ 윤금이 살해혐의 케네스 마를 대법원 확정판결

- 일시 : 4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대법원 1호 법정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을 빛내주실 개인 및 단체를 찾습니다.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하여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경우 : 주관단체나 후원단체로 참여 가능
개인의 경우 : 약 200여명으로 구성되는 초청인단에 초청인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들은 행사에 소요될 비용 중 5만원 이상 내주셔야 합니다.

추진 주관단체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가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연락처 :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 216-016815-018 김은영

국제인권소식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아태지역 첫 준비모임 열려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에 관한 UN 세계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민간단체(NGO)의 첫 준비모임이 이번 5월 2-3일간 태국 방콕의 출라롱크롬(Chulalongkorn) 대학에서 열린다. Asian Cultural Forum on Development(ACFOD)의 주관에 의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에서 사회개발문제와 관련된 여러 민간단체가 참가하며 한국에서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이선태 선임연구원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International Center on Law in Development(ICLD)의 클라렌스 디아스 박사의 세계정상회담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비판하는 강연을 시작으로 외채, 국제원조문제, 원(선)주민 문제, 여성과 개발의 문제 등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회적 문제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2월 2-3일, 방콕에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후속작업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 참여한 56개의 아시아 태평양 인권단체 대표들은, 95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개발에 관한 유엔 세계정상회담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열리게 된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1)아태지역의 민간단체에게 코펜하겐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의 준비과정을 설명하고, 2)아태지역의 문제가 정상회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를 준비하고, 3)아태지역의 민간단체대표가 올해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제2차 준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며, 4)내년 3월까지의 준비일정에 아태지역의 민간단체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 등이다.

90년대 접어들어 열린 리우 환경회의(92년 6월)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93년 6월), 그리고 95년 9월 북경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여성대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국제회의이지만 다른 모든 국제회의에서 만드

시 거론되었던 발전의 문제를 직접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의는 벌써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이 그 어느때보다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개발에 관한 UN 세계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부대표의 첫 모임이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뉴욕에서 열렸고, 두번째 모임은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세번째이자 마지막 모임은 역시 뉴욕에서 1995년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21세기를 위한 민중계획(PP21) 확대조정위원회 열려

5월 4-5일까지 방콕에서 "21세기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는?

1977. 4. '5월광장 어머니회'의 시작 : 군부독재 아래 의문의 실종으로 자식들을 잃어버린 14명의 어머니들이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 대통령궁이 마주보이는 5월광장(라 플라사 드 메)에 처음 모임. 머리에 흰 두건을 두른 어머니들은 '정의와 진실'을 위해 침묵의 원을 돌며 아르헨티나 양심에 경종을 울린다. 원을 도는 어머니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 '5월광장의 어머니들'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 어머니들은 이 모임을 통해서 참담한 슬픔을 정의와 자유를 향한 공동의 의지로 발전시킨다.

1983. 민선정부, 그 이후 : 3만여명의 실종자를 미궁에 남겨둔 채, 마침내 민선정부가 들어섰지만 부패와 억압기구는 그대로 남고 인권침해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과거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에게 대한 사면과 관용이 배풀어지자 5월광장의 어머니회는 과거의 권력범죄를 폭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압력을 넣는데 집중하였다. 그후 어머니회는 "당신은 과거 우리의 자식들을 죽인 고문자들과 살인자들이 어디서 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1989)라는 긴 제목의 캠페인을 시작,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거 인권침해 범죄를 덮어두려는 새 민간정부의 정책을 질타하였다.

현재 : 19개지부 약 2천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고, 매주 목요일 5월광장에서 행진한다. 영어·불어·이태리어 월간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인권현실 강화를 개척하고, 노동자·농민 등 기층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및 국제활동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국제적 관심

- 1990 : 사회정의에 깊이 관여한 업적으로 암스테르담에 5월광장 어머니의 동상을 제막. 「레온 필립 국제 용기있는 시민상」 수상.
- 1991 :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어머니회를 지원하는 국제페스티벌」 개최.
- 1992 : 유럽의회가 주는 「사하로프 양심의 자유상」을 수상

*「5월광장 어머니회」는 유엔 인권회의에서도 불처벌문제를 인권침해의 핵심적인 문제로 계속 제기해오고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 상정할 만큼 커다란 영향력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진실과 정의가 없는 망각 반대, 화해 반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같은 범죄의 길을 여는 것!"

를 위한 민중계획(PP21)"의 확대조정회의가 열린다. 사회개발에 관한 유엔 세계정상회담을 위한 아태지역 민간단체 첫 준비모임에 이어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제3회 PP21의 개최에 관한 문제, 아펙(APEC)에 관한 대처방안 등의 이슈가 다루어진다. 한국에서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이선태 선임연구원이 참가하고 있다.

이제 앞서 지난 93년 11월 28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PP21 조정팀 모임이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PP21 활동을 조정하고 촉진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사부(Sabur, 현 ACFOD의 대표)와 반톤(Banton)을 PP21을 위한 과도사무국 책임자로, ACFOD를 과도기간 동안 사무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회의는 한국의 연락단체인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주관하였다.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비폭력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사상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라
(곽노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

92년 일본정계의 막후실력자인 가네마루신 자민당 부총재 뇌물사건 당시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용돼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 시민·집단 고발운동이 불교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지난 3월 29일 조계종에 난입한 폭력배를 비호하고 지난 달 4월 10일 경찰이 조계사로 진입, 공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최기문 종로경찰서장 등이 8백여명에 이르는 승려와 재가불자에 의해 고발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회

의 법난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스님, 개혁회의 법난대책위)는 2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서울지역의 승려, 재가불자 등 9백여 명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원로스님을 감금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최 내무장관과 최 종로경찰서장을 포함, 경찰의 지휘책임자 다수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검에서 개혁회의 법난대책위는 도착한 승려, 불자들에게 고발장을 제출방법을

알려주고 시민고발운동의 실질적 준비를 하다가 오전 11시 15분 개혁회의 법난대책위 진관스님이 처음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맨 처음 고발

장을 제출할 때 행렬은 서울지검 정문앞에까지 닿았으며 접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계속 도착했다.

개혁회의 법난대책위는 이날 시민고발운동에 들어가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공권력의 편파행사와 폭력을 '정당한 집행'이라고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2면에 계속)

104회 노동절 기념대회 전국에서 열려

수도권은 5월 1일 동국대 12시

제10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5월 1일(일) 오전 12시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 전 노대) 주최, 전국연합·민중당 후원으로 열린다. 세계노동절기념대회에는 서울·경기·인천·부천·성남 등 수도권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참여하며 그외에도 광주·전북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기념대회 및 노동문화제·체육대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권 조직위원회는 노동절을 맞아 "노동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며 김영삼정권의 반노동자적인 노동정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94년 투쟁의 승리를 결의했다. 또한 "기초농산물 수입 개방 지지투쟁 등 민중생존권과 사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가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동국대에서 본대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종로5가 - 종각 - 미도파 - 서울역을 거쳐 가두행진을 벌이게 된다.

◆ 노동절기념대회 지역별 일정 ◆

- 서울 : 5월 1일(일) 12시 동국대 대운동장 / 노동절 기념대회 수도권 조직위원회 주최
- 광주 : 4월 30일 오후7시 YMCA / 광노협 주최
- 전북 : 5월1일 오후2시 장소 미정 / 노동절대회 조직위 주최
- 순천 : 4월30일 오후6시 순천대 학생회관 / 새벽을여는노동문제연구소 주최
- 포항 : 5월1일 시간·장소 미정
- 대전 : 5월1일 한남대 / 업종·제조업·단체 공동주최
- 천안 : 4월30일, 5월1일 / 천안·온양·아산지역 대표자회의 주최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을 빛내주실 개인 및 단체를 찾습니다.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하여 인권추진에서 본 과거청산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경우 : 주관단체나 후원단체로 참여 가능
개인의 경우 : 약 200여명으로 구성되는 초청인단에 초청인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들은 행사에 소요될 비용 중 5만원 이상 내주셔야 합니다.

추진 주관단체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연락처 :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 216-016815-018 김은영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성희롱 토론회 성희롱등 차별방지요구는 인간의 권리
'고용주의 성희롱 방지무화 필요'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적 이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직장내에서 같은 동료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임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자리가 29일 이화여대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전국사무금융노동자연맹 공동주최한 토론회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이다"에서 성희롱방지를 위해 개인·노조·고용주·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었다. 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씨는 "국가는 성희롱문제 전담부서 설치해야"하며 "성폭력특별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뿐만 아니라 노조와 여직원회, 고용주는 직장내 전담부서 설치, 성교육 마련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씨는 직장내 성희롱은 일할 권리와 안전한 근무조건을 해치는 고용상의 성차별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성희롱·성폭력으로 직장을 떠난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조교 성희롱사건 재판을 맡았던 박원순 변호사는 성희롱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주가 성희롱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희롱의 피해를 법정이

아닌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와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제2정무장관 대신 여성부 또는 여성청이 신설되어 그 아래 지방조직으로 지방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와 직접적 사례와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민우회 이수연씨가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이다"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수연씨는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을 "채용과정이나 채용후 직장생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쾌한 성적 언동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방해가 되고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성희롱은 고용상의 문제를 두고 하는 경우와 무리하게 술을 따르게 한다든지 하는 성적 봉사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등 시각적인 것과 언어적, 육체적인 것 그리고 외설적인 사진, 낙서등을 통한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사례를 들어 성희롱이 언어적 범주를 넘어 추행으로 이어진 경우 경제적·신체적·심리적·정신적 측면에서 악영향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했다.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권을 위협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며 불쾌하고 적대적인 작업환경을 만들며 피해여성은 심리적·정신적 장애로 삶의 리듬이 붕괴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1면에서 계속)

지버린 공권력은 마땅히 고발되어 처벌받아야 당연하다"고 고발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성명에서는 또 "고발운동은 민주화된 사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개혁회의 교무국장 오성스님은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발운동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고, "검찰이 수사를 유야무야 할 경우 최내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플랭카드를 전국사찰에 내걸고 삼보사찰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사찰의 산문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미진한 수사는 전국의 불교신도가 김영삼 정부로부터 급격히 이 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연씨는 보고했다. 또한 이날 사회를 맡은 오숙희(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인권위원장)씨는 성희롱

등 여성인권의 문제는 남여 편가르기가 아닌 같은 인간으로서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9일 윤금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케네스 마클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마클 이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 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한미 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당국으로 부터 마클 이병의 신병을 인도받아 천안소년 교도소에 수감키로 했다.

한미행정협정에는 '범죄를 저지른' 주한 미군·군무원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구금인도를 요청할 경우 미군측이 '호의적 고려'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한국 측의 구금인도 요청에 반

지난 92년 사건발생 직후 미군측이 마클이병의 신병 인도를 거부, 한국검찰은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마클 이병은 지난 92년 10월 윤씨를 흉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콜라병을 체내에 넣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뒤 한미수사 당국에 검거돼 현재 미군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일, 주한미군 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등 구조적인 한미관계의 개선없이는 단 한명의 미군범죄자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한미행정협정의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주한미군 운동본부 관계자와 「서울지역여학생 대표자협의회」 소속 학생 2백여명이 대법원 1호법정 안팎을 가득 메운 채 방청을 했고, 판결후 "주한미군의 존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미군범죄가 양산되고 있다"며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인권하루소식

94년 5월

(제156호 - 제174호)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완전한 진실의 공개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가 되고, 정확한 진실의 파악없는 관용은 특혜의 면책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전교조등 전국에서 '어린이 큰잔치' 마당

어린이 날 올바른 어린이 문화 정착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오는 5일 72주년 어린이 날을 맞아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를 위한 큰잔치를 펼친다. 올바른 어린이 문화를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큰잔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번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우리 것을 사랑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신나고 재미난 행사가 마련되었다. 작년에 전교조 14개 시·도지부 30개 지역에서 4만 5백여명이 참석한데 이어 올해는 14개 지부 54개 지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공동체 문화가 어린이들의 삶속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 애용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마련된다.

이날 행사는 각 지역마다 어린이날 기념식이 끝난 뒤 공연·배움마당, 전시마당, 놀이마당, 장터마당 등으로 나뉘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놀이연구회 '놀이'등 9개 단체가 서울교대 전역에서 벌이는 어린이날 행사는 인형극, 상자굴리기, 타이어 끌기, 장애물통과하기 등 유아마당과 환경교육마당, 소공연마당, 놀이마당 등으

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233-7963 서울교대/
부산:051-861-8186 부산교대/대구:053-566-6802 대구교대/인천:032-511-5307 인천교대/광주:062-277-8188 광주교대/대전 042-254

-8059 한남대/ 강원:0631-56-2844/경기:02-522-7620/충북:0431-52-9541/충남:0451-34-3716/전북:0652-75-8035/전남: 0631-77-6190/경북:0571-57-7367 /경남:0551-22-6958

94년 임투승리, 민주노총 건설위해 노력

104회 노동절 행사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려

처음으로 공식인정된 노동절 대회가 수도권, 영남권, 광주, 대전, 전북등 전국 8개지역에서 4월 29, 30일 그리고 5월 1일에 기념식과 각종 문화행사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104회절을 맞는 노동절 대회에서 노동자들은 94년 임투에서의 승리와 노총에 대신하는 민주노총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결의하는 한편 정부의 94년의 노총·경총간의 합의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 : 서울, 인천, 경기, 부천, 성남등 수도권지역 노동자와 전노협, 업종노련, 현총련, 대우총련등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1일 12시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10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는 권영길 전노대 공동의장,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기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등이 격려사를 통해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이 변화하지 않았으며 노동자와 민주세력이 총단결해서 싸워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또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노동자들은 대회후 총무로, 서울역 등지로 가두행진을 벌였다.

부산 : 부산, 마산, 창원, 울산, 거제, 경주, 진주지역 노동자 8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영남지역 노동절 대회는 4월 30일 부산대운동장에서 전야제를 가진데 이어 5월 1일 부산역광장에서 '영남지역 노동열사 추모식'과 '노동절 기념 및 박장수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영남노동자대회'가 열

렸다. 영남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주관으로 열린 대회는 남포동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광주 : 4월 29일 광주 오후 7시 YWCA 대강당에서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별노조 건설에 힘쓸 것을 결의하였다. 또 동학농민혁명 의 현재적 의의를 살피는 집체극이 이어졌다.

전북 : 5월 1일 오후 1시 30분 이리 국민생활관에서 전주, 이리, 군산지역 노동자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기에 이어 '전북지역노동자 가요제'를 실시하고 이리역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대전 : 5월 1일 오전 10시 한남대에서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과 노동자들의 운동경기, 뒷풀이 등이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

순천 : 4월 30일 오후 6시 순천대 학생회관에서 여천, 순천, 광양의 노동자 4백여명이 참가하여 집체극, 노래패 공연등이 문화행사와 지역노조원들의 대동풍물이 이어졌다.

이외에 천안, 포항지역에서도 기념대회가 열렸다.

5월 3일(156호)부터 편집인이 심보선으로 바뀌었습니다

◆ 공판안내 ◆

- 5월 3일(화) / 상춘식의 6, 특경가법(황령), 4시, 311호, 1회
- 5월 4일(수)
 - 장운, 국가보안법, 10시, 425호, 선고
 - 정재원, 특경가법(사기), 2시, 425호, 38회

◆ 행사안내 ◆

- 제104주년 세계노동절 쟁취기념 장기기증식(문의:784-6037,8)
 - 일시:5월 3일 오전 11시 / 장소:한국 경영자총협회
 - 주최: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

「인권하루소식」 4월분 총목차(135호-155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4/1	135	1	재독 통일운동가 이영빈목사 귀국 무산될 처지, 안기부 입국불허 통보, 이영빈목사 "4월4일 귀국 강행하겠다"/가수들 '희망세' 석방요구, 민가협 제29차 목요집회/지킴이' 모집기간 연장, 성폭력상담소 4월 9일까지
		2/3	「인권하루소식」 3월분 총목차(135호-155호)
4/2	136	1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위해 재정신청 범위 확대필요'/민우여성학교 개설, 한국여민회/미군범죄 신고센터 정식발족/고 김남주 49재·추모의 밤, 서울 대각사·대구 민예총
		2	단체탐방 15-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이제는 목회자 개인의 운동이 아니라 교인전부의 운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6	137	1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재독통일운동가 이영빈 목사 귀국 무산, 안기부 '각서' 요구에 '귀국추진위' 거부/일빛·힐 대표 석방요구, 43명 출판인 성명/“합평기씨 연행은 노동탄압”, 전해투
		2/3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4/7	138	1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씨 재판
		2	출소장기수 김광삼 사망, 41 음성 꽃동네/경찰, 두밀국교 학부모 조사/아시아여성들 만남 무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연기/국보법 폐지서명 벌여, KSCF 고난 및 부활절 맞아/현역군인등 9명 국보법, 북한방송 내용 게재이유/사형제도 폐지단원, KNCC 인권위 사형폐지분과
4/8	139	1	꺼지지 않은 해고자들의 원상회복 투쟁1년, 전해투, 작년 4월 7일 기독교회관 농성후 민주당사에서 계속/AI, 출판인 양심수 선정, 민가협 30차 목요집회
		2	인터뷰 : 전해투 대외협력부장 안경호(29, 한국공항 해고노동자)/국제인권소식 : 국제인권연구소 제25차 국제인권법 강좌, 7월 2일-2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구금자 석방촉구
4/9	140	1	살인누명 김기웅순경 무죄확정, 8일 서울고법, 김씨 복직문제등 조속한 원상회복 이뤄져야/수배해제자에 제차 수배령, 전해투 조직부장 정형기/인혁당 서형집행자 추모제, 9일 오후 서대문 옛사형터
		2	단체탐방 16-희년선교회, 억눌린 자, 빼앗긴 자, 빛진자에게 인간화와 복음화의 희년(해방)을!
4/12	141	1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예정
		2	외롭게 숨진 고 김광삼씨 추모제, 8일 출소장기수 여성 본의사에 맡겨야/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민법연 '민주법학' 7호,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등 특집/해고노동자, 복직요구, 11일 해고노동자
4/13	142	1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법무부에 한국인 보호위한 세부기준 설정요구/20여년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씨 2차공판, 12일 수원지법, 변호인 반대신문,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양심선언 조정회 항소심
		2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거부한 사실로 긴급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행,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보류,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형권씨/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10일 개인 발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성 기대"/정신대 114차 수요시위, 법적 해결은 인권각성 계기/법무부, 『개혁과 인권』 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
4/14	143	1	국제인권소식 : 21개국 민간단체 320여명 남아공 총선 및 선거감시단 활동, 2천여명의 유엔감시단과 별도, 공정선거 및 폭력방지에 주력/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개발전략연계 선거운동/말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아시아 위치, 국보법등 거론
		2	살인누명 옥살이 김기웅순경 복직 결정, 14일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여러분, 귀기울여 주세요. 이 억울함을!", 민가협 31차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행위 규탄/인터뷰:김기웅 순경 단체탐방 17-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이 어둠고 어두운 역사에 맞서 이 시대 장한 어머니로 살고 싶습니다
4/15	144	1	인권단체협의회 결성하기로, 민간단체 공대위 성과 계승, 인권현안 협의, 인권정보 유통등/로비의 모범 양군모 해산/민가협 4월혁명상 수상/희망세3명 또 연행/여성이 쓴 여성이야기
		2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인터뷰: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 교수/해고자 텐트농성 확산중, 현재 20여곳

「인권하루소식」 4월분 총목차(135호-155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4/19	146	1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동 면책에 당사자 유감/민가협 민주당사 단식농성 돌입, 양심수 석방·국보법 철폐요구/수사중 가혹행위 주장
		2	'휠체어타고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기', '장애인체험' 행사, 20일 장애인의 날 함께걸음 시민대행진/AI 한국지부, 사형제도폐지 촉구/해고자 원직복직'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전해투 위원장단 10명/박정기씨 고려병원 입원/고문피해자 문국진씨 퇴원/성희롱' 재판 기자회견
4/20	147	1	휠체어사용자에 지하철은 금단의 땅,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 시각장애인동 지하철 이용곤란/올 세번째 출판인 구속, 19일 '일터' 박치관씨, 7월말 아·태 AI회의 열려, 한국지부 양심수인의 밤 등 준비
		2	'장애인 문제는 한국사회구조와 밀접', 전강협 아카데미 4. 21-5. 20/ACFOD 사무총장 한국인권단체 방문/민가협 단식농성 풀어/양심선언 조정회씨 '유리'/인터뷰: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4/21	148	1	"장애인 자유로운 이동권 절실하다",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정치인동 휠체어타고 직접 체험/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내/서울지검, 김삼석씨 조사, 안기부원 성추행 고발전/문목사 추모행사 줄이어
		2	국제인권소식 : 콜롬비아 군과 경찰, '사회정화'라며 살인 일삼아/엠네스티 "남한, 북한벌목공 탈출 노동자 망명인정 피난처 제공해야"/엠네스티, '한국방문의 해' 맞아 전국교도소 표시 엽서 발간
4/22	149	1	"북한인권 거론앞서 정보공개 필요",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조작간첩 석방하라', 민가협 목요집회
		2	단체탐방 18-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간과 조직과 규범에 대한 충실, 법학에 대한 신념이 충만한 젊은 패기
4/23	150	1	원진 작년 합의후 해결된 것 없다, 노동자들 재취업보장, 산재병원 설립, 원진재단 노동자 참여요구/이순심씨 석방 서명운동/그린피스 24일 출항, 경찰등 행사방해도
		2	목숨을 건 해고자들의 단식·텐트 농성, 정부·사업주 모른체, 해고무효 송사자도 복직안돼/대법원에 운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성폭력 '지킴이' 지원 쇄도
4/26	151	1	"수사기록 등재거부는 위헌적 행위다",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한진그룹 고위간부, 해고자 차에 매단 채 달려, 처음엔 발뺌하다 사진제시 소식에 꿀먹은 벼어리/원진직업법 대책 촉구, 23일 원진비대위 결의대회/이순심 석방촉구 거리서명, 서울·수원·안양 7곳
		2	출소장기수 가족제회운동 추진키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6차 총회, 권오현 회장 재선출/가족들 전경 죽음에 의문제기, 정연황 이경 사망사건
4/27	152	1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고발하기로, 내달 13일 광주항쟁 계승위, 학술대회·추모집회등/동의대 사건 관련자 구명운동, 고난 28일 기도회등/94 아시아 선교대회, 4월 26일-5월 1일, 환경·원주민 문제등 논의/5월 가정의 달 가정폭력 추방운동, 여성의 전화등 5월 6-13일 추방주간 선포/바로잡습니다
		2	산보센터 건립위한 그림전, 4월 27일-5월 3일/고 강경대 열사 추모집회, '5·6공 책임자 역사앞에 사죄'요구/남북한 민간환경회의 제의, 24일 환경운동연합
4/28	153	1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서울고법 이문옥 전감사판 파면취소 판결, 이 전감사판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필요"/정대협, 116차 수요시위
		2	"장애인의 취업 사회총체적인 노력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편의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리, 27일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이것이 성희롱' 토론회, 29일 여성민우회등 주최
4/29	154	1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추진,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6월 7-17일 한국방문/최근 국보법 인권침해 발표, 민가협 33차 목요집회
		2	국제인권소식 :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아태지역 첫 준비모임 열려/21세기를 위한 민중계획(PP21), 확대조정위원회 열려/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는?
4/30	155	1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104회 노동절 기념대회 전국에서 열려, 수도권은 5월 1일 동국대 12시
		2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성희롱 토론회, 성희롱등 차별방지요구는 인간의 권리, '고용주의 성희롱 방지의무화 필요'/대법원-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후야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이달의 주제> '과거청산'

완전한 진실의 공개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가 되고, 정확한 진실의 공개없는 관용은 특혜의 면책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돈봉투 사건·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등

진상규명위한 시민고발운동 진행

4일만에 1만여명 참가 자보노조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촉구 14일째 단식농성

지난 1월 국회돈봉투사건으로 유명해진 돈봉투그룹 산하 한국자동차보험(사장 김택기, 한국자보)의 부당노동행위와 국회노동위원회(위원장 장석화) 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김준기 돈봉투그룹 회장, 김택기 한국자보사장,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성명미상의 국회의원 등을 고발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동완등 5명, 시민연대)는 △노동위 돈봉투사건의 기업주, 공무원, 정치인 간의 명백한 뇌물유착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한국자보노조에 대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여전하며 △부당전직과 해고에 따른 국회위중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등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지난 4월 28일부터 '시민고발운동'을 벌이고 있다. 5월 1일까지 4일동안 고발에 동의한 시민들은 10,762명에 이르며 시민연대는 5월중순경에 1차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국회돈봉투사건, 상문고 비리사건, 상무대 정치자금사건 등 문민정부에서도 미결사건이 쌓여가고 있어 비리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돈봉투 사건이 기업주, 정치인,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4월 21일부터 14일째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단식농성중인 김철호 「한국자보노조」 위원장, 권세원 「보험노련」 위원장 등 10여명은 △한국자보의 노조파괴책동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가 제시할 것

동부그룹과 한국자보는 노조와 대화에 나시고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근절책의 제시와 노조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보험노련과 사무금융노련의 보험회사노조로 이루어진 「손해보험노조협의회」(공동대표 박조수등 4명)도 한국자보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전교조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등 시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어린이날을 맞아 유아·초등교육의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어린이들은 거대화된 학교, 낙후된 시설, 교육자료의 학부모 부담등으로 가장 뒤떨어진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있으며" 또한 "심지어 농촌정책의 실패로 농촌에서는 학교의 폐교와 취학아동인원 감소로 두학년이나 세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등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촌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 및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직장·학교탁아소 등 각종 탁아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158호는 5월 6일(금)에 발행됩니다

◆ 행사 안내 ◆

□제104주년 세계노동절 쟁취기념 장기기증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일시 : 5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백화점 6층 전해투 농성장
- 주최 :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
- 취지 : 104주년 노동절을 맞아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체의 일부인 장기기증·사회와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장기기증인원 : 조준호 전해투 위원장 포함 104명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개정건의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3일 제직시 독직, 비리등으로 물의를 빚은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금지하고 접견 방해죄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 건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 등록, 업무개시등록(개업)이 접수되면 대한변협 심사위원회가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검찰·경찰 등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속변호사의 변호사회에 대한 사실조회요구와 변호사회의 사실조회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세계화' 추구해야

인권운동사랑방 '국제정보브리핑' 모임

지난 4월 28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제4차 국제동향 월례정보브리핑 모임이 사회교육원의 오재식(전 WCC 3국장)씨와 각인권·사회단체의 국제연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최근의 국제관계 활동과 관련정보를 요약해서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모임에서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방콕에서 열리는 「PP21」에 관한 회의와 사회개발에 관한 민간단체 회의(방콕 5월 2-3일)에 대해서 (<인권하루소식> 4월 29일자 참조) 발표하였고, 한·일변화사 교류모임의 소식과 동티모르 국제회의의 소식이 공유되었다. 「세계인권대회 민간단체공동위」는 「한국인권운동협의회」로 조직전환과 95년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태지역 민간단체 준비회의 참가 및 국제연대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의 「오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및 행사계획을 공유하고(<인권하루소식> 4월 29일자 참조), ACFOD 사무국장 분탄(Boonthan)의 방한결과도 보고하였다.

이날 WCC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오재식씨는 최근 국제정세의 특징과 민간단체들의 동향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현 시기에 민간국제연대가 갖는 의의에 대해 오랜 경험과 사례를 들어 다각도로 설명했다. 오씨는 "남아공의 세정부출범, 북한 별목공 문제 등 국제적 사건들을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국제적 접근으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족국가체제의 정당화 논리인 '국제화' 보다 보편적 가치의 확대를 의미하는 '세계화'가 보다 올바른 뜻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인권 문제가 종종 피해자 구제보다는 정치적 선전에 이용되는 관행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다양성 부족에 대해 말하면서, '다를 수 있는 권리' 즉 독자권(right to be different)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고 이를 국제연대활동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의 하나로 제시했다. 국제관계 및 국제연대 담당자들간의 정보교류의 장은 정보 및 선진 경험의 교환을 취지로 진행된다. 현재 인권단체들과 평화 및 환경단체들의 실무담당자들과 관심있는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60여년간 사용한 원진레이온 기계, 중국수출 기계수출과 함께 직업병공장도 수출

3백49명의 직업병환자를 발생시키고 공장폐쇄까지 이룬 원진레이온 기계의 중국수출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원진레이온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박인도, 원진비대위)는 3일 "직업병이른 원진레이온 기계의 중국수출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원진레이온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박인도, 원진비대위)는 3일 "직업병이른 원진레이온 기계의 중국수출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원진레이온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박인도, 원진비대위)는 3일 "직업병이른 원진레이온 기계의 중국수출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원진레이온 비상대책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직업병 연구병원과 노동박물관의 설립을 요구하며, 원진노동자들의 정부투자기관의 재취업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36년간 사용한 원진레이온 기계는 59년 화산백화점 박흥식씨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당시 20년 이상을 사용한 중고기계로 이미 60년가량 사용된 것이다.

한편 36년간 원진레이온에서는 3백49명의 직업병

환자가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16명이 사망했다. 특히 16명의 사망자 중 2명은 직업병 고통에 시달리다가 끝내 자살하고 말았다. 진행성 질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은 퇴사한지 23년만에 병증세가 나타나 직업병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불시에 찾아오고 있어 1만5천여명의 원진출신 노동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형사소송절차·장애아동의 권리등 규정 정부 94년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90년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in the Rights of Convention)에 우리나라는 91년 11월 가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안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가입 의무국이 지는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51개조로 이뤄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우리 실정에 비춰 몇가지 조항을 중요하게 꼽고 있다. 우선 또한 19조에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행정·사회·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장애아동이 교육훈련·건강관리 및 재활지원·취업준비·오락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계몽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23조)고 명시하고 있다.

24조는 국가의 건강관리 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담고 있으며 32조는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정신·도덕·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가입국이 인정해야 한다(제32조)고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그 처벌과 제재수단의 규정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인에게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상의 권리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가입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인정한다(제40조)고 되어 있다. 따라서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지 않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할 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정부는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루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완전한 진실의 공개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가 되고, 정확한 진실의 파악없는 관용은 '특혜의 면책'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일본교과서에 '정신대' 범죄 명기요구

4일 정대협 117번째 수요시위에서 진상조사 및 추모비 건립도

117번째 맞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 수요시위가 4일 12시 안국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이미경, 여연)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수요시위에서 여연 사무국장 나민수씨는 "일본정부는 정신대문제를 책임지고 희생자들과 피해국들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신대 문제의 진상조사 △일본내에 추모비 건립 △교과서 개정하여 정신대 제도의 범죄성 명

기 △국제법 시효부작용협약 가입할 것등을 일본정부에게 촉구했다. 수요시위에는 정신대 피해자들과

전해투 요구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원상회복'

기아특수장 50m 높이 굴뚝 점거 '부당해고 철회'

지난 3일 오후 5시경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해투 신문 발송작업을 하던 전해투 대외협력부장 황용범(28,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씨가 그 자리에서 서초경찰서로 연행되어 4일 현재 조사를 받고있다.

정대협·여연등 20여명이 참석해 집회를 마친뒤 홍보활동을 벌였다.

황씨는 대우정밀에서 병역특례노동자로 일하다 지난 91년 '연대회의' 관련으로 수배되었고, 그 해 6월 대우정밀에 경찰이 투입된 이후 해고되었다. 황씨는 이에따라 병역특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해투는 3일 성명에서 "김영삼 정권이 과거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원상회복을 약속"한 사실을 환기하며, "황씨의 석방과 병역특례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으로" 문민정부임을 보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고노동자들의 투

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새벽4시 30분경 기아특수장 해고노동자 조성욱(기아특수장 민주노동자회 의장)씨가 회사내 50미터 높이의 굴뚝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회사측과 현노조집행부의 기만적인 임금억제 음모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회사측이 조씨의 요구를 수락하겠다는 답변을 해 당일 오후 3시 50분경 굴뚝에서 내려왔으나 대기해 있던 경찰에 의해 연행되기도 했었다. 조씨는 그날 밤 10시경 풀려나 회사측과 협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태지역 AI회의 7.28-31 북경여성대회등 논의

앤네스티 아·태지역 회의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YMCA에서 열린다. 아·태지역 18개국에서 40여명이 참가할 지역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발전전

(2면에 계속)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세미나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

강사 : 박원순 변호사

다시 돌아온 5월에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의 처벌은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리하게' 진행되는 과거청산이 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 5월 12일(목) 오후 7시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회비 : 3천원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을 빛내주실 개인 및 단체를 찾습니다.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하여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경우 : 후원단체나 후원단체로 참여 가능
개인의 경우 : 약 200여명으로 구성되는 초청인단에 초청인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단은 행사에 소요될 비용 중 5만원 이상 내주셔야 합니다.

추진 주관단체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연락처 :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 216-016815-018 김은영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공청회

9일 5시 기독교회관

이문옥 전감사관의 파면 처분취소청구소송이 지난 달 27일 승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양심선언자보호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9일 오후 5-8시 기독교회관에서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양심선언자 보호입법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문옥 전감사관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식(중앙대 행정학)교수가 '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백승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가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기초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석준(이화여대 교수), 장기욱(민주당 의원), 김종철(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준수(나라사랑 양심선언자모임)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의,는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불교운동연합등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인권문제관심은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이사장 김대중, 아태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중인 미국무성 인권국 상임정책자문위원 조지 리스틴씨가 4일 오전 「인권운동사랑방」을 방문했다.

리스틴씨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특히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권정책은 더욱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개인과 민간단체들과의 관계도 중요시하고 있다"며 "인권운동사랑방" 방문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목표는 '미국의 생존'이라고 밝히면서도 인권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현재 미국이 가장 관심을 두

고 있는 인권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 인권을 통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가치를 추구하자고 주장했다.

리스틴씨는 이번 방문중에 김근태(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공동대표)씨 등을 만나고 민가협도 방문했다.

◆ 단체 간행물 ◆

□시민과 변호사(4호)-서울지방변호사회(☎ 522-9413)
·주요내용 : 시민의 소리-도로교통법 예찬(김명식)/장애 인권변호사의 양성(김재준)/변호사와 의거부(안재형) 등//입법자료-특별검사//법조인단-한국법조, 미국법조(좌담)//함께하는 광장-법률시장개방에 대한 진보적 자세(김기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고나서등

□운동본부 소식(4호)-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요내용 : 권두언-미국인으로서 왜 이 일을 해야되는가?(문애현)/이달의 미군범죄(유완수·박양식·김주영·한미라씨 윤천성씨 일가 폭행사건등)/운동본부에 보내온 편지(김지호)등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이다" :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대책 집중토론회 자료집
·주요내용 :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이다(이수연)/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대안소고-성희롱사건 재판의 경과와 잠정적 평가(박원순)/개인, 노조, 고용주, 국가차원의 성희롱 예방과대책(정장자)등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동명의 발제(조창영)/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윤찬영)/사례발표-좌절 딛고 지킨 권리(최일권)등

□열린사회와 가족-'94 세계가정의 해 기념세미나 <자료-I,II>-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

□군경 양심선언(제4호)-양심선언 군경 지원대책위
·주요내용 : 탈영처리된 전경, 의문의 병사체로 발견/다시 전경대에 들어가며(강태중)/기무사의 병사인권탄압은 계속되고 있다-평실련 조직사건을 중심으로/군·경 양심수 현황등

□장애인문화 창달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한국건설정책연구원
·주요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박용환)등

□국제학술세미나-노인을 위한 보호시설과 부양체계의 한국적 모형개발-한국노년학회

·주요내용 : 한국 노인보호시설의 발전방향(은만기)/미국과 캐나다의 노인보호시설 현황(최성재)/노인요양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연구결과(Rose C. Gibson)/한국노인 보호시설 정책(구자순)/민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부의 규제(John M. Herrick)등 7편의 논문과 특별강연등
·문의 : ☎ 361-3536

□국제학술세미나-한국고정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한국고정학회

·주요내용 : 한국교도행정의 발전과 현황(이순길)/미국 고정사회복지의 현황(Prof. Marilyn L. Flynn)/일본 고정사회복지의 현황(오경식)/교정과 지역사회(이백철)
·문의 : ☎ 361-2958

(1면에서 계속)

락을 논의하고, 95년 북경여성대회에 관한 아·태지역 앤네스티의 입장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회의중인 29일에는 국내 재야 인권단체대표, 종교인, 정치인 등을 초청하여 아시아지역 인권문제를 토론하는 '양심수인의 밤'도 열 예정이다.

◆ 행사 안내 ◆

□제104주년 세계노동절 쟁취기념 장기기증식
·일시 : 5월 6일 오전 11시(☎ 784-6037, 8)
·장소 : 여의도 백화점 6층 전해투 농성장
·주최 :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

□가정폭력 추방주간 선포식 및 사진전 개막
·일시 : 5월 6일 오전 11시
·장소 : 탑골공원
·주관 : 한국여성의 전화(☎ 269-2962,4)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완전한 진실의 공개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가 되고, 정확한 진실의 파악없는 판용은 '특혜의 면책'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해고노동자 104명 장기기증

전해투 노동절 104주년 맞아 소외받는 사람과 고통나누기 위해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주장 22일째 단식중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6일 오전 11시 여의도백화점 6층 전해투 농성장에서 세계노동절 104주년을 맞아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1백4명의 장기 기증서는 천주교 서울교구청 산하 한마음운동본부(54명)와 한국불교 대원회 각막 및 장기기증본부(50명)로 전달되었다.

조위원장을 비롯한 1백4명의 전해투 소속 장기기증 해고노동자들은 "많은 국민들이 임원비가 없고 치료비가 부족해 수술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장기이식만 하면 충분히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차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며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장기를 기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영길(전노대 공동대표)씨는 격려사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신체의 일부를 내놓겠다는 전해투 노동자들의 숭고한 정신에 고개가 숙여진다. 지난해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싸우고 있는 전해투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안정된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수련(전 한양대병원 노조위원장)씨는 "복직판결을 받고도 임금지급마저 거부당하며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조정천씨와 배일도씨의 아버지 고배상봉씨의 유족자살등 지난해 전해투노동자들은 많은 슬픔을 겪어야 했다. 이 자리는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식에는 장기기증

자와 신계륜(민주당의원), 김금수(노동교육협회장), 양규현(전노협 위원장), 허창(사무금융노련), 지선(불

교개혁회의) 스님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부터 전해투의 조위원장등 10여명이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 현재 4명이 22일째 계속하고 있다. 또 해당그룹의 본사건물이나 각사업장등 전국 15곳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중이다.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부른다'

가정폭력 처벌법규 마련등 사회적 관심 필요
여성의 전화등 가정의 해 맞아 가정폭력 추방캠페인

93년 한해 가정폭력으로 인해 3주이상 진단을 받은 여성이 23%에 이르고, 구타당한 여성중 26%가 칼이나 망치로 당했다. 또 구타남편이 폭력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45%, 자녀까지 학대하는 경우가 52%에 이른 다(한국여성의 전화 93년 상담통계 결과).

유엔이 정한 가정의 해를 맞아 가정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정폭력 추방주간' 선포식이 6일 탑골공원앞에서 시인, 여성단체 회원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대표 박명운)등 9개단체는 이날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선포하며'라는 성명에서 "평화로워야 할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가 가정을 비참하게 파괴시키

고 있다"며 "가정폭력은 이제 더 이상 가정문제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와 가해자들을 처벌·교정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문우 여성의 전화 대표는 "가정내 평화와 민주주의가 사회평화와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포식후 가정폭력으로 당한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상처를 찍은 사진전이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말로만 들었던 구타의 심각성이 저토록 심한 것인 줄은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단체탐방 19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 키를 한껏 자랑하고 선 빌딩 숲과 그사이를 흐르는 자동차의 물결이 엉켜 있는 소송들이 너머로 육중하기만한 법원건물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호령하고 있는 듯하다. 그 육중함에서 눈을 빼고 골목으로 들어서서 찾은곳, 문앞에서 맞아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팻말의 소박함이 우선 신선히 느껴진다. 주어진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위에 군림하려 하는 법을 떠나 우리사회의 많은 모순들이 빚어내는 문제속으로 뛰어든 이들, 법과 제도의 민주성과 인권의 보장을 위해 법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민변이다.

올 5월달로 만 6년을 맞이하게 되는 민변의 역사는 비민주적인 법문화에의 저항이자 사회민주화운동선상에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해 온 것이었다. 민변 이전에는 인권변호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분들이 독재와 긴급조치시대의 법정에서 홀로 싸웠다. 이돈명, 한승헌,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 들이다. 이분들의 노력이 쌓여 85년 조영래, 이상수, 박원순변호사 등이 정법회를 창립한다. 정법회의 활동시기에는 인권변호사가 수적으로도 늘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많았다. 이속에서 인권변호활동의 조직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법회가 확대개편되어 88년 5월 28일 민변창립을 맞게 된다.

민변창립의 의의는 변호사업무의 개별성을 극복하고 조직적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것과 그속에서 변호사운동을 사회민주화운동에 접목시켰다는 점, 일반운동조직과 차별되는 법적 전문성을 가진 제도개선활동을 벌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51명의 회

원으로 시작되었던 민변은 이제 부산경남지방부를 포함하여 162명의 회원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그간 회원들의 손발을 거친 사건들은 우리 시대의 기록이 될 것 들이다. 주요조직사건이 모두 안기부를 거쳤다면 또한 민변을 거쳤다고도 할 수

인권의 바다를 향해 헤엄 '민주사회를 위한 민변'

있을 것이다. 이영희교수 방북취재 계획 사건, 화가 홍성담사건,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등 제목만으로도 굵직한 사건들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집시법 및 화염병 처벌법, 노동법에 관련된 사건 등을 통하여 수많은 양심수의 변론을 도맡아 해왔다.

그렇다고 민변의 활동이 변론활동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변론활동이 기본적인 사업이라면 그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어왔다.

첫째,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사업이다. 88년 사당동 강제철거 진상조사, 구치소 및 교도소내 인권상황 설문조사 등 20여차례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둘째, 법률 및 법제도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이다. 회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구성된 8개 분과가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이는 금요세미나가 매주 열리고 있다. 회원들 중에는 국가보안법, 행형법, 국제인권법등에 관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이들도 많이 있다. 이런 연구활동에 기반하여 '반민주 악법 개폐 의견서'등 각종 보고서의 발간, '한국행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국가보안법 토론회' 등 수차례의 토론회, 공청회 개최를 한 바 있다. 셋째, 인권향

상을 위한 여론 형성사업으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단독판사들의 사법부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지지하며 사법부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모으는 노력을 하였다. 넷째, 연대활동을 통해 인권옹호를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해왔고,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하여 '아시아국가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신포지엄'을 주최하는 등 다른 나라 법률가단체와의 연대,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보호체제의 이용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권의 실상」, 기관지인 「민주사회를 위한 민변」을 비롯한 각종 출판사업등 민변의 활동은 인권의 바다에서 먼거리를 향해 헤엄쳐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향배가 6년을 맞이한 지금 민변활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회원들간에 제기되고 있다. 민변이 법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법정의 안과 밖, 사회속에서 우리의 인권을 고민해 온 만큼 현시기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까지의 바쁜 발걸음을 정리해보며 앞으로 활동의 정기성, 계획성, 일상성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법의 문 밖에서 고통받아온 이들, 그리고 이제 그 법의 주인이 되어 권리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과정속에서 민변이 가진 전문성과 그 잠재성이 더욱 더 발휘되기를 열망사회의 변호인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바라마지 않는다.

<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5월 9일(월) 오후 5시-8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문의 : (☎ 766-8828)
·주최 :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 기 조 발 제 ◎

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
: 박홍식(중앙대 행정학과)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백승현 변호사(민변)

◆ 행사 안내 ◆

- '직업병공정' 원진레이온계 중국이전 반대결의대회
·일시 : 5월 7일(토) 오후 2시
·장소 : 종묘공원 (☎ 0346-63-3645)
-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국제학술 심포지움
·일시 : 5월 7일(토) 오전 10시(☎ 714-5345)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인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양심선언 보호입법은 민주주의의 시작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은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 공청회는 양심선언자등과 국회의원등 1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부정비리가 아직도 여전하고 고도화되는 사회속에서 감사원, 상급기관 등 외부기관의 감사로는 좀처럼 드러나기 힘들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부정비리를 직접 접하는 개인들의 양심선언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정의로운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백승현 변호사(민변)는 양심선언을 “내부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고 목적은 공익”이라고 지금까지의 47명의 양심선언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양심선언자 대부분이 처벌받았거나 윤석양씨 처럼 수감중이기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힌 백변호사는 “양심선언은 국민이 가진 저항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불법명령을 거부할 의무와 권리가 제도화될 필요성을 환기시킨 백변호사는 과거 양

심선언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양심선언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변호사에 앞서 기조발제를 한 박홍식교수(중앙대 행정학)는 “내부고발은 이리떼가 양떼를 덮치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였다. 박교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외부기관의 감사로 찾

을 수 없는 부정을 찾기 쉬워 부패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교수는 또 불의를 보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일부이기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공무원들은 국민이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내부의 비리를 고발할 때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자들은 이후 질의·응답과정에서 “사기업 내에서의 고발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2면에 계속)

◆ 공 판 안 내 ◆

□5월 10일(화)

·문교부, 두밀분교폐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1시, 서울고법 413호, 2회

·이순심, 살인(폭력남편 살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김형렬, 국보법(PC통신 관련), 10시, 424호, 선고
·조용찬, 국보법, 11시, 317호, 1회
·김삼석외 1, 국보법, 4시, 서울고법 309호, 항소심 1회
·조기현외 1, 특경가법(사기), 4시, 311호, 6회

□5월 11일(수)

·유영상의 2, 공문서위조등, 2시, 318호, 3회

□5월 12일(목)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11호, 2회
·예영준, 폭력행위등, 11시, 317호, 1회
·김선민의 1, 업무방해, 10시, 318호, 선고
·손지영외 1, 업무방해, 10시, 423호, 선고

□5월 13일(금)

·김태일, 국가보안법(희망새), 10시, 317호, 1회
·주대봉,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1회
·정용화, 업무방해, 10시, 422호, 1회
·정양자의 1, 특경가법(사기), 2시, 423호, 4회
·김지한의 2, 업무방해, 2시, 319호, 속행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세미나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

강사 : 박원순 변호사

다시 돌아온 5월!
과거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거청산
이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리하게’ 미루어지는 과거청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거듭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 5월 12일(목) 오후 7시
-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회비 : 3천원

전해투 단식농성 25일째 건강상태 극도악화 병원치료 거부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 강조 ‘양심세력의 지지와 격려’ 호소

지난 4월 16일 단식투쟁을 결의한 이후 10일 현재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단식투쟁이 23일째로 접어들면서 해고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여의도 민주당에서 단식중인 전해투 위원장 조준호씨는 위산과다분출로 목으로 피를 토하고 있으며 진료한 의사는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켜 생명이 위급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김달경(의료보협 해고자)씨와 김장호(힐튼호텔 해고자)씨는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다.

단식중인 노동자들은 극도의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거부하며 김영삼 정부가 약속한 구속·수배·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전해투의 한 관계자는 “진실로 문민정부이고 싶다면 우리들의 단식투쟁을 의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단식으로 발생할 이후의 문제들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바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광주민중항쟁의 민주화운동 재평가 5월17일 국제심포지움 개최 망월동 기념 돌탑쌓기도

광주항쟁 14주년을 맞아 광주지역은 물론 서울등지에서 광주항쟁기념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그 중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 모임’(공동대표 김호준등 4명, 시민연)은 국제심포지움과 망월동 돌탑쌓기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연의 최원일 간사는 “80년 광주항쟁을 국내에서만 바라보니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광주항쟁은 필리핀의 민주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점에서 국제연대를 통해 광주항쟁

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의미를 지닌다”고 국제심포지움 취지를 설명했다.

필리핀·태국·일본·독일 등 ‘해외에서 보는 5·18 광주민주항쟁’의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이 17일 오후2시 광주가톨릭센터에서 열린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사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각국 단체들과 연대하여 광주를 세계적으로 보편화시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에는 일본 등 4개국에서 국회의원, 신부, 대학교수, 아동작가, 사

(☞ 1면에서 계속)

이날 공청회에는 92년 3월 군부제자 투표표 고발한 이지훈 중위, 91년 5월 전경대해체를 주장하는 양심선언을 한 박석진씨, 92년 영일국민학교 교재체택을 둘러싼 비리를 폭로한 주필숙 교사(담동국민학교 교사) 등이 양심선언 사례를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에서 밝힌 87년 이후 보고된 양심선언자는 양승균(87년 7월)씨등 전경 24명, 이동균(89년 군명예선언)씨등 군인 20명, 이문옥(감사원 감사관), 김말룡(민주당) 의원등 48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양심선언후 수배, 구속, 파면등의 처우를 받았다.

회사업활동가 등 12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17일 광주민중항쟁 전야제 참배, 기자회견등에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18일 저녁 국제연대를 위한 토론이 마련돼 있다.

또한 시민연은 망월동 5·18묘역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돌탑쌓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망월동 기념 돌탑쌓기는 작년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와 광주 YMCA가 주관해 오던 것을 보다 조직적인 시민참여를 위해 올해부터 시민연 주관으로 바꾼 것으로 망월동묘역 참배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 행사는 국내외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5월달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망월동을 찾는 참배객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돌을 가져와 염원을 담아 돌을 쌓게 되는데, 돌탑쌓기는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 정신을 전세계로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망월동 묘역 오른편 입구에는 베를린 장벽의 돌, 백두산, 한라산에서 가져온 돌들이 쌓여가고 있다. 문의 062) 227-4611

일법무상 ‘증권위안부는 공칭’ 정대협 해임요구

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호재 등)는 천호환의원 원장 윤석용씨가 정신대할머니 8명을 초청해 진료된 한약 조제를 해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석용씨외에도 작년에 천주교여성공동체와 민중당계원에서 할

머니들에게 손수 한약을 지어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정대협은 지난 4일 나가노 시계토 법무상이 중군위안부를 공창(公娼)이라고 표현한 발언에 대해 해명·공식사과와 함께 시계토법무상의 해임을 요구했다. 정대협은 하타내각의 시계토법무상이 침략전쟁범죄를 식민지해방전쟁이라 한 것은 아시아피해국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신임내각이 태평양전쟁 범죄보상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라고 항의했다.

원진 기계 중국 수출 반대 ‘원진노동자의 불행’을 중국에까지 수출할 수 없다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위원장 박인도)는 7일 오후 2시30분경 중요공원에서 노동자와 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병 공장 원진레이온 기계 중국이전반대’ 집회를 갖고 원진레이온 기계의 중국 수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중국에 수출하기로 한 원진레이온 기계는 3백명이 넘는 이화화탄소 중독 환자를 양산한 대표적 직업병제조기이자 공해 발생 기계”라며 “이런 기계가 중국당에서 다시 가동될 경우 수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려 쓰러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화를 마치고 “더 이상 지구촌에 원진 노동자와 같은 불행한 노동자들은 없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인도를 따라 명동성당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 제일은행 128-10-131017
- 농협 011-01-404581
- 국민은행 015-21-0723-021
- 예금주 : 서준식
- 예금주 : 서준식
- 예금주 : 서준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인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만삭일 때도 구타” 남편 친구 증언

폭력남편 살해 이순심씨 공판 아들도 나와 정상참작 호소

폭력남편 살해로 기소된 이순심씨 증인신문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신문으로는 승진 이진태씨의 직장동료 이상용씨와 피고의 아들 이아무개(20)씨가 출두했다. 이상용씨는 “70년부터 피고인을 알아 왔는데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양순한 여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진태씨를 69년부터 알아왔으며 이씨와 중매를 썼는데 승진 이씨가 늘음과 술을 좋아했으며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 왔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만삭일 때조차 구타했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이상용씨의 집에 피고인이 밥을 얻어먹으러 오기도 했는데 그때 그의 처가 피

고인에게 이혼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한 피고 이씨의 아들은 증인신문에서 “살해 당시 어머니는 온몸을 떨고 있었고, 눈동자는 멍하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말했다. 또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너무도 착한 분이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국민학교때부터 줄곧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이유없이 어머니를 때렸고, TV·시계등 물건을 부수고 밥상을 뒤엎기가 일쑤였으며 그때마다 3남매는 숨어 지켜볼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및 단대 천안캠퍼스 법대생

60여명등 2백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결심공판은 5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씨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컴퓨터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첫번째 피고인인 김형렬(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형사지법 9단독(재판장 유우열 판사)은 “피고인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띄운 사노맹 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국보법으로 인정된 것이 법원판례이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노맹이 이미 반국가단체로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천리안에 게

재한 것이 다양한 입장의 토론이라고 말하지만 다양함을 이유로 하기에는 그 자체가 피상적이고 내용이 급진적이며 국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인여성부터 아동에 이르는 구타실상 사진전 가정폭력 추방주간(6-13일) 12시-5시 탑골공원앞

「한국여성의 전화」등 9개 여성단체가 여는 ‘가정폭력 추방주간’(5월 6-13일)에 남성의 아내 및 어린이에 대한 구타의 실상을 증언하는 사진전이 탑골공원 앞에서 매일 열리고 있다. 성인여성의 피해사례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까지 이어지는 구타의 실상을 35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사진전은 매일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한편 「한국여성의 전화」는 오늘 사진전이 열리는 동안 지난 1월 자신을 구타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순심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거리서명도 벌일 예정이다.

◆ 행사 안내 ◆

- 동부그룹 한국자보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관계 정상화 촉구 홍보활동
 - 일시 : 5월 11일(수) 11시 30분-13시 30분
 - 장소 : 한국자동차보험 빌딩(울지로 3가) 근처
 - 주최 :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 312-4041/3)
- 가정폭력 추방위한 영화상영 - 무료
 - 일시 : 5월 11일(수)~12일(목) 2시-5시
 -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 제목 : 엘리스는 여기 살지 않는다는 4편
 - 문의 : ☎ 356-0070, 269-2962/4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세미나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

강사 : 박원순 변호사

다시 돌아온 5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거청산
이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리하게’ 미루어지는 과거청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거듭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 5월 12일(목) 오후 7시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회비 : 3천원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등 3만건 전산화 완료

법제처가 법제도개선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현행법령집 50권 및 법령연혁 목록자료 3만건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컴퓨터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헌법을 비롯 8백 74건의 법령, 1천 2백 97건의 대통령령, 1천 66건의 총리령, 부령등 현행법령 3천2백 37건과 법령연혁목록 3만건의 자료가 전산화되어 누구든지 가임만 하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행정종합정보망을 통해 93년 6월부터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등까지 모두 검색이 가능해 관심있는 법률과 그에 따르는 부수법령을 그 자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법이름중 일부단어만으로도 찾을 수 있어 정확한 범명을 몰라도 대체적인 내용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미 폐지된 조항이나 법률은 검색할 수 없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업무와 행정심판 업무,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최근 입법동향등 법률문헌 정보도 전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정보자료를 이용하려면 행정종합정보망에 가입, 개인용컴퓨터로 직접 정부전자계산소에 다이얼업 모뎀을 시도하거나 포스서브, 한국전력(KIS) 등에 접속하여 행정종합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다. 문의 : 720-3815(법제처 업무분석과)

두말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

두말리분교 폐교취소가처분소송 2차공판이 서울고

법 민사 제20부(재판장 조운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1시 열렸다.

이날 방청객으로는 두말리분교 학생 23명과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는데 재판장은 “방청석 학생들이 방학 중이나, 이 사건에 아이들이 원고가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원고대리 이석태변호사에게 반문했다. 또한 재판장은 가치분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석태변호사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은 재판장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번 재판결과가 불확실하게 여겨진다. 도서벽지인 홍교교육상 폐교취소처분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장순이(43·학부모)씨는 “폐교된 뒤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다. 생활형편도 어려워지고 농사철이라 논 정보도 전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정보자료를 이용하려면 행정종합정보망에 가입, 개인용컴퓨터로 직접 정부전자계산소에 다이얼업 모뎀을 시도하거나 포스서브, 한국전력(KIS) 등에 접속하여 행정종합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다. 문의 : 720-3815(법제처 업무분석과)

법정시비를 가려야 할 문제는 아니며, 교육문제가 어른들의 문제나 농어촌 문제, 사회·정치적 문제의 재물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편집주 : 지난 4월 이문옥 감사관의 승소로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입법례

(1)민간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대표적인 것이 「부경주장법(False Claims Act of 1986)」이다. 내부고발자는 이 법에 따라 정부의 구제제도나 기업내부의 그것이 아닌 법원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기업이 정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것을 알아차린 기업의 구성원이 연방정부를 위하여 그 기업을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 이 법은 내부의 양심적 고발자에게 가장 강력한 보호를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법은 고발을 하는 내부자에게 고용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주는 비리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그 개인에게 어떠한 보복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또 부패교정 행위에 대하여 댓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자원보존과 회복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등이 민간기업의 고용인들에 대하여 보호를 확대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2)정부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정부기관내의不正한 활동을 고발한 연방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양심적 고발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각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은 상하 양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공무원은 불법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일도 당하지 않으며 모든 내부양심적 고발자가 보호된다, △고발자는 법적입증의 부담을 지지않고 우선 잠정적 구제를 받게 되며 전보의 요구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3)군사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군대의 양심적인 내부자들에 대하여도 민간인들이 받고 있는 것과 같은 동등한 보호를 주기위한 노력의 일부로 「군사내부고발자보호법(Military Whistleblower Protection Act-1988)」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군대 복무중 국민을 속이는 실체를 고발하고, 그 결과 보복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공식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문제제기와 보호노력이 수차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시도되어 오고 있어 이에 관한 입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현재 15개주에 있다.

미국은 1960대 이래 무수한 내부고발 현상을 보아왔다. 그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한 적지않은 시행착오도 보여지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풍부한 논의가 있었다. 수많은 판례들이 나왔고, 보호가 있기까지 찬반의 토론도 겪을 만큼 겪었다.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 행사위 620여명 전·노 전대통령등 고소·고발 17일은 전국에서 고발 14일 광주항쟁 재조명 학술대회도

95년 5월로 시효가 만료되는 80년 5월의 광주학살 책임자를 응징하기 위한 고발운동이 펼쳐지고 광주에서는 14주기 광주항쟁 기념행사가 열린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이창복, 홍성우등 12명, 광주항쟁 계승위원회)와 ‘5·18 14주기 행사위원회’(위원장 강신석)는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광주학살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서초동 서울지검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정동년(5·18 민중항쟁연합회장)의 3백20명이 고소인오로, 광주항쟁 계승위원회 소속위원 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씨등 3백여명이 고발인으로 직접 참가하는 이번 고소·고발은 “95년 5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광주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요구를 범국민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운동의 출발”이라고 광주항쟁 계

승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80년 5월 광주에서의 학살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고발인들은 13일 오후 2시 양재전철역 근처 새겨레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고소·고발인 명단과 이들의 구체적 혐의사실과 고소·고발의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

(☞ 2면에 계속)

원진노동자 재취업대책 갈팡질팡

2기저하철에 ‘수백명 채용’에서 17명으로 후퇴

원진레이온 폐업에 따른 원진노동자의 재취업대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노동부와 민자당은 10일 강봉균 노동부 차관, 이원택 서울시 부시장, 조부영 민자당 정조실장, 최성용 노동위원회 위원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6백여명에 이르는 원진노동자의 재취업문제를 논의한 끝에 환경미화원으로 151명, 도시철도공사에 17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전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10일의 당정협의 결정사항은 지난 93년 11월 24일 ‘원진레이온 노동자 정부투자기관 재취업대책’을 통해 밝힌 도시철도공사에 수백명의 인원을 한꺼번에 채용하겠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변화는 도시지하철공사 인원충원때 공채를 할 계획을 밝힘으로써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도, 원진비대위)는 “6백여

명중 공채상한 나이인 32살이 넘는 사람이 70%나 된다”며 “공채를 통한 채용은 그림의 떡”이라고 항의했다. 또 “설사 공채에 응한다해도 인조건사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살아온 원진노동자들에게 합격하라고 하는 것은 원진노동자에 대한 우롱행위”라고 강조했다.

원진비대위는 오는 13일(금) 원진노동자의 도시지하철공사 채용에 강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청에 항의방문단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원진레이온 기계를 낙찰받은 라전모방(대표이사 남재우)은 중국 요녕성에 있는 화성공사에 원진레이온 기계를 매각하기로 최근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진비대위는 “산업재해 유발가능성이 아주 많은 기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직업병 끼워팔기와 같은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문의 : 0346-63-3645

전해투 14일 해고자복지 비상결의대회 ‘자기희생적 투쟁에서 적극적인 원상회복 투쟁으로 전환’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전해투)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오늘로 27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해투는 14일(토) 오후 3시 영등포역광장에서 비상결의대회를 갖는다. 전해투는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비상결의대회’에서 김영삼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해고노동자 원상복지를 위해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

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을 천명하게 된다.

전해투는 “정부는 의지만 있으면 당장 복직이 가능한 병역특례해고자들과 의료보험등 정부출연기관 노동자들의 복직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의 자기희생적인 단식투쟁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비상결의대회후 전국 17개곳에서 벌이고 있는 텐트농성을 모아 중앙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벌일 방침임을 밝혔다.

10일 김삼석·김은주씨 항소심 1차공판 한통련 반국가단체 여부 가리기 위해 김대중씨 증인채택 요구 재판부 ‘더 검토해 보겠다’

지난해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된 후 남매간첩사건으로 발표되었던 김삼석·은주씨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10일 서울고법 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씨 남매는 1심에서 김삼석씨가 징역 7년 실형을, 김은주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석방된 바 있다.

김삼석 피고인은 한통련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임을 모르고 있었으며,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를 생각하였으며, 국가를 변란하거나 전복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군관련 자료가 많은 점에 대해서 김삼석씨는 군관련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기본이었으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나온 서적이나 신문 스크랩을 통해 자료를 모았다면서 이것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에 방문하게 된 것도 더욱 폭넓은 자료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남매 변호인단은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그 단체를 창립하는데 관계가 있었던 김대중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더 검토해 보겠다며 증인채택을 보류하였다.

(☞ 1면에서 이어짐)

북)과 각지방 민주단체추대로 서울, 수원, 인천, 광주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열리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광주항쟁계승 국민대회’ 전후에 광주학살책임자 35명을 서울지검등 각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지역에서는 고발장을 접수시킨 뒤 오후 4시 종로공원에서 집회를 갖는다.

한편 광주항쟁 계승위원회 산하 ‘법률대책소위원회’(위원장 박인제변호사)는 60여쪽에 달하는 고소장을 마련했으며 고소·고발을 돕기 위한 ‘법률자문변호사단’이 30여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다.

14일에는 광주항쟁계승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사회과학연구소」(소장 정윤형)가 주관하는 광주민중항쟁 14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90년대 한국사회와 광주항쟁’의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유한범(광주항쟁 계승위원회 간사)씨는 학술대회의 개최동기에 대해 “여지껏 광주항쟁계승사업이 광주지역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계승하고자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또 “앞으로 해마다 5·18 계승 주간에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는 김중배(언론인)씨가 ‘김영삼정권과 광주항쟁 정신’, 박영호(한신대 경제학과)교수가 ‘경제민주화의 과제’, 강명구(아주대 행정학과)교수가 ‘지방자치제와 광주’를 발표한다. 이날 또한 학술대회에 앞서 14일 오후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5·18에 즈음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항쟁계승위원회는 오늘 고문, 공동대표, 집행위원을 중심으로한 40여명의 참배단을 구성해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고, 오후에는 ‘5·18 14주기 행사위원회’와 함께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게 된다.

한편 5·18 관련단체와 광주 재야단체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5·18 14주기 행사위원회’(5·18 행사위)는 10일 오후 위원장에 강신석(5·18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장에 정동년(5·18 민중항쟁연합회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광주항쟁 기념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5·18 행사위는 이번 행사를 “진상규명 요구를 드높이는 범시민축제”로 치르기로 하고 백일장, 5·18 거리 재현극, 민주기사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연합」(상임의장)은 탈퇴, 독자적인 행사 추진 입장을 밝혔던 5민련은 9일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번 5월 행사는 재야단체와 함께 치를 것”이라고 밝혀 중전의 태도를 바꿨다.

문의처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363-1177, 8
광주항쟁계승위 : 747-4364, 5
새겨레교회 : 566-5460

◎ 양심선언으로 갇힌 이들을 위한 목요집회 ◎

·일시: 5월 12일(목)
·장소: 탑골공원 앞
·주최: 민가협
·발표: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씨 어머니 민인숙씨
이우형씨 약혼녀 김은숙씨

과거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12일) 7시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세미나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

강사 : 박원순 변호사

다시 돌아온 5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거청산.
이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리할 정도로 미루어지는 과거청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거듭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회비 : 3천원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체’

12일 민가협 목요일집회

양심선언자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호 절실

‘양심선언으로 갇힌 이들을 위한 목요일집회’가 12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주최로 열렸다.

이날 김종일 위원장(양심선언 군·경대책위)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부정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신분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양심선언을 한 이들이 ‘문민정부’의

출범에 토양이 되었다고 김영삼 정권이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법을 개정해 그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93년 6월 청와대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서 갔다가 비서관한테 들은

이야기”라며 법무부, 국방부 등의 이야기도 청와대 비서관의 논리와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정부가 말로는 양심선언자들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은 감감 무소식이라고 강조하며 “문민정부 이름값을 하려면 이들의 명예회복과 양심선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90년 10월 전경대 해체를 요구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지난 3월 17일 구속된 이우형 이경의 약혼자인 김은숙씨와 지난 90년 10월 보안사에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폭로한 윤석양씨의 어머니 민인숙씨가 나와 “이들의 행동은 올바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보안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21세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양심의 확대야말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행사 안내 ◆

□5·18 책임자 고소·고발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 5월 13일(금) 오후 2시
·장소 : 새겨레교회(지하철 양재역 근처, ☎ 566-5460)
·주최 :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 계승 국민위원회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 5월 13일(금) 오후 3시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주제 :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
·주최 :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

□제3차 불교인권위 인권상 시상식

·일시 : 5월 13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조계사 문화회관

□광주5월 민중항쟁 14주년 학술대회

·일시 : 5월 14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의원회관 1층)
·주제 : 90년대 한국사회와 광주민중항쟁
·주관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363-1177, 8)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해고노동자 비상결의대회

·일시 : 5월 14일(토) 오후 3시
·장소 : 영등포역 광장
·문의 : 784-6037, 8

가정폭력방지법 추진 ‘전국연대’ 결성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대표 박명운)등 12개 여성운동 단체가 지난 6일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캠페인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시작하면서 향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를 결성할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벌어지는 가정폭력추방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힘있게 추동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오늘(13일) 열리는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의 첫사업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는 그 동안 축적된 자료 외에도 전국적인 아내구타 및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여 이후 공청회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각 지역 단체에서 추천한 박원순, 조창영 변호사등 18명의 변호사와 같이 법률안 시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성폭력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아내구타 문제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는 이들은 아동학대까지 규제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정폭력법’을 걸러내

(☎ 2면에 계속)

○ 국제 인권 소식 ○

‘남아공 선거는 인류양심의 승리’

‘인권운동사랑방’의 장소영씨가 4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남아공에서 선거감시단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5월 8일 귀국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도적으로 이끈 범기독교선거감시단활동(EMPISA)에는 전 세계 22개국에서 350여명이 참가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장소영씨 이외에 파리에서 종교사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은경씨가 참가하였다.

장소영씨는 캐나다, 가나, 프랑스, 남아공 출신의 사람과 한조가 되어 독립선거위원회(IEC)의 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했는데 선거기간 전에는 해당된 지역의 각종 모임 방문, 선거유세 참석, 주민방문 등을 하였고 4일간의 선거기간 중에는 투표소를 돌면서 선거진행과정을 지켜보았다. 장소영씨는 남아공의 이번 선거를 “342년 동안 지속되어온 흑인들의 투쟁의 결과이자 인류 양심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세기사적 사건에 감시단의 형식으로 참가한 이번 경험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였다.

아파르헤이트의 실상에 대하여 장소영씨는 요하네스버그 교외의 여러 흑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아파르테이트가 얼마나 흑인과 유색인들을 비인간적으로 차별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사회개발 정상회담 준비

민간단체 회의열려

인권대회 공대위 대표 참가

지난 5월 2-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사회개발에 관한 유엔세계정상회담(WSSD)’을 준비하기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간단체 회의에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KONUCH, 이하 인권대회 공대위)를 대표하여 참석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은영 국제연대 간사가 지난 8일 귀국하였다. 이번 회의는 내년 95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대한 소개성격의 브리핑회의였는데 15개국에서 약 52명이 참석하였다.

PP21 조정단체 확대회의 ‘PP21 재구성 필요’

21세기를 위한 민중대안(PP 21) 조정단체 확대회의가 지난 5월 4-5일 방콕에서 ‘사회개발에 관한 유엔세계정상회담 아태지역 민간단체 준비회의’ 직후 열렸다. 89년 8월의 PP21 일본대회와 92년의 PP21 태국대회 이후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진로 모색을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일본 아태정보센터(PARC)의 무토 이치요씨는 발제를 통해 “앞으로 PP21은 공동소집자(Co-convenor) 대신 협력자(Partner)의 개념을 기반으로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작년 11월의 서울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ACPP, AMRC, ARENA, SOCO 등 홍콩에 있는 여러 아시아 지역 단체가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95년 말 스리랑카에서 협력자 모두가 참석하는 총회를 열리로 잠정 합의하고 2일간의 회의를 마쳤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의 이선태 선임연구원과 민변의 김은영 국제연대 간사가 참여하였다.

(☎ 1면에서 계속)

는 토양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의 첫번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개토론회는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홍장익), 「가정폭력, 사회폭력 범죄문제로 접근」(이영자), 「가정폭력의 사회적 의미와 대책」(심영희) 등의 발제와 토론이 벌어진다.

한편 이번 캠페인 동안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사진전을 매일 탑골공원 앞에서 벌이고 있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각 지방 순회사진전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기웅씨 11일 복직 ‘국민 인권보장에 최대한 노력’

지난 92년 11월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구속, 기소되어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진범이 불잡혀 풀려난 김기웅 순경이 지난 11일 경찰에 복직되었다. 경기도경 수원 남부경찰서로 발령받은 김순경은 12일 하루동안 대기를 하다가 오늘(13일) 남부경찰서 관내의 파출소에서 일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경은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의 처벌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을 93년 12월 24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한테도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와 가해자 개인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19개월만에 복직하는 김순경은 “자신이 경험을 한만큼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

법무부는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사형제도의 폐지와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만이라도 사형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대답, 사실상 청원내용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의식이 사형제도 존치를 원하고, 최근 사형을 존치하되 사형법칙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사형제도 철폐를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4월 20일 무엇보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빼앗는 제도라며 스승계 90여개국에서 사형제도의 폐지, 스승계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적 입증, 스승판의 가능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등을 들어 사형제도가 철폐되어야 하며, 최소한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이라도 사형집행을 유보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가정폭력은 남성·폭력문화등 사회환경과 연관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 아동학대에방법협회」, 「광주 여성의 전화」등 11개 단체들로 구성된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는 1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심영희교수(한양대 사회학)는 '아내구타의 사회적 의미와 대책'에서 우리사회에 가정폭력이 만연해 있다고 전제한 뒤 "여성을 위한 안전한 거리, 안전한 직장뿐만 아니라 안전한 집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

하다"며 가정폭력법 제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뿐 아니라 여성들이 보다 자유로이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 등 민사적 장치를 개발해야"한다고 말하고, 법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필수제포제의 실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폭력남편을 살해, 기소된 이순심씨의 경우 오랜 학대의 피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이 경우 여성범죄의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측면을 고려해 반드시 정상참작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자교수(성심여대 사회학 교수)는 '아내구타:가정폭력, 사회폭력 범죄문제로 접근'의 발표문에서 아내구타의 문제는 가부장제의 권위주의적 가족구조와 남성문화와 폭력문화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환경, 매체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해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이교수는 아내구타문제의 해결책은 "구타피해 여성들과 자녀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직·간접의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가해남성의 관리와 치유대책

이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가족, 학교, 대중매체, 사법기관 등에서 아내구타를 사회폭력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과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강의교수(서울대 의대소아과)는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와 대책에 대한 법적 시행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규상으로는,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아내구타와 아동학대의 해결에 있어 가정폭력이

(2면에서 계속)

미완성 '아침의 나라' 대본 이적표현물 혐의

13일 회망세 첫공판

'약혼녀 구속위협, 남파간첩 인정할 것 강요' 밝혀

미완성 노래극 '아침은 빛나라'의 대본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노래극단 '회망세' 단원 김태일(대표)씨등 5명에 대한 첫공판이 서울형사지법 2단독 심리로 열렸다.

김씨는 모두진술에서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발가벗기우고, 구타당해 혼수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경찰은 약혼녀를 구속하겠다고 위협하고 남파간첩임을 자백하라고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미완성대본을 문체삼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을 난도질하는 것과 같다"고 주

장했다. 94년 1월 노래극단 '회망세'의 기획을 담당한 이창열씨는 "회망세"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93년 11월초부터 수사기관이 나를 미행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히며 "통신동호회 '회망터' 회장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것을 보고 미행을 한다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정책을 비판할 자유조차 없다는 말이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2차공판은 5월 27일 10시 40분 서울형사지법 307호

◆ 행사 안내 ◆

- 광주5월 민중항쟁 14주년 학술대회
 - 일시 : 5월 14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의원회관 1층)
 - 주제 : 90년대 한국사회와 광주민중항쟁
 - 주관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363-1177, 8)
-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해고노동자 비상결의대회
 - 일시 : 5월 14일(토) 오후 3시
 - 장소 : 영등포역 광장
 - 문의 : 784-6037, 8
- 등부그룹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관계 정상화 촉구 시민대회
 - 일시 : 5월 16일(월) 12시
 - 장소 : 한국자동차보험 빌딩 앞(울지로 3가)
 - 주최 : 한국자보 시민연대(☎ 312-4042, 3)

광주항쟁 계승위 전·노씨등 35명 고소·고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요구

13일 615명 범국민적 고발운동의 시작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 계승 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이창복·홍성우등 12명, 광주항쟁 계승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80년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을 죽이고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있는 35명을 서울지검에 고소·고발하였다.

90년 10월 전경대해체를 주장하며 양심선언을 한 후 3년 6개월동안 수배되었다가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이우형씨에게 징역3년이 구형되었다. 성남지원 합의부(재판장 손평음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사법부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심선언 이우형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항쟁 계승위원회는 고소·고발의 취지를 △5·18 진상규명의 타진을 마친, △책임자처벌 문제등을 미룰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 민주주의를 진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항쟁 국민위원회는 또 오는 17일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등 범국민적인 고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민적인 고발운동은 광주항쟁 계승위원회가 서명을 취합하여 고발하는 방법과 국민이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접수한 고발장에는 80년 5월당시의 전체계엄

조성만열사 6주기 추모행사 14일 5시 명동성당 추모제

88년 5월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조국통일을 주장하며 할복투신자살한 고 조성만씨의 6주기 추모제가 서울대총학생회등의 주최로 조씨의 부모, 민가협·유가협 회원, 학생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3일 서울대에서 열렸다.

한편 '고 조성만열사 6주기 추모제'가 14일(토) 오후 5시 명동성당에서 '애국크리스천 청년연합'(의장 양준석) 등의 가톨릭계 청년단체 주최로 열린다.

이번주 '단체탐방'은 기사넘쳐 쉽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불교인권상에 정해숙·서준식씨 수상

「불교인권위원회」(상임대표 한상범, 송월주) 제3회 인권상 시상식이 13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제3회 불교인권상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와 정해숙(전교조 위원장)씨가 공동수상했다.

민주법연 4대회장에 박홍규교수 선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3일 총회를 열고 제4대회장에 박홍규 교수(영남대 법대)를 선출했다. 박교수의 전공은 노동법이고 「국제인권법」, 「국제노동법」 등의 저서가 있다.

1면에서 계속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 폭력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는 현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작성 범조인단'(가칭)을 구성,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가정폭력 방지법 입법을 위한 활동과 가정폭력 추방운동을 벌이게 된다.

◆ 단체 간행물 ◆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위한 연대회의

·주요내용 : 기초발제문-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박홍식),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백승현)/사례발표-이지문 전 중위등/논문(박홍식)-내부고발: 이론, 실제 그리고 합충적 의미, 내부고발자 보호와 민간단체의 활동:미국의 경우등

□한울노동법감자 ; 정의행위의 정당성과 면책-한울노동문제연구소(☎ 593-6501~3)

·주요내용 : 노동법교실-노동자의 정의행위와 면책/판례-절차위반쟁의 손해배상면책 안됨/판례해설-절차위반쟁의, 손해배상대상/판결/노동법 5문5답등

□우리네 아이들(94년 4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요내용 : 탁아운동의 새지평을 위하여(박주현)/94년 보육사업지침 교육용 자료 <부록> 94년 보육사업지침 분석/수업개방 지지투쟁은 왜 해야 하나(김종일)/탁아계 동향(한일 탁아교사 교류회)등

□어깨등무(94년 3월, 통권13호)-이내창열사 추모사업회

·폭력은 보호하고 정의는 짓밟는다?(김성희)/6월항쟁, 터질듯한 가슴으로(서원)/북한산 등반, 4·19 묘지를 다녀와서(우지영)/추모사업회·모교 소식/4월결산등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

·주요내용 : 발제-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황강의), 아내구타, 가정폭력, 사회폭력범죄문제로 접근(이영자), 아내구타의 사회적 의미와 대책(심영희)/가정폭력 사건일지등

□끝나지 않은 외침-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 계승 국민위원회

·주요내용 : 5·18 해결되어야 할 과제, 그 쟁점의 진상을 밝힌다-5월학살의 사전사나리오, 사망자는 198명뿐인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사법적처벌등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시정과 처벌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노총 “노총에 대한 ‘폭력적 공세’ 선전·폭로”등 결의 전해투 “폭력행사자의 적반하장”, “노총해체” 주장

전해투 노동자 8명 구속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가 16일 산별연맹 긴급대표자 회의에서 △노·경총 합의를 수행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이 크므로 대정부투쟁을 강화, △비노총계열 노동자들의 노총에 대한 ‘폭력적’ 공세를 최대한 선전·폭로, △16일의 노총앞 전해투 규탄 집회를 사전봉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에 대해 16일 “한국노총이 더 이상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님을 다시 확인”하고 노총해체투쟁에 나설 것을 재천명하였다.

전해투는 한국노총 결정사항에 대한 논평에서 △노·경총 합의 무효화, △노총점거농성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총에 대한 폭력적 공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철폐의 행위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6시 한국노총 앞에서 전해투 주최로 열린 ‘노총의 폭력행위에 대한 규탄집회’ 참가자 1백 20여명이 연행되었다. 이에 대해 전해투는 16일 “쇠파이프와 망치 등을 동

원, 폭력을 행사한 노총간부들을 구속하기보다는 전해투소속 노동자를 구속한 것은 이미 폭력테러집단이 되어버린 노총을 끝까지 비호하는 행위”라며 “현 정권이 노동자들의 희생위에 존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4일 한국노총 점거하다 연행된 70여명중 이종화(경동산업 해고노동

자)씨등 8명이 업무방해 및 기물파괴 혐의로 구속되고, 성한기(금성사 해고노동자)등 4명이 불구속되었다. 구속자명단 신승인(코렉스 스포츠), 박원주(금성산전), 이장현(금호타이어), 배현철(전노협 정의차장), 최태일(아시아텍시), 윤용성(홍익대), 유정(단국대)

‘김준기회장 퇴진, 한국자보노조 인정’ 요구

시민연대 2차 고발장 접수 1만3천40명 시민서명

국회헌법투사건과 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동부그룹산하 한국자동차보협을 규탄하는 ‘동부그룹노조탄압 규탄 및 노사관계정상화 촉구 시민대회’가 16일 12시 을지3가 한국자동차보험빌딩 앞에서 동부그룹 및 한국자보사원들의 집회방해시위 속에서 2시간동안 열렸다.

또한 이날 오후 4시30분 경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동완등 5명, 한국자보 시민연대)는 동부그룹 김준기회장, 한국자보 김택기 사장, 최일

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등을 고발하는 이근호(33·시민연대간사)씨등 1만3천40여명의 고발장을 지난 4월 15일 1차고발에 이어 2차로 접수시켰다.

신법타(한국자보 시민연대 공동대표)님은 시민대회 개최사를 통해 “동부그룹 돈봉투사건과 한국자보 노조탄압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동부그룹과 한국자보 경영자측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경남(시민연대 책임간사)씨는 “모든 원인은 김준기 회장에게 있다. 16일 현재 167일의 철야농성과 2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자보노조원들은 현노조집행부를 인정하고 협상의 대표성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사관계의 정상화에 동부그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집회를 통해 동부그룹 김준기회장의 사퇴와 정부는 노조탄압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과 국회헌법투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회에는 임재정(민주당의원), 허장(사무금융노련 위원장), 황원래(보험노련 부위원장), 허영구(전노대 집행위원장)등이 참여했다.

한편 시민대회가 열리기 30분전인 오전 11시 30분 경부터 오후 2시까지 한국자보 직원 3백여명은 회사현관입구를 막아선 채 “회사파괴를 자행하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돌리며 회사측 외부확성기등을 이용해 시민연대 집회에 맞서 대응했다. 이들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연대 꺼져라”, “노동귀족은 물러나라”, “김달룡도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보냈고, 집회 중간 시민연대측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시민연대측은 “회사측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529명 석탄일 가석방

법무부는 석탄일(18일)을 맞아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재소자 및 모범소년원생등 모두 529명을 가석방 및 가퇴원시키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광주항쟁 학술대회 ‘광주항쟁은 개혁추동의 원동력’

광주항쟁계승위 진상규명 특별법, 특별검사제 요구

광주항쟁의 정신을 전국민적으로 계승하고 민주주의 개혁의 철저화로 재발견하고자하는 광주항쟁 14주년 학술대회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주관으로 14일 국회위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90년대 한국사회와 광주항쟁정신”의 주제 아래 ‘김영삼정부의 개혁정책과 광주항쟁’(김중배), ‘경제적 민주화와 과제’(박영호), ‘지방자치체와 광주’(강명구)등 3주제로 발표되었다.

김중배(한겨레 신문사장)씨는 “광주항쟁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가장 철저한 투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광주항쟁정신에 비취 현시기 김영삼정부 개혁을 평가하고, 그 개혁의 철저화를 추동하는 광주항쟁정신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말했다.

박영호(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씨는 김영삼정부를 군부대통령정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역사적 진보성을 지녔다고 인정하면서도 “군부정권이 지녔던 반민주적인 경제정책, 민주배제적인 성장전략, 대기업 중심주의적인 경제운용등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에 시인연대측은 “회사측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또한 강명구(아주대 행정학과교수)씨는 군부독재정권에 가장 선진적인 투쟁정신이었던 광주항쟁정신이 현시기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정신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광주지역이 군부독재에 대해 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지역이었던 만큼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광주항쟁 계승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제정에 비취 현시기 김영삼정부 개혁을 평가하고, 그 개혁의 철저화를 추동하는 광주항쟁정신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말했다. 광주항쟁계승위원회는 “김영삼정권은 광주 시민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면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시건과 인정하면서도 “군부정권이 지녔던 반민주적인 경제정책, 민주배제적인 성장전략, 대기업 중심주의적인 경제운용등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에 시인연대측은 “회사측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광주항쟁정신 계승 국민대회

·일시 : 5월 17일(화) 오후 4시 / ·장소 : 종묘공원
·주최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 5·18 광주민중항쟁 제14주기 기념식 및 국민대회

·일시 : 5월 18일 오후 4시 / ·장소 : 금남로

◎ 심포지움-해외에서 보는 5·18 광주민중항쟁

·일시 : 5월 1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가톨릭센터 7층
·주최 : 5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치분신청 기각

두밀리주민 ‘이해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운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2월 폐교처분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교 두밀분교 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치분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폐교처분을 둘러싸고 양측이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 효력여부에 대해 뚜렷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효력을 정지할 경우 학교를 다시 여는데 따른 여러가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뒤따라야 하고 지금 당장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두밀분교 폐교반대 추진위’(대표 신홍균)는 16일 “공식통고로 받은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결정이다, 가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두밀리 주민들은 두밀분교 폐교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 민사20부에 제기해 놓고 있으며 오는 6월 7일 3차공판이 열린다.

두밀분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이 지난 2

월 28일자로 이 학교를 폐교, 상색국교에 통합시킨 데 대해 반대, 「두밀분교 폐교 반대 추진위」를 구성, 폐교의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광주민중항쟁 기념문화제

창작판소리 ‘5월 광주’, 5월심리극 ‘모란꽃’

18-22일 문예회관 대극장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하는 문화제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표 염무웅, 민예총)과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대표 송기숙)주최로 동송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18일부터 22일까지 펼쳐진다.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첫번째 광주민중항쟁 기념문화제는 ‘예술적 차원의 명예회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18, 19일에는 소리와 노래 그리고 굿이 함께 어우러지는 임진택 창작판소리 ‘5월 광주’가 공연되고, 20-22일에는 올해 제4회 민족예술상을 수상한 5월심리극 ‘모란꽃’이 무대에 올려진다.

‘5월 광주’가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의 생생한 기록이라면 ‘모란꽃’은 5월의 상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의 근원을 찾아내어 사회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번 기념문화제는 18일 첫공연과 22일 마지막 공연에 열림굿과 다짐굿을 배치해 문화제 전체가 하나의 굿적 구조를 갖게하고 있다. 공연시간은 오후 4시30분, 7시30분(첫날 4시30분공연 없음)이며 입장료는 일반 1만5천원, 학생 1만2천원, 단체 8천원. 문의: 763-4787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시정조치와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원진직업병 환자 또 10명 발생

올들어 42명 발생 지금까지 모두 359명 사망 16명

지난 해 7월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진레이온 출신노동자 10명이 이황화탄소 증독에 따른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도, 원진비대위)는 지난 해 9월부터 7개월간 핵자기공명단층촬영, 근전도, 청력등 8개항목에 걸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김종호(50)씨등 10명이 이황화탄소 증독증에 의한 직업병 환자로 확인돼 14일 노동부로부터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황화탄소 증독증에 의한 직업병 환자로 인정된 사람은 94년의 42명등 모두 3백59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16명에 이른다.

한편 원진비대위는 정부가 원진레이온 폐업결정을 하면서 발표한 원진노동자 재취업 종합대책이 지켜지고 있지않다고 밝히며 21일 중요공원에서 '원진노동자 재취업쟁취 결의대회'를 마치고 서울시청에 항의방문을 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황화탄소 증독증은 유해작업환경과 떨어져 있어

도 병세가 진행되는 '진행성 질병'으로 근무기간, 퇴직후 기간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지난 91년 5월 시위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고 김귀정씨의 어머니 김중분씨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해성(당시 김씨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시위진압 상황을 설명했다.

김중분씨등은 지난 93년 5월 당시의 시위진압이 신체에 직접위해를 가하지 않을 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고, 진압행위를 넘어선 폭력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1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결심공판은 6월 21일 오후 2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고 김광삼씨 49재

오늘 꽃동네 묘역

비전향장기수 고 김광삼씨 49재가 오늘 오후 음성꽃동네 묘역에서 열린다. 주도식에는 장기수 할아버님들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충북민족민주연합등에서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 '중격동중양'으로 숨진 고 김광삼씨는 55년 군산에서 체포되어 20년형을 받고 75년 출소했다. 77년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 3년 복역뒤 80년 사회안전법으로 보안감호처분을 받다가 88년 석방되어 음성꽃동네에 수용되었다.

한·일 보육운동의

현실과 발전방향 모색

오늘 2시 종로성당

한·일 보육운동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이 '한·일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의 주제로 오늘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지역사회탁아소년협회'(회장 최현숙, 지탁연), '일·한 보육교류연수협의회'(대표 김덕환) 등의 주최로 열린다.

신현희(35·지탁연) 사무국장은 "이번 심포지움은 한·일 보육운동의 현실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며, 이후 한·일 탁아교류회의를 갖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으로는 스즈키 쇼조(유유아발달연구소장)씨가 「지역보육운동」에서의 나의 주장을 발표하고, 호리 마사즈무(유유아발달연구소 주임연구원)씨가 '일본의 보육현황과 보육운동의 과제'를, 장미경(지탁연 정책연구부장)씨가 '한국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또한 심포지움뒤 그 자리에서 한·일 탁아교류회가 열린다.

문의 지탁연 275-8505

윤금이 살해범 마을 천안교도소에 수감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정역15년이 확정된 윤금이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이병의 신병을 사건 발생 1년 6개월만에 미군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17일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

마클 이병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한국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생명이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병 인도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미 대법원에 냈으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은 이를 기각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주한미군운동본부)는 17일 성명에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한미정부에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행정협정(본문 22조 7항)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된다라도 미국정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이를 고려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체탐방 20 /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

형 단금지, 휴업금지, 출입금지 등 빨간 테두리 속에 갇힌 행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여기 당연히 간혀야 할 것이 당당하게도 설치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것은 국회에도 드나들고 농협에 들렀다가 신성한 학교에도 갔다가 '땀땀하기만 한' 청와대에서도 '의젓하게' 기어나오고 있다. 뇌물수수, 부정비리라 불리우는 이것은 큰 도둑놈이 좀도둑을 재판하고 가두는 배경 앞에서 관객을 기막히게 하는 공연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드디어 관객이 팜플렛과 의자를 던지고 일어났다. 부정비리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압력행사를 위하여 시민고발운동을 시작한 「국회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한국자보 시민연대)가 바로 그들이다.

먼저속에 묻혀 있는 과거의 크고 작은 사건은 제쳐두고라도 올해만 해도 1월의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 3월의 '농협 한호선 회장 구속사건', '상문고 비리', 4월의 '상무대이전 관련비리' 등이 지뢰밭을 거닌 듯 여겨져서 더졌고 그 피해자들의 신음소리만 클뿐 책임당사자들은 여전히 안전지대에 있다.

먼저 문민정부의 개혁바람속에서 부정비리행정의 화려한 테이프를 끊은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을 간략히 살펴보자. 이 사건은 한국자보의 부당노동행위와 국회위증, 이를 은폐하고자 한 경원진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모비와 뇌물모비를 위한 탈법적인 비자금 조성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기업이 범법을 피해가면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신들의 부조리를 뇌물모비를 통해 감추려 하는 한편 부당해고와 노조 와해공작을 일삼는 등의 전근대적인 고질병 증세를 보여주었다.

더구나 김달룡의원의 폭로 이후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자보 김택기 사장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납득 못할 무혐의 처리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사건의 발단이된 한국자보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오히려 거세어졌다. 구사대를 동원한 노조

사무실 파괴와 노조간부 감금 폭행, 구사대 결성사주 및 노골적인 지원,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납부거부등 각종 서명강요, 조합비 미공제 및 미인도, 노조간부 임금 미지급등 탄압의 종류는 다양하기만 하다.

게다가 이 상황을 노노갈등으로 선

시민의 참여와 감시만이 '뇌물문화'를 썩힐 수 있다

전하고, 노조위원장을 "야심만을 추구하는, 입사이후 회사일은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세습노동운동가"로 비방하는 등 누가 칼자루를 쥐고 누구를 엄벌하려 있는지 완전히 적인이 뒤바뀐 상황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시민고발운동의 첫 시위가 담겨졌다. 3월 31일 김승훈 신부, 정운형교수, 김동환 목사등 135명의 발기인이 모여 '시민연대'를 결성하였고 "이번에는 대중 넘어가지 말자, 끝까지 밝혀보자"는 의지로 4월 15일 '뇌물추방 시민고발운동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1차고발장을 접수시켰다. 피고발인은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한국자보사장 김택기, 서울지방노동위 위원 최일곡과 성명 미상의 여야 국회의원, 노동부 공무원들이다.

또 지난 5월 16일에는 한국자동차보험의 온갖 방해를 이기고 '동부그룹 노조탄압 규탄 및 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시민대회' 후에 1만3천40명이 참가한 2차고발이 이루어졌다. 1차고발이 시민연대 발기인들의 고발이었다면 2차고발은 가두서명과 각계조직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시민이 참가한 것이다. 2차고발은 대한문 앞, 명동상업은행 앞, 자보빌딩 앞등에서 벌인 가두서명과 노동절 전야제에서 받은 접수등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시민고발운동을 통해 「한국자보 시민연대」가 이루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패기업주, 정치인, 공무원간의 검은 유착을 파헤치고 관련자를 엄벌하는 선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끝까지" '철저하게'라는 말이 '잠잠해지면', '의혹을 남김체로'로 대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이 관행적

인 축소수사와 맞서자는 것이다. 둘째는 건강한 노동조합에 대한 시민적 지지와 지원을 통해 민주적 노사관계 정착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가깝게는 노조탄압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자보 노동조합에 조직적, 지속적인 지원을 모으는 것이다. 회사측의 거부와 방해로 협상의 어려움은 크고 상황은 매일매일 변하는 속에서 기업측에 국민적 압력을 가하고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째는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의 뇌물문화와 뇌물주의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일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한 시민고발운동이 겨누어야 할 과제는 너무 멀기만 하다. 아니 이미 너무 무수한 화살이 박혀 있다고 할까? 그러나 힘없이 박혀 급세 뿔뿔 버리고 무수한 구멍만을 남겨 놓았다고 할까? 부정비리만큼이나 '뿌리뽑자, 밝혀보자'는 시도가 너무 많았다.

「한국자보 시민연대」는 이 안타까움을 극복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힘이 부친 면이 많다. 우선은 10여명의 기획위원이나 발기인 모두 여러곳에 몸담고 여러사안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국자보 시민연대」 내부로 힘을 모으는 일이 어렵고, 현재 2명의 감사의 힘으로는 감당할 일이 너무 많다. 부정비리에 대한 고발을 해오는 시민들의 전화가 많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한다.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대응세력이 너무 분산되어 힘의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사안별로의, 인맥으로의 분산을 지양하고 '연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강화할 때 '철저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까 한다.

썩어도 거름이 되지 못할 것들이 사회 곳곳에서 썩고 있다. 「한국자보 시민연대」의 고발운동으로 시작된 참여와 감시가 함께 섞여질때 우리사회의 뇌물문화도 썩어질 것이 되어 영양가 있는 사회의 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시정과 제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반박보고서 작성 방해' 의혹 '당연히 공개해야'

한국 정부는 올해 초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A규약)가입에 따른 최초 보고서(Initial Report)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최초 보고서는 6월 27-7월 1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사전회의에서 검토되며 올해 11월 정규회기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가 A규약 최초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국내 민간단체에서 외무부에 최초보고서의 사본을 공개하기를 요청했지만 외무부는 유엔에서 번역되어 나온 다음에 유엔 공식문서로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인권활동가는 "정부에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여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출에 앞서 이를 공개해야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제 와서 보고서의 공개를 뒤로 미루는 것은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 제출을 방해할 의도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내에서는 시기가 촉박하지만 국내 인권단체와 관심있는 인권활동가 및

변호사들 가운데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인권단체 및 관심있는 개인들은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6월까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사전회의가 열리는 6월말까지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하고 11월의 정규회기전까지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다루는 B규약과 달리 A규약에서는 노동, 사회보장, 장애인, 가정, 건강, 아동, 교육 등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직업병의 상징' 원진기계 이달말부터 선적 원진비대위 '돈 몇푼에 살인기계를 파는 것' '지구상에 또 다른 '원진' 직업병 환자 허용 못한다'

대표적인 '공해제조' 기계인 원진레이온 비스코시 인건사 생산시설이 빠르면 이달말부터 중국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원진레이온 법정관리 기관인 산업은행의 공개입찰에서 설비업체를 낙찰받은 라전모방(대표이사 남재우)은 이를 다시 중국 단둥시 화학섬유공사에 매각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비스코시 인건사중 50%를 라전모방이 수입하여 한국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이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2년 7월 제45차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가 심의되어 '국가보안법에 관한 단계적 철폐 권고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협력하여 반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90년 7월 10일 한국에 발효된 이 국제조약은 93년 12월 현재 126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는 것은 원진레이온 비극을 중국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와 자본가들이 돈 몇푼에 눈이 멀어 원진레이온 기계의 유독성을 애써 눈감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원진비대위는 "원진레이온 부지에 원진레이온 기계를 보존하는 노동박물관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경총 임금협의 철회 요구 전해투 '노총폭력 사과'

'전국 구속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의 노·경총 합의, 지난 14일 노총을 점거한 전해투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등의 예를 들며 "한국 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조직이 아님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해투는 성명에서 한국 노총에 △노·경총 임금협의 철회 △전해투 노동자에 대한 폭력진압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에 대해 △임금억제선 설정 취소 △전해투 노동자에 대한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의 폭력행위 중단 △구속된 부상자에 대한 치료 보장과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익도, 원진비대위)는 원진레이온 기계의 중국수출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진비대위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공해발생 기계인 원진레이온 설비를 중국에 수출하

국제인권소식

미국 인권단체 반아파트헤이트 운동에서 버마 인권상황 개선 위한 활동 본격화

남아공의 아파트헤이트 철폐에 주력하던 많은 미국의 인권활동가들이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버마(미얀마)를 대상으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이러한 전환은 남아공에서 흑인주도 정부수립으로 인종차별제도가 '공식적'으로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버마와 무역활동을 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 입법 및 주주회의에서의 결의안 제출 등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군사정부가 외국 기업이 버마에 투자하는 자본금을 억압적 정권을 유지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가 의도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25일 캘리포니아에 근거한 유니칼(Unocal) 석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버마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결의안에 처음으로 14.1%의 주주가 찬성표를 던졌다. 과거의 관행에 따르면 사회문제와 관련된 결의안은 보통 약 2-7%의 지지밖에 받지만을 획득했었기에 이번의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니칼 이외에도 석유탐사회사인 텍사코(Texaco), 펄스콜라 등 많은 미국기업들이 인권단체와 정부로부

터 비판을 받고 있다. 레비 스트라우스(Levi Strauss)회사는 지난 1992년 "버마 군사정부의 잔혹한 인권탄압을 지원하지 않고서는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철수하였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도 버마에 매우 비판적이어서 최근 경제제재 조처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중국과 싱가포르가 버마의 인권현실과 관계없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 버마 정부가 쉽게 타격을 받지 못하리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FEER, 05/12/1994)

아시아워치, 중국인권보고서 발표 MFN 논의하는 미 의회에 제출

미국에 기반한 아시아 지역 인권감시기구인 Human Rights Watch/Asia (이전에는 Asia Watch)가 5월 4일 46쪽에 달하는 중국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1994년 1월 이후의 인권타당 사례를 나열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46쪽의 보고서는 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에서 입수가능).

이번 보고서는 6월 초 중국의 최대국(MFN) 대우의 연장에 대한 심의

를 하는하는 미국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해 2월 위 단체는 중국양심수권람(Detained in China and Tibet: A Directory of Political and Religious Prisoners)을 발행하였다. 650쪽에 달하는 이 방대한 편람은 1993년, 1989년의 천안문 사태 이후 인권 탄압이 가장 심했던 해라고 지적하였다.

19일 고 김광삼씨 49재

지난 4월 1일 '중경동종양'으로 음성꽃동네에서 숨진 출소장기수 고 김광삼씨의 49재가 19일 동료장기수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꽃동네 묘역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38년간 복역하다 지난 91년 출소. 꽃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출소장기수 유한옥(84)씨를 면회하였다.

'보육은 남여 공동의 문제이다'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아동을 탁아소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회장 최현숙, 지탁연)와 일본의 '유유아발달연구소'(소장 스즈키 쇼조) 등의 공동주최로 19일 종로성당에서 열린 '한, 일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심포지움에서 스즈키 소장은 "광범위한 탁아소의 설치, 운영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즈키 소장은 "한국기자가 항상 '왜 남자가 보육운동을 하게 되었느냐'고 묻는 데 그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보육운동은 여성이나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호리 마사즈구 '유유아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일본의 대기업 본위의 경제성장 정책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좋은 환경' 대신 '값싼 보육정책'을 주었다고 전제하며 일본 보육운동의 과제로 △강애아동등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개방할 보육소의 확대 △연장, 야간 보육등 다양한 보육요구에 대한 대응 △보육료의 대폭삭감등을 제시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희연 지탁연 부회장은 한국의 보육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두가지 축으로 △'수해자 부담원칙'을 '공동부담'으로 바꾸는 등의 공공성 강화 △올바른 보육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움직임과 '공동육아론'등 보육관의 확립을 위한 보육담당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안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사회 각계 대표 기자회견

일시 : 5월 20일(금) 오전 9시
장소 : 여의도 백화점 6층 민주당사내 전해투 농성장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촉구 병무청 방문

일시 : 5월 20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병무청 정문(용산구 후암동)

□열린가족, 이야기 한마당

일시 : 5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예음홀 3층(광화문)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원진레이온 노동자 재취업과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완전쟁취 및 어용노총, 경찰 폭력만행 규탄 결의대회

일시 : 5월 21일(토) 오후 2시
장소 : 종묘공원
주최 : 원진비대위, 전해투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삼청교육 진상규명 전국 투쟁 부산시위원회'(위원장 강석도)회원 70여명은 19일 부산진역광장에서 "삼청교육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삼청교육은 80년 등장한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실시한 비열한 수단으로 4백50여명이 이 교육으로 죽어갔고 2천8백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최재효(54)씨가 국가로부터 8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것을 선행로 6월부터는 피

해자 전원이 2차, 3차 집단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89년 국회국정감사에서 결정판대로 관련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6일 대구고법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최재효씨에 대해 "과거 국가 최고책임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절차를 위해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 구상권 차원에서의 책임을 지을 수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삼청교육대, 광주항쟁 등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을 가리는데 중대한 판결

을 내린 바 있다.

부산 불교사회학교 개설 5월31일-6월28일

인권침해-환경공해-생명경시·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들의 현황과 원인분석,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불교 사회학교'가 '부산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정각) 주최로 부산에서 열린다. 오는 31일(화)부터 6월 28일까지 한달동안 열리는 부산불교사회학교는 △5/31, 불교와 인권운동(진관스님) △6/1. 인권과 법률문제(조우래 법률상담소장)등 총 10강좌가 개설된다.

매주 2회(화·수), 오후 7:30-9:30. 문의 466-1680

윤상원상 수상자 정광훈씨·극단 토박이

'윤상원상위원회'(위원장 이광우)는 제4회 "윤상원상" 수상자로 정광훈씨(57.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 전남연합 상임의장, 현재

청주교도소 수감중)와 극단 '토박이'(대표 박효선)를 선정했다.

사회운동부문 개인상을 수상하게 된 정광훈씨는 전남도연맹의장 등을 역임한 농민운동가로 지난 92년 이래 수감생활중이며, 극단 '토박이'는 오월실리극 '모란꽃'을 통해 광주항쟁의 역사적 현재성을 깊이있게 조명, 사회운동부문 단체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4시 YMCA 2층 백제실에서 열린다.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요구

전해투 병무청도 방문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20일 여의도 농성장에서 전해투 지원대책위 집행위원장 홍근수 목사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과거 군사통치의 산물인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의 군문제를 해결하고 원직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또 전해투 강중철 집행위원장등 30여명은 병무청을 방문, 윤규혁 특례과장등을 만나 과거청산 차원에서 병역특례해고노동자들의 군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 행사 안내 ◆

□ 열린가족, 이야기 한마당

·일시 : 5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예음홀 3층(광화문)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 원진레이온 노동자 재취업과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완전정착 및 어용노동, 경찰 폭력만행 규탄 결의대회
·일시 : 5월 21일(토) 오후 2시 / ·장소 : 중묘공원
·주최 : 원진비대위, 전해투

□ 김상진 추모사업회 정기총회

·일시 : 5월 22일(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대 수원농대 교정

□ 김귀정열사 추모사업회 창립대회(☎ 760-1381)

·일시 : 5월 22일(일) 오전 11시
·장소 : 성균관대학교 심산관

□ 김귀정열사 묘소참배

·일시 : 5월 22일(일) 오후 1시 성균관대학교 출발
·장소 : 마석 모란공원(☎ 760-1381)

단체탐방 21 /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장면 ① 100만이 넘는 국민이 제출한 고발장이 천천히 비워진다.

·고발인-성명 : 오 민주
·피고발인-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 노태우(당시 수경사령관), 정호영(당시 특전사령관)의 32인

·죄명-내란,내란 목적 살인 등
·적용법조-형법 제 87조, 제 88조 등
·고발사실-상기 피고발인들은 80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정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광주시민 고선희 외 다수를 학살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광주에 투입되어 학살을 자행한 최고 책임자에서부터 대대장급까지를 고발하는 바이므로, 검찰은 이러한 고발인 및 우리국민의 절실한 요청 등을 충분히 참작함과 동시에 이 고발에 대한 수사가 역사상의 중대한 책무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의무임을 깨달아 공소시효가 1년 남짓밖에 남지않은 이 사건을 즉시 수사에 착수해 총력을 다해 그 진상을 밝히고 형사상 소추를 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장면 ② 9시 뉴스시간, 광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이 발표된다. 서울역과 시내 곳곳의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며 환호성을 지른다.

장면 ③ 어느 고등학교 국사시간
·선생님 : 교과서 200쪽을 펴세요. 오늘 배울 것은 5.18 민주항쟁입니다. 다들 예습해 왔을 테니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학생 1 : 선생님, 광주항쟁이 1980년에 일어났는데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를 1년 남긴 94년, 그러니까 14년만에야 이루어진 까닭이 무엇이지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는데 왜 14년씩이나 내버려 두거예요?

·선생님 :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5.18민주항쟁의 책임당사자가 2번씩이나 대통령을 해먹었어요. 그러니 그런 정부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었고 그런 정부의 본질과 맞서 싸우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었죠. 그러나 93년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부의 자세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진상규명과 관련한 미흡한 부분은 훗날 역사에 맡겨야 하고 오늘 또다시 한풀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에 분개한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5.18 민주항쟁을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로!

국민고발운동을 전개하고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뚤어진 우리 역사를 바로잡자는 각오로 나섰다. 한편 광주에서는 20일 '광주전남 연합 고발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6천명의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국민고발운동'은 1백만명 고발운동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 진상조사소위(김영진의원 외)는 진상보고서를 내년 5월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중이다. 광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만족할 만한 자료로서 모으고 정리하는 사업이 필요하고 증인센터설치, 미국 측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항쟁정신계승소위(안병욱교수 외)는 5.18민주항쟁을 3·1운동, 4·19 혁명과 같이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로 자리잡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달 14일에 '90년대 한국사회와 광주민주항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학술대회개최와 기념일제정, 교과서 수록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주항쟁 계승위원회'가 걸어갈 길은 급하다. 소위, 공소시효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나치전범에 대한 처벌이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듯이 '불처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또 하나, 수많은 '공대위'처럼 모두가 책임지고 누구도 책임이 없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사업을 계속할 것을 5월의 하늘아래서 서로서로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며 다짐해본다.

·학생 2 : 반민특위에서부터 배배꼬인 우리 역사를 바로잡은 정말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대학입학 논술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겠지요?

이상은 가상시나리오다. 그러나 가상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 가상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광주항쟁 계승위원회'는 작년 5월 김영삼의 '역사에 맡기자'식의 회피발언이후 결성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6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명동성당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 참여자는 광주에서 상경한 사람들이었다. 이에 전국연합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찾아가 약속을 하였다. "5.18 민주항쟁을 더이상 광주만의 문제로 놔두지 않겠습니다. 전국민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사업을 벌일것을 약속드립니다."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고자 각 단체간의 실무급 모임이 이루어졌고 어느 단체도 참여하는데 있어 단서를 달지 않았다.

목은 빛을 갠 심정으로 누구나 참여하였고 수입개방저지투쟁으로 인해 결성이 미뤄지다가 94년 3월 25일 결성식을 갖게 되었다. 결성인사는 3백50명인데 원래 3백49명이었다가 12·12 쿠데타의 피해자로써 당시 중령이었던 김광혜씨가 참여함으로써 3백50명이 되었다. 김광혜씨는 12·12쿠데타 당사자를 고소한 피해자 모임의 총무간사를 맡고 있다고 한다.

'광주항쟁 계승위원회'의 조직은 고문(강석주 스님 외), 공동대표(강신석 목사의), 국민위원(강대성 변호사 외),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황인성)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사업은 세 개의 소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법률대책소위(박인제 변호사 외)가 '국민고발운동'을 전개하면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3일 1차로 294명이 고발장을 접수시켰고 현재까지 1만

여명의 고발장이 모여있다. 25일에 2차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킬 것이다. 한편 광주에서는 20일 '광주전남 연합 고발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6천명의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국민고발운동'은 1백만명 고발운동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 진상조사소위(김영진의원 외)는 진상보고서를 내년 5월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중이다. 광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만족할 만한 자료로서 모으고 정리하는 사업이 필요하고 증인센터설치, 미국 측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항쟁정신계승소위(안병욱교수 외)는 5.18민주항쟁을 3·1운동, 4·19 혁명과 같이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로 자리잡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달 14일에 '90년대 한국사회와 광주민주항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학술대회개최와 기념일제정, 교과서 수록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주항쟁 계승위원회'가 걸어갈 길은 급하다. 소위, 공소시효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나치전범에 대한 처벌이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듯이 '불처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또 하나, 수많은 '공대위'처럼 모두가 책임지고 누구도 책임이 없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사업을 계속할 것을 5월의 하늘아래서 서로서로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며 다짐해본다.

·학생 1 : 선생님, 광주항쟁이 1980년에 일어났는데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를 1년 남긴 94년, 그러니까 14년만에야 이루어진 까닭이 무엇이지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는데 왜 14년씩이나 내버려 두거예요?

·선생님 :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5.18민주항쟁의 책임당사자가 2번씩이나 대통령을 해먹었어요. 그러니 그런 정부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었고 그런 정부의 본질과 맞서 싸우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었죠. 그러나 93년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부의 자세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진상규명과 관련한 미흡한 부분은 훗날 역사에 맡겨야 하고 오늘 또다시 한풀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에 분개한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동티모르 관련 민간단체회의 무산위기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수단의 압력

필리핀, 동티모르 관련 민간회의에 외국인 참가거부

동티모르 문제를 주제로 이달 말부터 마닐라에서 열릴 비정부조직의 국제회의에 대하여 필리핀의 라모스 대통령은 20일 외국인의 참가를 거부하는 방침을 명백히 했다. 언론관계자동을 제의하는 외국인인 참석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의지에 의하면 필리핀 정부는 또한 회의에 참석하려던 인도네시아 반정부조직 대표등 8인의 입국도 거부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국제회의 개최에 강하게 반발, 인도네시아가 중재역을 맡아온 필리핀정부와 필리핀

내 이슬람교도 반정부조직과의 협상을 연기하는 등 여러가지 압력을 가해왔다. 회의의 주최자나 필리핀의회의 일부에서는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나라의 위엄을 손상시켰다"고 비난하고 있다.

라모스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하여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 특별법률고문은 "필리핀 헌법은 자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필리핀정부는 이제까지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

시아의 주권은 인정하나 헌법상 민간회의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망고라프스 전의상을 특사로 파견하는 등 국면 타개를 모색해왔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교도 반정부조직간의 교섭을 유보하는 것 이외에도 26일부터 필리핀 남부 다라오시에서 열릴 '동ASEAN 비즈니스회의'에 불참을 통보하였고, 또한 세레베스 해에서의 필리핀 어선 단속을 갑자기 시작했다.

동티모르 관련 비정부조직 국제회의는 UN 사무총장 갈리의 '동티모르 교전 당사자들을 모아 협상하게

하기 위한 최종보고서'의 UN총회 상정을 앞두고 동티모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민간단체들이 5월 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국제회의는 91년 4월에 세계 11개국의 동티모르 관련 단체들이 결성한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East Timor(국제동티모르연맹)의 세계회의, 전세계 300여명의 변호사들이 가입해 있는 International Platform of Jurists for East Timor(IP-JET;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법률가회의)의 세계대회, 그리고 이 법률가들과 동티모르 지원단체,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Independence of East Timor and Indonesian Democratization(동티모르 독립과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를 위한 국제회의) 등 3가지에 이르고 연속해서 열릴 예정이었다.

부부관계의 중심축은 여전히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여성민우회 가족실태조사 결과

가족의 해를 맞아 가족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자리 '열린 가족 이야기 한마당'이 지난 21일 오후3시 예음홀에서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이경숙, 민우회) 주최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민우회에서 아내·남편·자녀 7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족실태조사 분석결과가 보고되었다.

분석결과 부부관계는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세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 공 판 안 내 ◆

□5월 25일(화)

·조용환, 국가보안법, 11시 30분, 317호, 2회
·이성우, 국가보안법, 10시, 425호, 1회

□5월 26일(수)

·이백규, 국가보안법, 11시, 425호, 1회
·최향숙, 국가보안법, 11시, 425호, 1회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21호, 3회
·최영희, 국가보안법, 2시, 318호, 1회
·이태성, 국가보안법, 3시, 318호, 1회
·배진성, 업무방해, 10시, 317호, 10회
·한호선, 특가법, 2시, 425호, 1회

□5월 27일(목)

·김태홍의 2, 국가보안법, 2시, 418호, 속행

□5월 28일(금)

·김영하, 국가보안법, 2시, 423호, 1회
·조기현의 1, 특가방법, 10시, 423호, 선교

전해투·원진비대위 공동투쟁

한국노총 폭력사과, 원진노동자 재취업 요구

「전국 구속·구속·수배 해고노동자 원진복지투쟁위」(위원장 조준호)와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도)가 공동으로 노동자 재취업과 해고노동자 원진복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 21일 종로공원에서 노동자, 학생 등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재취업과 산재병원의 보장 △한국노총의 5·14 폭력에 대한 사과와 보상등을 요구했다.

집회후 참석자들은 명동을 거쳐 한국노총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원진기계 약64억원에 매도 원진비대위, 수입철회 촉구

라전모방(대표 남재우)은 산업은행 공개입찰을 통해 54억원에 인수한 원진레이온의 생산설비 일체를 약 64억원에 매도하기로 원매자인 중국 단둥화성공사와 합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편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도)는 23일 오후 중국대사관을 방문, "제2의 원진레이온 비극이 지구촌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정부가 원진레이온 기계수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 1면에서 계속)

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사노동의 공동부담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은 아버지의 늦은 귀가와 어머니가 집에 없는 시간이 많은 것을 불만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론마당에서는 △자녀교육문제가 부부관계의 전부인 현상이 바람직한가 △가정내 갈등원인과 '열린 가정, 상호 이해 협조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안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한편 민우회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가족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 '여성문제종합상담소'를 준비중이며 올 11월 문을 열 예정이라고 명진숙(교육조직부)간사는 전했다.

김귀정 추모사업회 발족 평전발간·장학기금 마련

지난 91년 5월 시위도중 사망한 김귀정(당시 25세)씨를 기리기 위한 「민주주의의 꽃 김귀정 추모사업회」(김귀정 추모사업회) 창립대회가 22일 오전 11시 계훈재, 강민조(유가협 회장)씨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심산관에서 열렸다.

창립대회에서 장기표, 우대영(성대민주운동회회장), 김상태(성대 불문과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김귀정 장학기금 마련과 김귀정평전 발간사업 등을 과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식이 끝난뒤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된 김귀정씨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귀정 추모사업회는 오는 25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3주기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전해투, 탄원서 제출

'정치적 희생 치유, 생존권보장'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진복지투쟁위」(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김영삼 대통령이 23일 30대그를 경제인과 가진 간담회에 '대통령과 경제인

들께 드리는 탄원서'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부산되자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 탄원서를 접수하였다.

탄원서에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쫓겨난 해고노동자들의 정치적 회생에 대한 처유와 국민화합 그리고 생존권보장 차원에서 해고노동자를 하루속히 원상회복시키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 조계사 폭력 고발인 1천9백여명에 질문서 발송

지난 4월 29일 조계사 폭력사태에 대해 최형우 내무부장관등을 공권력 남용과 불법감금등의 혐의로 1천9백38명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3부 황인정 검사는 21일 고발인 전원에게 고발인 질문서를 발송했다.

'법률구조제도 개선등으로 당직변호사 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수사단계에서 벌어지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 해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작한 당직변호사 제도가 1년을 맞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활동보고에서 93년 5월 1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 10개월간 변호사 접견건수는 총 1천98건으로 1일 평균 3-4건

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선임건수는 1백83건(17%)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직변호사로 등록된 회원수는 3백47명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체 회원수(3월31일 현재 1,781명)의 20%에 이른다

박찬운(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간사)변호사는 16일 열린 '당직변호사제도 시행 1주년 토론회'에서 "평균 5-6시간내 신속한 접견이 이뤄졌고, 접견건수의 80%가 수사초기단계에 진행되었다"며 지난 1년동안 당직변호사제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작초기 단계인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 박변호사는 "당직변호사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심갖는 변호사들의 수 증가를 우선 꼽았다. 또한 이 제도가 형사사법개혁의 출발점이 해야 하며 활성화를 위해 "국선변호사제도,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제도 개선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향후과제로 △변호인 접견실적치 실행법의 접견권 시간제한 폐지 △수사기관 작성의 서류열람권 보장 △피의자조사시 변호인 입회권 보장등을 들었다.

또 피의자측의 접견요청 없이도 변호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직변호사를 피의자에게 파견하는 '당직파견제도의 도입'과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변호기술 개발을 위해 법학자들과의 연대 속에 형사변호연구회 설치,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변호체계 수립등이 해결과제로 지적되었다.

새누리신문 창간4주년 기념행사

변화하는 세계와 민중운동, 그리고 그 국제적 연대

·일시 : 5월 24일(화) 오전 10시(☎ 393-1872-4)
·장소 : 엠베서더 호텔 2층 서극
·강사 : 에드 데라 포레(전 필리핀 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이번엔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황석영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 경승 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책자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볼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대법원의 기존판결을 상기하며 국가기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국가기밀에 관한 범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황씨는 90년 9월 북한 서재골 초대소에서 ‘남한에는 1천여개의 핵이 배치되어 있다’는 발언이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지난 2월 2심에서는 “외신과 국내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밝힌 것이고 핵전문가가 아닌 황씨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라며 국가기밀로서의 사실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박원순변호사는 “국가기밀을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위에 두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단체인행물 ◆

□당직변호사 제도 자료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 : 당직변호사제도의 연혁(박성호)/당직변호사제도 운영상황개관(박찬운)/당직변호 성공사례/당직변호사제도의 운용상황과 과제(박찬운) 등

□한·일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주요내용 : 일본의 보육현황과 과제(호리 마사츠구)/한국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정희연) 등

□함께가는 여성(94년 5월, 통권 81호)-한국여성민우회

·주요내용 : 환경운동과 실천을 통한 여성단체의 지역사회운동(김선옥)/당신의 남편과 자녀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가족 설문조사 결과보고 등

5.18 진상규명 위한 국제연대모임 가동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과 제3세계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국제연대 움직임이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 연대모임’(공동의장 윤장현외 3명, 시민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연은 지난 17일 국제심포지움 ‘해외에서 본 5.18 광주민중항쟁’을 개최한 데 이어 18일 오후 담양 소재원에서 국제연대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독일의 하이데(Holger Heide, 브레멘대학교수)씨와 태국의 아카라(Somgsansruang Achara, 정의평화위원회 간사)씨, 일본의 이토우 나리히코(중양대 교수)씨, 필리핀의 퓨엔테스(Daisy Fuentes, 국회의원)씨 등을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호정보교환을 위해 국제연락망을 구성하기로 하고, 광주 진상규명을 위해 광주관련자료를 발굴, 교환하며 광주항쟁 1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또한 제3세계국간의 국제연대를 약속했다.

고 김의기·김세진씨 추모 고난 5월 월례기도회

고 김의기·김세진씨 추모 고난 5월 월례기도회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5월 월례기도회’가 27일 오후 7시 감리교신학대학 윌키기념관에서 ‘김의기·김세진열사 추모예배’로 열린다. 특히 고 김의기씨는 80년 5월광주민중항쟁을 직접 목격한뒤 그해 5월 30일 종로5가 기독교회관 6층에서 ‘동포들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할복자살, 최초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고 김세진씨는 86년 4월 28일 신림4거리에서 전방입소 거부등을 외치며 분신자살했다.

『인권선교 20년사』 발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 한국협 인권위)는 창립20주년을 맞아 『교회협 인권선교 2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국협의 인권선교와 관련된 증언, 기념할 만한 사진등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마감은 6월 15일.

문의:764-0203, 744-3717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출소장기수는 괴롭다

청량리경찰서 관광여행에 회합금지 ‘조치서’

지난 5월 13일 청량리경찰서(서장 안영무)는 출소장기수로서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이세균씨(73세; 계기동 민중탕제원 거주)에게 다른 “피보안관찰자와의 회합을 금지”하는 ‘조치서’를 전달했다.

5월 12일자로 되어 있는 이 ‘조치서’에는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로 1)이세균씨가 경찰서의 경고를 무시하고 민중탕제원에서 피보안관찰자 임방규씨 이두균씨 등과 수시로 회합하고 있다는 점, 2)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다른 8명의 피보안관찰자와 제주도 여행을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민중탕제원이 91년 11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출

소장기수들을 위하여 교계에서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되어, 이세균, 임방규, 이두균씨가 3년동안이나 공동으로 영업을 하면서 생활을 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오랜 감옥살이 끝에 거처도 마땅치 않아 이곳에서 세사람이 협력하여 살아가는데 말끝마다 ‘회합’운운하면서 괴롭히는 것은 심한 처사”라는 것이 이세균씨의 말이다.

또한 이번 ‘조치서’ 발부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제주도 여행문제로도 경찰의 억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문제의 제주도 여행은 감리교인들의 양심수 후원모임인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이 해마다 벌여온 출소장기수

위로행사의 하나로서 기획되었던 것. ‘고난 모임’ 소속 송병구목사 인솔하에 실무자 4명과 출소장기수 9명이 2박 3일로 여행을 한 것이 “수시 회합”으로 둔갑해버렸다는 것이다. 항공권을 예매한 시점에서부터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까지 집요하게 계속된 감리교측과 출

소장기수들에 대한 경찰의 지나친 간섭에 몇몇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비인간적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89년 제정 이래 문제가 되어왔던 보안관찰법의 반인권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보안관찰법은 유신·5공시절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국내외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14년만에 폐지된 사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출소장기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5,6,9조와 형법 및 균형법의 일부조항(“보안관찰 해당범죄”)에 의해 과거에 처벌 받은 사람들 중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는 법무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 심사위원회의 의결(따라서 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을 거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단 2년으로 되어 있는 처분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은 없는 셈이다. 이 처분을 면제 받으려면 1)준법정신의 확립, 2)일정한 주거와 생업, 3)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준법정신의 확립”을 측정하는 과학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상전향 여부(보안관찰법 시행규칙 19조 2호)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일단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피관찰자에게는 신고의 의무(법 18조 2,3,4항)와 조치에 따른 의무(법 19조 2항)가 생긴다. 전자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후자를 위반할 때는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신고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3개월마다 1)3개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3개월간에 한 여행에 관한 사항, 4)관할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이다. 또한 그 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의 주거 이탈할 경우 역시 신고해야 한다.

‘조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1)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 금지, 2)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 금지, 3)특정 장소에의 출석 요구등이다. 이세균씨는 제주도 여행은 이 1)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것으로서 계속 ‘회합’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3000명의 보안관찰 대상자와 약 700명의 피보안관찰자가 있다고 한다.

별지 제58호 서식

조치서

이세균귀하

귀하는 93년 4월 22일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입니다. 귀하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보안관찰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1. 귀하는 보안관찰법에 의한 피보안관찰자로서 동법 제19조 2항 1호에 의거 보안관찰 해당범죄와의 회합, 통신이 금지되어 있으나
2. 91. 11. 9 이후 동대문구 계기2동 807번지 소재 민중탕제원에서 피보안관찰자 임방규, 이두균등과 수시 회합하고 있으며
3. 93. 7. 15. 15:00 이러한 사실이 범위반임을 1차 경고한 바 있으나,
4. 귀하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94. 5. 10-5. 12간 피보안관찰자 이경구등 8명과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수시 회합을 한 사실이 있어 재차 경고하면서 피보안관찰자와의 회합을 금지 조치하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5. 향후 본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없도록 할 것.

94년 5월 12일

서울 청량리 경찰서장 총경 안영무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인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 6월 7일 한국방문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 문제등 토론계기

6월 7일로 다가온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 한국방문을 앞두고, '5월 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 추진위원회'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5월 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박형규·홍성우·탄성·김승훈)는 관심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주관단체, 후원단체, 초청인단등을 구성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77년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아래 의문의 실종으로 자식을 잃은 14명의 어머니들이 모여 시작한 5월 광장 어머니회는 현재 19개 지부 2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어머니 오로라 몰리나 데 프라카롤리(Aurora Molina De Fraccaroli)등 2명과 인권 변호사인 엑토르 놀리(Hector Noli)씨가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이윤경(28, 5월 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 실무간사)씨는 "광주학살책임자 처벌이나 과거진상규명등

무엇이나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는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경험을 가졌다. 아르헨티나의 경험들 통해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문제를 재조명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문제를 촉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초청인단의 참여 등 광범위한 대중참여를 통해 이러한 의의가 공유되길 희망했다.

내달 7일부터 17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 방문단은 11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 합동추모제' 참가, 광주 망월동묘역 참배등을 비롯해 두나라의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Impunity)문제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등을 계획하고 있다.

6월 7일 5월 광장 어머니회 방한 환영 및 기자회견, 5월 광장 어머니회 환영 모임 / 8일: '평화를 위해

싸워온 5월 광장 어머니회 20년' 초청강연회 및 비디오 상영·사진 전시회 / 9일: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민가협 목요일모임 / 10일: '과거

전교조 창립 5돌 행사 29일 1시 동국대 '학교개혁·정부재정 투자확대' 제기

89년 참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창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5돌을 맞아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29일 오후 1시 동국대에서 갖는다.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개혁'이고, 학교개혁은 교육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투자는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개혁을 위한 과제로 △과밀학급해소등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과정 재편·교육내용 개선 △'교직원보수법' 제정등을 통한 교직원 처우개선 △'교직원회의'의 법적 기구화 등 학교운영의 민주화 △교직원단체의 활성화등을 꼽았다.

'전교조 결성5주년 기념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 1부 기념공연은 꽃다지, 전교조 지부연합 노래, 노래를 찾는 사람들

청산,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 - 아르헨티나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전략'에 관한 워크샵 / 11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 합동추모제 참여 / 12-14일 광주방문 / 15일: 한국-아르헨티나 공동 심포지움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 문제-두나라의 경험과 과제" / 16일: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참배, 문화한마당 "희망과 연대의 시작: 아르헨티나 어머니들의 밤"

등의 문화공연으로 진행된다. 2부 본대회를 마친뒤, 동국대에서 대학로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대학로에서 마무리집회를 가진다.

여성의원들의 지방자치 3년 활동 평가토론회

27일 2시30분 기독교연합회관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은 27일 오후 2시30분 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여성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갖는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평가토론회는 지방의회의원 4천3백4명중 0.9%에 불과한 40명의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듣는 자리이다.

이영자(성심여대 사회학과)교수가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여성의원의 역할'로 종합발제를 하고, 홍미영(인천시 북구) 의원등이 참석한다(문의:274-2883).

알림

'인권운동사랑방'의 팩스가 성능이 저하되어 <인권하루소식> 5월 21일(토), 24(화), 25일(수)치가 해독이 어렵게 전송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즉시 팩스를 고쳐 오늘부터는 깨끗한 상태의 <인권하루소식>을 전송하겠습니다.

두밀분교 폐교반대 주민들 '두밀분교 후원회원 모집'

아동들을 자체교육하며 두밀리분교 폐교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추진위원회' (폐교철회 추진위)가 '두밀분교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두밀리분교 폐교반대활동을 마을의 공동체정도로 충당해왔던 폐교철회 추진위는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두밀분교 후원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 16일부터 글씨가 찍힌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

두밀리의 한 주민은 "일방적으로 후원을 바라는 모집방식이 아니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판매를 통한 수익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아동용과 성인용

각각 5백벌씩 제작하여 가평군민들의 호응을 얻어 예상외로 많이 팔렸다"고 밝혔다. 폐교철회 추진위는 수익금을 폐교반대 활동과 학생들의 책, 학습 도구 구입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동티모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거부 방침에도 예정대로 개최

동티모르 관련 국제회의가 필리핀 정부의 외국인 참가거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법률가 회의(International Platform of Jurists for East Timor, IPJET) 사무총장 페드로 핀토 레메(Pedro Pinto Leite)씨는 필리핀 정부의 외국인 참가거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회의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또 필리핀 공항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동티모르 관련 국제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29일-30일: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법률가 회의 (International Platform of Jurists for East Timor, IPJET) 세계회의

5월 31일-6월 4일: 동티모르 독립과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를 위한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Independence of East Timor and Indonesian Democratization)

6월 5일-6일: 국제동티모르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East Timor) 세계대회

신장호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90년 5월 광주항쟁 제10주기에 광주교대 단종경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하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정점은 그 당시 경찰의 '완전봉쇄에 가까운 조치'와 신씨 사망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공판은 공권력 시행의 한계등을 공판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원천봉쇄'의 국민기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6월 22일 오전 10시, 성남지원 제1호 법정

신임 한교협 인권위원장에 김상근목사

김상근 목사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교협 인권위) 제9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19일 열린 한교협 인권위 인권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전임위원장인 김재열신부는 계속 인권위원으로 활동한다.

신임 김위원장은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원장이고, '5·18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맡아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통일위원장,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지원대책위」 집행위원장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55세, 한신대졸.

'희망새' 석방 위한 서명·모금 사업 진행

예술창작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래극단 '희망새' 구속자 석방을 위한 엽서서명작업과 구속자 석방기금 모금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5월 25일 현재 1만여명이 서명에 참가했고, 1백여명이 후원자로 가입했다. 후원회원은 매달 1만원을 내면된다(국민은행 104-21-0896-531 : 황성형, 우체국 600767-0043-547 : 이윤정).

현재 희망새 단원중 8명이 구속됐으며 서울구치소에 김민하씨의 4명이, 부산구치소에 허명순씨의 2명이 있다. 김민하씨의 1심 두번째 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리며, 허명순씨의 1심 첫 공판은 6월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문의:051-819-2127).

행사안내

□민가협 제36차 목요일회

·주 제 :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고문피해 사례
·날 자 : 5월 26일(목)
·장 소 : 탑골공원 앞
·보고자 : 백태용씨 어머니, 손병선씨 동생, 손성표씨 누나
*시간은 오후 5시(오후 2시가 아닙니다)

□김의기·김세진열사 추모예배-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5월 월례기도회(☎ 393-4662)

·일시 : 5월 26일(목) 오후 7시(<인권하루소식> 5월 25일자 27일은 오보임)
·장소 : 감리교 신학대학 월취기념관
·주최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등

□전 필리핀 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 에드 데라 도레 신부와의 간담회(☎ 747-4364, 5)

·일시 : 5월 26일(목) 오후 7시
·장소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회의실

□'장애인 인권, 어디까지' 3차 강좌-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521-5364)

·일시 : 5월 27일(금) 오후 2시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주제발표 : 성폭력과 여성(신혜수)-장애여성의 인권이 침해되는 특수한 상황과 이유, 장애여성의 권익회복을 위한 국제연대 방법의 구체적인 예등/지역사회의 여성의 대응과정과 성과-청주성화원의 사례발표(남정현)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두밀분교 폐교는 농촌해체 가속화의 상징

가평군 행정관서 폐교철회운동에 부당한 압력 행사

밤중에 전화·이장에 사퇴압력

지난 2월 28일 폐교조치된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가 있는 두밀리 주민들이 폐교철회를 요구하며 마을회관에서 25명의 학생들에게 자체학습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 읍사무소, 가평군 교육청 등에서 두밀리 주민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평읍사무소 총무계장은 두밀리 이장 신홍균씨에게 "두밀리 동향보고를 왜 안하느냐. 사퇴하라"는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졌고 이 소식을 들은 두밀리 새마을지도자 김세경씨 등을 비롯

한 개발위원, 반장 등이 이에 분개, 모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두밀분교 폐교철회 추진위원회」(대표 신홍균)가 서울고법에 제기한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후 가평군 교육청(교육장 조동현)과 상색국민학교 교사들은 주민들에게 주로 밤중에 전화를 걸어 가처분기각 사실을 들어 폐교철회요구를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다. 또 지난 25일 처음으로 학생 4명이 학교에 등교했으나 학교교사가 가방을 사주고 읍내에 데리고 가 점심을 사준

사실이 밝혀지자 두밀리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물질로 유혹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25명중 4명이 처음으로 학교에 나간 날 산골벽지에 사는 아이에게 읍내에 데리고 나가 점심을 사주는 등의 행동은 선뜻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밀분교 폐교철회 추진위」는 최근의 이 같은 압력과 회유가 잇달아 발생하자 가평군 교육청, 가평군청, 가평읍사무소 등에서 오는 30일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어 두밀리 주민들의 뜻을 표현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수에 비해 과중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두밀분교를 폐교 처분했지만 이는 명백히 소외지역의 교육을 진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두밀분교는 이 법에 의해 의무교육대상학교로 지정되어 교사수, 학교시설 등 여러가지 교육에 관련해서 특별히 지원받아야 하는 학교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학교 폐교조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반하면서 행정조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 UR타결등으로 위기에 몰린 농촌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의 농

촌정책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밀분교 폐교를 둘러싼 움직임은 정부의 농촌정책, 교육정책 등이 뒤섞인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목적수행저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김삼석·김은주씨의 항소심 2차공판이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한동련의 성격,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다.

한편 정치인, 학자 등 147명은 이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씨남매의 간첩활동의 증거는 불법감금상태에서의 자백과 한동련 관계자들을 만나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목적수행저등을 무죄로 판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삼석·김은주씨는 회합통신, 국가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다. 결심공판은 6월 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

안기부 고문사례 증언

26일, 민가협 목요일집회

제36차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26일 오후5시 탑골공원앞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고문피해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백태웅씨의 어머니 유정옥씨등이 나와 약물고문, 고문과 실신 그리고 의사의 치료가 이어지는 안기부의 고문을 증언했다.

국제인권소식

독일,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모든 공공시설이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배려가 유별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에서 최근 헌법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기본법(헌법)개정 움직임을 일고 있다.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지난 20일이 조항을 기본법에 삽입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인 사민당의 루돌프 사르팡 총재도 동의를 표시, 기본법의 개정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기본법 제3조에는 ①법앞에 만인을 평등하다 ②남녀는 권리가 동등하다 ③아무도 성, 혈통,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지, 신앙, 종교적 혹은 정치적 권리로 차별받거나 특권을 누리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바로 여기에 '아무도 장애때문에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독립항목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기본법 개정은 오는 6월 30일 열리는 독일연방하원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중국·미국간의 인권공방중 밝혀진 대만의 인권침해

미국 콜로라도 주의 10세 소년 에디 터커는 지난 4월 비행기 장난감포장을 풀다가 대만의 한 재소자가 포장지안에 넣은 작은 메모편지를 발견하였다. 이 메모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은종은 친구여, 이 장난감은 대만의 감옥에서 만든 것이다.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대만을 조사하라. 고맙습니다."

이 편지는 중국이 감옥의 재소자들이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사건으로 중국과 미국의 인권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발생하여 대만정부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야생동물의 멸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 체재조치까지 언급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파장이 생각밖으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편지를 썼던 리우씨가 있는 타이중의 교도소장 타이씨는 "감옥의 시설로 약 40개의 공장이 있으며 각 공장마다 약 1백30명-1백80명의 재소자가 일하고 있다. 사기업과 맺은 약 70-80개의 계약에 따라 장난감, 조화(造花), 문방구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의 행형제도에 대해 정통한 소식통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매일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는 목표량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소자의 친척과 인권단체는 감옥 당국이 재소자의 자활이나 교화보다 돈을 버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타이중 교도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재소자는 동일업종 노동자 임금의 40%와 생산량에 따른 5%의 상여금을 받고 정부가 음식과 기타 비용으로 20%를 제외한 나머지 35%를 가져간다(FEER 5월 19일).

이집트, 이슬람근본주의자에 대타 93년 이후 경찰구금중 사망 16명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가 이집트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투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위한 변호를 주도적으로 해온 청년 변호사 마다니(32세)씨는 지난 4월 카이로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경 찰관에 의해 강제로 눈을 가린 채 실종되었다. 10일이 지난 후 마다니씨의 부인은 경찰로부터 시체를 가져가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약 2천명의 변호사가 지난 주 카이로의 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반정부 시위를 하였고 수백명이 모 의장례를 실시하였다. 전기쇼크 또는 머리부분에 대한 구타

로 죽었다고 추정되는 이번 고문살해사건에 대해 카이로 변호사협회의 의장인 아델-아지즈 무하메드씨는 "마다니씨가 죽었을 때 경찰의 손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찰에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은 너무 냉혹하다"라고 말하면서 분개하였다. 일부 변호사들은 정부가 전투적 이슬람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테러를 가해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징표라고 해석하고 있다.

불법화된 '이슬람형제애'의 회원이자 전 국회의원이인 대살-일안은 "경찰은 더 이상 법을 준수하지 않공 있다. 우리는 개인의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암흑의 시대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적 어조로 말하였다.

이집트 인권단체에 따르면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이집트에서는 경찰서 구금중 16명이 고문으로 사망했다.

사형선고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관계 논란

미국, 마약관련 기소자의 75%가 백인, 36명의 사형자중 흑인 28명

미국 의회에서는 인종정의법안(Racial Justice Act)이 상정되자 사형선고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네바다주의 오리인 하치(Orrin Hatch)의원은 "법안은 인종차별이나 정의가 아니라 사형제도의 폐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리노이주의 캐롤 모세레이-브라운(Carol Moseley-Braun)은 '88년 이래 마약방지 법령과 관련된 기소된 전체 피고인의 75%가 백인이었고 이 가운데 정부는 36건의 마약사범을 사형시켰는데 이 가운데 백인이 4명, 남미계가 4명 그리고 흑인이 28명이었다'라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위 법안의 필요성을 옹호하였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58대 41로 부결되었지만 아직 이 법안의 운명은 불투명하다. 하원에서는 2백19대 2백17로 법안을 통과시켰다(Time/5월 23일).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시정 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인권이사회 3자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씨에 첫 '통보' 허용 국제인권법 기준미달인 국내법규 개혁계기

인권이사회, 손종규씨 '통보' 허용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mmittee)는 지난 3월 18일 국내 최초로 유엔 인권침해구제 절차에 따라 제출한 '통보'(Communication)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은 제소자인 금호기업 전 노조위원장 손종규씨의 의뢰로 이번 사건을 맡아온 조용환 변호사에게 도착한 5월 10일자 공문을 통해 밝혀졌다.

손종규씨는 조변호사를 통해 지난 92년 7월 7일 '통보'(No. 518/1992)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손씨의 반대 의견을 검토한 후 약 2년이 다된 이번 5월 손씨의 통보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선택의정서' 19조에 따라 허용된다(admissible)고 결정

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당사국인 한국정부는 본 사안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하거나 진술하여야 하며 당사국으로서 취한 조치가 있으면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제출한 설명이나 진술은 사무총장에 의해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제소자는 다시 6주내에 이에 대해 하고싶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절차규칙 93조 3항).

한국에서 처음, 관심과 주목 이번 통보는, 한국정부가 91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B규약)'과 'B규약에 따른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처음 제출된 통보이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허용된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내 인권단체와 국제인권법 관계자의 특별한 주목과 관심을 불러 일으

킬 제소하였다.

그러나 인권이사회로부터 해명을 요청받은 정부는 93년 6월 9일 제출한 문서에서 국내의 법적 구제절차를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위 조항을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요청하지 않은 손씨는 국내의 모든 법적 구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손씨의 통보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로 손씨의 통보를 기각시키려고 하였다.

손씨는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모든 근거들을 심의할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헌법재판

소(2면에서 계속)

조용환변호사 동티모르 국제회의 참가위해 출국

조용환 변호사는 5월 29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법률가회의'(International Platform of Jurists for East Timor)에 참가하기 위해 28일 오후 출국한다.

▶ 두밀분교 후원회원 모집 ◀

◆티셔츠 판매를 통한 후원회원 모집◆

- 종 류 : 성인용, 아동용(Large, Small)
- 가 격 : 6천원(소포우송료 포함)
- 대 금 : 티셔츠를 받은 후 송금
- 주문처 : (477-800)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33번지 장호순
- 계좌번호 : 179-01-155018 예금주 장호순
- 문 의 : 0356-82-8615(팩스번호도 동일)

경제논리에 밀려 폐교된 두밀분교 폐교철회운동에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두밀분교 25명의 어린이에게 힘이 됩니다.

◆ 행사 안내 ◆

□김의기열사 14주기 추모제

- 일시 : 5월 29일(일) 오후 1시경
- 장소 : 금촌 기독교 공원묘지
- 출발 : 서강대 정문 오전10시, 금촌역 1시
- 주최 : 서강대 민주동문회, 서강대 총학생회(705-8260)

□전교조 결성 5주년 기념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

- 일시 : 5월 29일(일) 오후 1시
- 장소 : 동국대 대운동장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등 문화예술계 성명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대법원이 황석영씨 상고심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국가기밀누설혐의를 파기환송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기숙 외 3인)등은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의 판결은 과거 군사정권치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공안검찰의 냉정한 시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국민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변화와 개혁을 무시하고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 사항이더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

한 자료가 되고, 국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연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온당한 판결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민가협, 한총련 출범식 참가

「민중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회원 10여명은 27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 참가, 망월동묘역 참배등을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28일에는 서울로 상경하면서 대전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해고·원진노동자, 한국자보 문제 해결 촉구 각계인사 54명

해고노동자 복직 및 원진레이온, 한국자보문제 등 당면 노동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54인의 기자회견이 27일 오전11시 프레스센터에서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윤공회, 강원릉, 박형규씨등 54인은 이미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노동자들의 즉각 복직과 정부출연·투자기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14명의 전원 원상복직, 수배해제 및 제2국민역 편입 △노동조합활동 관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정부투자기관 재취업보장 △한국자보 사태의 올바른 해결 등을 요구했다.

제2기 모니터교육 5월 31일-6월 23일

「한국여성민우회」의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위원장 유영생)에서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2기 필리핀에서 열리는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법률가회의'(International Platform of Jurists for East Timor)에 참가하기 위해 28일 오후 출국한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

「서순택씨를 구원하는 회」(대표 사사키 히데노리 국회의원)는 서순택씨를 비롯한 재일한국인정치범 7명, 일본관련 정치범 13명

등 한국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1천4백 명의 서명을 받아 27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1면에서 계속)

판소가 그 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근거들을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같은 문제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90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 결정시 다수의견이 표현의 자유의 권리에 대해 비록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소수의견으로 2명의 동의와 한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의 침해를 포함한 노동쟁의조정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이미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의 주장을 B규약의 정신과 법에 따라 심의한 인권이사회는 '헌법재판소가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을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심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B규약 선택의정서 5조 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적 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인권이사회는 제소자가 체포, 기소 및 유죄판결 받은 것이 진행중인 파업을 물리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두로 지원 의사표현을 한 회의에 참가한 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제소가 B규약 제 19조에 의거하여 허용되고 심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침해' 결론 날 것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담당해온 조용환 변호사는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검토한 후 향후의 대응방법을 모색할 계획인데 사안 자체가 너무도 명백한 것이어서 B규약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최종판결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말도 안되는 3자 개입금지 조항을 남용해온 검찰과 이것이 합헌적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등 많은 법원관계자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보 과정과 결과에 따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인권이사회가 손씨 사건이 B규약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최종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제법 준수할 법적·정치적 의무

인권이사회는 B규약과 B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우리나라에 법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B규약의 경우 인권이사회가 인권침해가 있는지를 판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정부나 법원이 인권이사회에 대한 B규약의 조항들을 해석, 적용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6조 규정상 비준·공포된 조약은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며 국내법을 이유로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손종규씨의 통보는 위헌적인 법률에 의한 인권침해가 만연되어 있는 국내현실과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터무니 없이 미달된 국내의 인권관련 제반법규를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현재 손종규씨 사건 이외에도 89년 전민련 결성식에서 결의문등을 낭독, 배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근태씨 사건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되어 있다.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두밀분교학생 마을회관 자체교육 계속하기로

두밀리주민 교육장등 면담 한밤중 전화등 중지요구

학부모회의 폐교철회활동 재정·후원 조직방침

「두밀분교 폐교철회 추진위원회」(대표 신홍균, 폐교철회 추진위원회)는 두밀리 주민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0일 오전 11시30분경부터 오후 2시까지 가평군 교육청과 가평군청 앞에서 시위 및 집회를 갖고 최근 가평군 교육청과 각행정기관에서 벌이는 두밀리 주민에 대한 몇가지 압력에 대해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두밀분교학생 학부모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교철회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마을회관에서 계속 학생들을 자체교육하기로 했다.

폐교철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조동현 가평군교육장, 홍성규 가평군수등과 면담을 가졌다. 폐교철회 추진위원회는 조교육장과의 면담에서 28일의 학부모회의 결과를 통지하고 △농사일로 피곤한 두밀리주민들에게 한밤중 전화하지 말 것 △현재 등교하고 있는 4명에 대해 가방을 사주는 등의 비교육적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또 폐교철회 추진위원회는 △학생들의 신체검사, 학력평가 등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할 뜻을 밝히고, 두밀분교 학생들

이 현재 폐쇄되어 있는 두밀분교 운동장을 교육적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홍가평군수를 만나 신홍균 두밀리이장에게 「마을동향보고」등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두밀리주민들은 폐교철회활동의 어려움으로 마을돈을 사용해왔던 재정이 바닥나 티셔츠판매를 통한 후원회를 조직하여 홍보활동을 겸하기로 했다. 또 「농번기에 학생들을 가르칠 자원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폐교철회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두밀분교 폐교처분이후 폐교처분의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공문등을 통해 요구했으나 교육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도 교육위원회 조례에 의한 것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밀분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교사수, 학교시설 등 여러분야에서 특별히 지원받도록 되어있는 학교였다.

한국자보노조 단식농성 일시중지 노사대화 제의

지난 해 12월 1일부터 31일 현재 1백82일째 40여명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자보노조」의 「노조사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호 한국자보노조위원장)는 28일부로 노사협상을 위해 4월22일부터 벌여온 37일간의 단식농성을 일시중단했다. 노조집행부 인정과 노조의 원상회복,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장치마련등을 요구하는 노조사수비상대책위는 31일까지 협상시한을 두고 한국자보측과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성과가 없을 경우 6월1일부터 목숨을 건 3차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그룹 산하 한국자보 사건은 93년 2월경 회사측이 노조탈퇴강요에 이어 그해 5월부터 행해진 간부사원 1백7명 부당징직, 퇴직강요, 부당행위 등 계속 노조간부 감금, 폭행, 임금 미지급 등 한국자보측의 노조와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노조파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일어난 국회돈봉투사건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알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5월 30일자로 이전했습니다. 주소 : (100-022)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3층 전화 : 777-0643 / 팩스 : 775-626

◆ 공 판 안 내 ◆

- 5월 31일(화)
 - 상춘식의 3, 특경가법, 2시, 313호, 3회
 - 이완순, 국가보안법, 10시, 421호, 1회
- 6월 1일(수)
 - 이순심, 살인등,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 임현숙,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선고
 - 백형록, 국가보안법, 10시 30분, 321호, 1회
- 6월 2일(목)
 - 이성우, 국가보안법, 10시, 425호, 2회
- 6월 3일(금)
 - 이우형, 군무이탈, 9시 30분, 성남지원 1호법정, 선고
 - 정용화, 업무방해등, 10시, 422호, 속행
 - 박상현, 국가보안법, 2시 30분, 313호, 1회
 - 조용찬, 국가보안법, 10시, 317호, 3회
 -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1시, 418호, 속행
 - 마광수의 1, 음란한 문서제조등, 2시, 418호, 속행

노동부 '해고자 복직위해 노력' 발표 전해투 '환영, 성의껏 노력해서 정치의도 불식하길'

노동부는 지난 28일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일부 사용자들이 법원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처리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이 미비함을 악용해 고의로 복직을 미루는 사례가 많음을 중시, 해당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반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복직문제가 해결되도록 행정지도도 펴고,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지원을 받아 해고노동자들의 조기복직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해투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의 행정지도등에 의한 해고노동자

원상회복노력을 환영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발표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입투에서 해고자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못하도록 미리 길을 뚫는 듯한 인상이다. 이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노동부가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교협등 22개 단체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탄원서 제출

지난 7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30일 현재

◆ 단체간행물 ◆

- 여성정책연구소(계간-통권2호)-여성정책연구소(부산)
 - 여성정책토론회 보고서 및 참관기/여성이 알아야 할 정치상식등
- 녹색고통(94년 5월, 제6호)-녹색고통운동
 - 주요내용 : 리플제도 더 미물 이유없다(박선희)/전철은 장애인에게 금단의 땅인가-전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보고/보행자 권리회복 늦출 수 없다-보행자 의식 설문조사 보고서(☎ 874-0813)
- 당직변호사제도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 당직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 성폭력과 여성장애인의 인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자료집
 - 주요내용 : 성폭력과 여성장애인(신혜수)/시설내 성폭력에 대하여(이진복)/지역사회와 여성의 대응과정 및 성과(남정현)/부록-복지시설의 성폭행 백서등
- 양심수 후원회(통권 31호)-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 주요내용 : 제6차 총회보고 및 새일꾼 소개/출소 장기수를 찾아서-왕영안 선생님/드디어 되찾은 우리의 생일, 노동절(김용도)/양심수 가족을 찾아서-신인영 선생님 어머니 고봉희님등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등 22개 단체에서 제출했다. 또한 병역특례해고노동자 13명의 전원 원상회복과 수배해제등을 요구하는 서명에 사회각계인사 4백76명이 참여했다고 「전해투」의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밝혔다. 5월 31일 현재 전해투에서 주장하는 병역특례해고노동자는 모두 13명으로 소속회사는 대우정밀과 풍산금속이다. 대우정밀 : 황용범, 조수원, 황철이, 염성호, 이철수, 조성민, 신이철, 박정수, 문성철, 박승룡 풍산금속 : 김성철, 허대규, 황길동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또 "검찰을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12·12사태등에 대한 수사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오도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새롭게 정립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창립5주년 교사대회 5% 교육재정 확보등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29일 오후1시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전국의 초중고교사 1만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결성 5주년 기념 교육개혁을 위한 전교조 합법화 및 GNP대비 5%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했다.

대한변협 12·12, 5·18 신속수사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등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상대로 낸 「12·12사태」 관련 고소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소·고발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검찰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능장을 부림으로써 실제적 진실규명을 포기하고 검찰권 행사를

▶ 두밀분교 후원회원 모집 ◀

◆티셔츠 판매를 통한 후원회원 모집◆

- 종 류 : 성인용, 아동용(Large, Small)
- 가 격 : 6천원(소포우송료 포함)
- 대 금 : 티셔츠를 받은 후 송금
- 주문처 : (477-800)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33번지 장호순
- 계좌번호 : 179-01-155018 예금주 장호순
- 문 의 : 0356-82-8615(팩스번호도 동일)

경제논리에 밀려 폐교된 두밀분교 폐교철회운동에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두밀분교 25명의 어린이에게 힘이 됩니다.